

제428회 국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8월19일(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
가. 기획재정부
나. 한국은행
2.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가. 기획재정부 소관
나. 국세청 소관
다. 관세청 소관
라. 조달청 소관
마. 통계청 소관
3.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가. 기획재정부 소관

상정된 안건

1. 업무보고 2
가. 기획재정부
나. 한국은행
2.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15
가. 기획재정부 소관
나. 국세청 소관
다. 관세청 소관
라. 조달청 소관
마. 통계청 소관
3.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15
가. 기획재정부 소관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임이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업무보고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처에 대한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후 결산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를 들은 다음에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결산에 대한 대체토론을 일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형일 기획재정부제1차관은 국무총리 주재 회의 참석을 사유로 오전 회의 불출석 요청이 있어서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양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형일 제1차관은 오후 회의부터 출석 예정이니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서 생중계 예정이라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 사보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8월 18일 자로 우리 위원회의 윤호중 위원님이 사임하시고 이소영 위원님이 보임되었습니다.

이소영 위원님 인사말씀부터 듣고……

박민규 위원님은 오후에 참석하시는 거지요?

○**김영진 위원** 오후에……

○**위원장 임이자** 오후에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영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의왕시과천시가 지역구인 이소영 위원입니다.

저는 초선 때부터 3년 넘게 국토위에서 일했는데 최근에 보건복지위를 거쳐서 이렇게 기재위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위원회는 가장 종합적인 국정을 다루는 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훌륭한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부처·기관 관계자분들께 많이 배우면서 균형 있고 합리적인 경제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부족하지만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1. 업무보고

가. 기획재정부

나. 한국은행

(10시10분)

○**위원장 임이자**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대한 업무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구윤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재정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다.

최근 우리 경제는 그간 국민과 기업, 국회와 정부가 온 힘을 합쳐 노력한 결과 2024년 2분기 이후 지속된 부진 흐름이 반전되고 올 하반기에는 소비심리 개선과 추경 등 정책 효과로 상반기 대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 곳곳에는 불확실성이 여전합니다. 미 관세부와 주요국 통상갈등 등으로 성장·교역 둔화가 우려되며 불안정한 먹거리 물가 등으로 서민의 삶은 아직도 어렵습니다. 단기적으로 경기회복과 민생안정, 대외 불확실성 관리와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AI 등 급변하는 기술 패러다임에 맞추어 초혁신경제로 본격 전환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도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첫째로, 우리 경제를 최단기 내에 초혁신경제로 완전히 탈바꿈하고 활력을 불어넣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글로벌 1등 경제로 도약시킬 수 있는 초혁신기술 아이템을 선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반드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공공·국민 전 분야에 걸쳐 AI 대전환을 위하여 정부가 할 수 있는 자원, 인력, 규제완화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글로벌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와 과도한 경제형별도 합리화하겠습니다.

둘째, 민생안정에 힘쓰겠습니다.

추경의 신속한 집행, 소비 이어달리기 등을 통해 지역 중심으로 소비·건설 경기를 보강하여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높은 생활물가 등 국민이 체감하는 주요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고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금융·핵심비용 경감 등 당면한 어려움 해소와 소비기반 확충 등 매출기반 확대 지원을 병행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최저생계 보호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대외경제 및 대외신인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미국의 관세협상 관련 후속 협의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관세로 인한 피해 지원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안보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국익중심의 실용외교를 통해 글로벌 환경 변화에도 대응하겠습니다. 최근 변동성이 확대된 외환시장 및 국가신용등급의 안정적 관리에도 힘쓰겠습니다.

넷째, 재정운용 기조를 성과 중심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저성과 부문을 과감히 구조조정하고 성과가 높은 부문에 국가재정을 집중 투입함으로써 국정과제를 완수하고 초혁신경제 실현을 뒷받침하는 성장과 회복의 마중물로 삼겠습니다. 공공기관에서도 국가전략 어젠다 실현을 위한 핵심 과제를 선정하고 과제별 중점 공공기관을 통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을 경감하며 과세체계를 합리화하는 세제개편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경제가 진짜 성장을 달성하고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의 협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획재정부는 향후 예정된 예결산과 세법 등 법안 심사 과정에서 국회의 목소리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고견을 듣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그 과정에서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업무 현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차관은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후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2차관 임기근 차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진명입니다.

차관보는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 언론 브리핑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관 안상열 차관보입니다.

그리고 세제실장 박금철 실장입니다.

국장들 중에서 일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유수영 국장입니다.

(인사)

국장들은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님, 1급 위주로만 소개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이자 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1급들 중심으로, 국장들은 참석한 국장도 있고 참석 안 한 국장도 있고 이래 가지고요.

○위원장 임이자 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러면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그러면 김진명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세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 김진명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기재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기획재정부 일반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2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실장님, 아까 부총리께서 이쪽으로 나오셨으니까 실장님은 이쪽으로 나오세요. 야당을 보고 얘기를 하셔야 돼.

○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 김진명 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최근 경제여건과 정책방향입니다.

대외 여건은 미국발 관세 충격 등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으며 글로벌 성장과 교역 둔화가 예상됩니다. 최근 변동성이 일부 완화되기는 하였으나 국제금융·원자재 시장 불확실성은 여전하며 관세 부과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가능성 등으로 미국 등 글로벌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확대되었습니다.

대내적으로 우리 경제는 그간의 부진 흐름에서 점차 벗어나는 모습입니다.

24년 2분기 이후 지속된 부진 흐름이 반전되고 올 하반기는 소비심리 개선과 추경 등 정책 효과로 상반기 대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대미 관세협상 타결로 하방 리스크가 상당폭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도체·의약품 관세, 주요국 통상갈등 가능성 등이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금융·외환시장은 미국 관세·금리 경로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비자물가는 안정적인 수준이나 먹거리 물가 등이 높고 이상기후와 국제유가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이 상존해 있습니다.

이를 고려할 때 당면한 경기·민생회복 및 대외 불확실성 대응에 만전을 기하면서 중장

기적으로 초혁신경제 전환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3쪽,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첫째 과제로 초혁신경제 전환 및 경제활력 제고입니다.

우리 경제의 쿼텀점프를 위해 기업·공공·국민 전 분야에 걸쳐 AI 대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강점인 제조업에 AI를 접목하여 퍼지컬 AI 개발·상용화를 촉진하고 공공 행정 전반에 AI를 도입하여 공공서비스를 혁신하겠습니다. 또한 AI 인재를 양성하고 AI 컴퓨팅 인프라 거버넌스를 마련하는 등 예산, 세제, 금융, 규제 등 AI 토털 패키지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제규제를 합리화하겠습니다.

글로벌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와 과도한 경제 형벌을 합리화하겠습니다.

신산업 분야와 기업 규모별 규제 개선을 통해 기업 활동 및 성장을 지원하고 형사처벌 위주의 제재를 금전벌 등으로 전환하는 등 1년 내 전 부처 경제 형벌의 30%를 정비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내수경제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추경을 신속 집행하고 매월 관광·소비행사를 개최하는 등 소비 이어달리기를 통해 소비 회복 모멘텀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겠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소비 회복이 더딘 지방 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을 우대하는 소비 인센티브를 두겠습니다.

지방 중심으로 건설경기도 보강하겠습니다.

지방 주택에 대한 세 부담 완화, 공공매입 확대 등을 통해 위축된 지방 주택 수요를 보강하고 예타 기준 상향 등을 통해 SOC 등 공공공사도 신속 추진하겠습니다. AI 기술 도입, 인력 수급 안정화 등을 통해 공사비 부담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5쪽입니다.

둘째는 민생안정 과제입니다.

우선 먹거리, 에너지, 주거·통신 등 주요 생계비 부담 완화에 힘쓰겠습니다. 농축수산물 수급 조절, 할인 지원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여 먹거리 물가를 안정시키고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연장하겠습니다. 다자녀가구 등에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통신 요금제에 데이터안심옵션도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도 폭넓게 지원하겠습니다.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 및 저소득 차주 채무조정 등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택배·배달비·공과금 등 핵심 비용에 대한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숙박쿠폰 발급 등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기반 확대 지원 또한 병행하겠습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APEC 정상회의 계기로 관광객을 집중 유치하는 등 지방 소비를 집중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여성·중고령층에 대해 구직활동 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 단계적 정년

연장 등 맞춤형 대책을 통해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지원하고 기준중위소득 인상, 생계급여 제도개선을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대상을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최저생계 보호 또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셋째 과제는 대외경제 및 대외신인도 관리입니다.

관세 인하 조치 등의 합의를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내 기업이 직면할 가능성이 있었던 최악의 시나리오는 회피하였습니다. 정부는 이에 안주하지 않고 향후 미국 측과 세부 내용 협의 시 국익 최우선 원칙하에서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기업의 사업 기회가 극대화되도록 사업 선정 방식 등을 꼼꼼히 검토하고 우리 제조 역량을 토대로 미국 측이 관심을 가질 만한 협력 분야를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대내적으로는 업종별 영향 분석을 토대로 관세 피해 기업 지원, 근본적 산업경쟁력 강화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가칭 경제안보 점검회의, 공급망안정화위원회 등 민관이 참여하는 회의체를 통해 경제안보, 공급망 이슈에 적극 대응하는 등 경제안보 조정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국익 중심 실용외교 기조하에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하겠습니다.

최근 변화된 통상환경에 맞추어 신대외경제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정상외교, 고위급 교류 등을 통해 경협 관계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방산 등 초대형 수주 뒷받침을 위해 수출금융 기능을 강화하고 전략적 개발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APEC 재무장관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고 북한 비핵화 여건 조성을 위한 양자·다자 국제협력도 추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환율 및 대외신인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근 변동성이 확대된 외환시장에 대해 24시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적기 시장안정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연례협의, 고위급 면담, 한국경제설명회 등을 통해 한국 경제의 건조한 대외건전성 등 강점에 대해 충실하게 설명하고 역대 최고 수준인 우리 국가신용등급 또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해 외환거래, 주식투자제도, 시장 인프라 전 영역을 점검하고 편입을 위한 로드맵을 금년 내 마련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넷째 과제로 성과 중심 재정 운용 및 공공기관 혁신입니다.

성과가 낮은 사업에 대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성과가 높은 부분에 국가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하는 성과 중심 재정 기조로 전환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속도·민간참여 촉진에 중점을 두고 재정제도를 혁신하겠습니다. R&D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예타 대상 및 평가 체계를 개편하고 재정사업 평가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는 등 환류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제도개선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첨단 분야 혁신기업 성장 등을 위한 체계적 조달 체계를 구축하며

국유재산을 공공주택 및 청년 창업공간으로 활용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국가전략 어젠다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 과제를 선정하고 과제별 중점 공공기관을 선정하는 한편 공공기관 간 협업 체계를 통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인력, 투자, 경영평가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공공정책 추진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이 AI 시장 개척에 핵심 역할을 수행하도록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산하에 AI활용소위, AI서포터즈 등을 구성하는 등 공공기관 AI 활용을 확산하고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 마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편 등으로 미래 대응 역량도 강화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다섯째 과제는 공평·효율적인 세제개편입니다.

AI 등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개편 등을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지원 확대 및 지방이전기업 세액감면 기간 연장을 통해 지역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 학원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지역사랑상품권 세제 지원 등을 통해 민생안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입 기반 확충 및 과세 체계 합리화 또한 병행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대비를 위한 과제입니다.

저출생·고령화 및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출산·양육 부담 완화, 고령층 고용 활성화 등 출산율 반전의 확실한 모멘텀을 형성하고 초고령사회의 진입에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당면한 인구 변화 대응을 위한 전략 마련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온실가스 감축 강화 및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보다 강화된 2035 목표를 수립하고 RE100 실현 등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의 전환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입니다.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한국은행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고 고견을 경청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보고에서는 최근의 경제 상황과 통화신용정책 운영과 관련한 핵심 현안을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제는 금년 초까지 성장세가 부진하였으나 2/4분기 들어 경제심리 개선 등으로 성장률이 반등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추경 집행 등으로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중국 등 주요국과 미국의 무역협상 전개 과정, 내수 회복 속도 등과 관련한 성장 경로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물가 측면에서는 기상 여건 악화로 농축수산물의 가격이 다소 불안한 모습을 나타낼 수 있으나 국제유가의 안정세, 낮은 수요 압력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 내외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 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국내 금융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나 지방 건설·부동산의 경기 부진, 자영업자 등 취약차주의 채무상환 부담 누증 등으로 대출 연체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과열 양상을 보였던 수도권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증가세는 6·27 대책 이후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높은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 추세적인 안정 여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할 상황입니다.

아울러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 후반에서 상당 폭 등락하는 등 높은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난해 10월 이후 기준금리를 네 차례에 걸쳐서 100bp 인하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가계부채와 환율 등의 리스크를 함께 점검하면서 금리인하의 속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향후 통화정책 운용과 관련해서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만큼 경기와 물가,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정책 방향을 결정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한국은행은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큰 취약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중개대출 금리를 2%에서 1%로 낮추었으며 지난해 도입한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프로그램의 한도를 확대하고 기간도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높은 대내외 불확실성하에서 정부와의 공조를 통해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을 적극 도모하고 있으며 양방향 유동성 조정체계 전환, 무위험지표금리의 정착 및 확산 추진, 자금조정대출 제도 개편 등 통화정책 운영의 유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제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대비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미래 디지털 지급수단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저출산·고령화, 수도권 인구 집중, 기후변화 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계속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중립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정책 대안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한국은행의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립니다.

보고를 이어 가기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집행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상대 부총재입니다.

김웅 부총재보입니다.

채병득 부총재보입니다.

권민수 부총재보입니다.

박종우 부총재보입니다.

(인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어서 채병득 부총재보가 핵심 현안 등 주요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채병득 부총재보 나오셔서 상세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부총재보 채병득** 부총재보 채병득입니다.

한국은행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조직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핵심 현안, 기타 주요업무 추진현황 등 핵심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현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 현 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 부분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는 미 관세정책 불확실성 속에서도 2/4분기 성장률이 플러스로 반등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가상승률은 목표 수준인 2% 근방에서 안정세를 지속할 전망입니다.

12쪽, 통화신용정책 운용 현황 부분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은 경기 하방압력 증대에 대응하여 지난해 10월 이후 기준금리를 네 차례에 걸쳐 3.5%에서 2.5%로 1%p 인하하고 취약 부문에 대한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15쪽, 금융·외환시장 안정 도모 부분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선제적인 시장 안정화 조치 시행 등을 통해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적극 도모하였습니다. 최근 금융·외환시장은 이러한 시장 안정 노력과 함께 미국과 주요국 간 관세협상 진전,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 등에 힘입어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7쪽, 금융시스템 안정 노력 부분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금융시스템은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이나 취약 부문 리스크가 잠재해 있는 가운데 부동산 가격 상승 등에 따른 금융 불균형 누증에 대한 우려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은 금융시스템 내 리스크 요인을 사전에 포착하고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정책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쪽,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부분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디지털금융 혁신 측면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법화인 원화 가치에 직접 기반하는 화폐 대응재이므로 외환규제, 금융산업구조, 통화정책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전판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은행이 수행하고 있는 기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5쪽, 구조개혁 관련 조사연구 부분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강화를 위해 경제구조 개혁 방안과 관련한 다수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저출생·고령화 대응, 지역균형발전, 신산업 육성과 생산성 제고 등의 측면에서 정책 방향을 제시해 왔으며 앞으로도 핵심 과제들을 연구하면서 이를 사회적 담론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27쪽, 지역경제 현안 조사연구 및 지역본부 역할 제고 부분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수행 및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 제시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지역 오피니언리더와의 협력관계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기후변화 대응 부분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 리스크 분석, 기후 대응 정책 제언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디지털화폐 연구 현황 및 향후 계획 부분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대응하여 디지털화폐 기반의 미래 디지털화폐 인프라 구축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31쪽, 외환보유액의 안정적 운용 및 공적 책임성 강화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성 및 유동성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외환보유액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금융기관 활용 및 ESG 투자를 통해 공적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임이자 박수영 위원님.

○박수영 위원 오늘 사실 한은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나 디지털화폐에 관해서 상세한 보고를 받기로 했었는데 지금 아주 간략한 보고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코인하고 디지털화폐에 관해서는 조금 더 상세한 보고가 있으면 우리 논의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지금 박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에 관해서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따 업무보고 끝난 후에…… 지금 끝났잖아요. 그러면 질의응답 시간에 좀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김태년 위원 날을 한번 따로 잡지요, 그것은.

○위원장 임이자 예?

○김태년 위원 날을 한번 따로 잡아.

○위원장 임이자 아니,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양쪽, 양당 간사님들께 제가 이미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따로 날 잡아서, 우리 전체회의에서 토론할 수 있도록 날을 잡기로 말씀드렸는데, 따로 날 잡아서……

○권영세 위원 원래 오늘 잡은 건데……

○김영진 위원 언제 날 잡아. 오늘 잡고서 그냥 한 20분 정도 들으면 될 것 같은데요.

○정일영 위원 오늘 업무보고부터 죽 받고 질의하고 합시다, 예정대로.

○위원장 임이자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박수영 위원 일단 기본적인 건 좀 보고를 전부 다……

○권영세 위원 너무 주마간산 격으로 지나갔어요.

○박수영 위원 주마간산이 되면 별 의미 없어.

○위원장 임이자 그러면 지금……

정태호 간사님, 괜찮으시겠어요?

○정태호 위원 아니, 뭐 준비가 돼 있으면 지금 할 수 있는 거고.

○위원장 임이자 그러면 한국은행 쪽에서는 지금 박수영 간사님께서 요청하신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 그다음 디지털화폐에 대해서 지금 더 상세 보고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나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제가 그러면 한 10분 정도, 한 5~10분 정도 그러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위원장 임이자 총재님께서 직접 하시겠어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자료는 따로 준비해 놓은 게 없나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아니요, 업무현황에 지금 20쪽, 21쪽 되어 있는 것을 기초로 제가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그러면 20쪽부터……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21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그러면 총재님, 그 자리에서 그냥 설명하시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아닙니다. 저기 서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그 자리에서 하셔도 됩니다, 건강도 안 좋으신데.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우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가 되고 있는데 핵심적인 이슈는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슈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이렇게 확산되고 있을 때 우리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기 위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필요한지 이런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데 있어서 이 주체가 누가 돼야 되는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중심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비은행 중심으로 가야 될지, 거기에는 금융시장의 안정성이라는 면도 있고 비은행기관이 주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견해에서는 비은행금융기관이 해야 여러 가지 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이렇게 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됐을 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해외와 달리 아직 자본 자유화를 허용하고 있지 않고 여러 가지 금융산업 구조상에 있어서 금산분리라든지 다른 나라에 없는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제도와 어떻게 해서 규제를 통해서, 규제를 어떻게 할지, 이런 규제를 적절히 하는 것이 어떤 건지 하는 이슈가 있고 특히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이런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됐을 때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의 효율성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이게 큰 틀에서의 지금 이슈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우선 한국은행의 경우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먼 미래의 우리가 지금 전 세계 화폐가 디지털라이즈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화폐에 프로그램 기능을 집어넣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프로그램 기능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현재도 우리 금융기관의 화폐에는 사실 은행과 한국은행 간의 화폐 움직임은 다 이미 디지털라이즈가 되어 있습니다. 돈이 움직이지 않고 사실 디지털로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뭐가 필요하냐면 거기에 계약을 집어넣을 수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 기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수출하는 업체가 배에다 선적을 해서 LA까지 가고 또 물류가 가고 있는데 실제로 수입업자하고 수출업자 간에 돈을 지급하려고 그러면 LA에 도착해서 통관 다 하고 그다음에 은행한테 얘기해서 지급하게 하고 이런 것이 다 필요한데 지금 가상적으로 말씀드리면 배가 떠나서 태평양 지나가는 순간 돈은 반을 집어넣어라, 반을 입금해라 이런 식으로 계약을 다 할 수 있고 부동산 거래나 이런 모든 거래에 있어서 이런 계약조건을 집어넣어서 돈을 이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집어넣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미래의 화폐에서는 이렇게 컨트랙트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집어넣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하고 디지털라이즈할 때 프로그램을 집어넣는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이것의 발행 주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고민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비은행금융기관이 이것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은, 현재 우리가 DLT라고 하지요 분산형으로 된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게 되면 모든 정보가 다 기록되기 때문에 한국은행이나 예탁원이나 기재부나 감독기관이 없더라도 이 프로그램 기능을 통해서, DLT 기능을 통해서 모든 히스토리가 기록되기 때문에 더 투명하게 규제도 할 수 있고 감독도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비은행 민간기관한테 맡기고 거기서 이런 혁신이 일어나게끔 허용해서 비은행금융기관이 발행을 하게끔 해 달라 이런 요구입니다. 발행은 저희도 동감한다고 했는데요.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한두 가지 문제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네트워크가 있고 DLT라는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인포메이션을 다 할 수 있지만 굉장히 작은 업체까지 이것을 다 허용하게 되면 사실은 이런 테크놀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안 할 인센티브가 굉장히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본금이 굉장히 낮은 기업한테까지 이것을 허용한다고 그러면 누가 가서 일부 돈을 주면서 내가 돈 세탁을 하게끔 도와 달라 이렇게 하면 빠질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일정 규모가 큰 기업이 아니면 이 돈을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업체들이 난무할, 굉장히 많아질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고 불확실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업체가 굉장히 큰 기업들 중심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그래서 KYC라든지 돈세탁 문제를 방지할 수 있고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할 수 있는 미니멈 사이즈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일에 정말 큰, 사이즈가 크면서도 비은행을 허용할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비은행을 허용하면 우리나라는 아직 금산분리라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사실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게 허용한다는 것은 예전부터 우리가 논의했던 내로우 뱅킹(Narrow Banking)이라고 지급결제은행의 설립을 허용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우리가 지급결제은행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이 은행산업 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컸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증권사라든지 보험사라든지 이런 데가 지급결제 업무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고객의 예금이 그다음에 은행들이 할 일을 보험사, 증권사, 다른 비은행 등이 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특히 다른 나라에 비하면 독과점이 큰 이런 구조에서는 지배력을 활성화할 수도 있고 또 은행의 예금이 줄어들면서 은행의 수익성이 나빠지면 은행 중심으로 저희가 움직여 왔던 산업구

조가 어떻게 바뀔지 이런 문제도 같이 고려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고요,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자본자유화인데 보통 제가 이것을 주장하는 많은 교수님과 전문가들과 상의를 해 봤는데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서 무엇을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사용 요인인데 많은 분들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면 그것이 우리의 케이팝 굿즈라든지 여러 가지 NFT라든지 여러 가지 가상자산을 우리가 만들었을 때 해외 사람들이 그것에 직접 투자도 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국제화되고 수요도 늘어나고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우리나라 시장을 침투하는 데도 막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의 생각에는 뭘 걱정하냐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사는 것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국인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바깥 시장에서 살 경우 어떻게 하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사람들이 사서 그것을 국내 네트워크에다 안 집어넣고 해외 네트워크, 바이낸스라든지 해외에 있는 기관에 돈을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달리 표현하면 우리나라의 원화 예금을 해외에 갖고 있게 됩니다. 이것은 그동안 저희가 몇십 년 동안 자본자유화에서 계속 걱정했던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돈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위험이라든지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내 재산의 몇 분의 1을 해외에 갖다 놓고 싶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지금까지는 연 10억 정도의 한도에서…… 10만 불 한도에서, 죄송합니다, 잘못 말씀드려서. 연 10만 불 정도 한도에서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나가게 했는데 그것도 달러로 바뀌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어서 그것을 해외에 직접 유출할 수 있게 해 주면 물론 규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사실 규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했을 경우에 자본자유화를 완전히 피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다음에 통화정책 면에 있어서는 비은행금융기관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면 기본적으로는 발행 총량을 규제하더라도 통화량을 늘리는 것은 막을 수 있지만 저희가 경제 상황에 따라서 통화량을 줄이고 싶을 때 사실은 은행들은 지급준비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하기가 쉬운데 비은행금융기관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면 통화량을 줄이기 위해서 ‘너 국채 담보 잡고 있는 것을 갑자기 다 팔아라’ 이렇게 했을 경우에 시장에 주는 충격도 굉장히 클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통화정책에 있어서 유효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이런 화폐의 디지털화를 위해서 이것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 가지 이런 부작용이 있을 때 이것을 좀 체계적으로 천천히 가면서 먼저 은행 중심으로 발행을 하고 거기서 부작용을 컨트롤할 수 있는 레굴레이션(regulation)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보고 그다음에 우리 은행들이 바깥에서, 퍼블릭 블록체인이라고 하는데 개방형 블록체인에서 또 한번 발행하는 것도 봐서 부작용을 컨트롤하고 정말 필요하다면 비은행도 허용하는 이런 점진적인 어프로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생각이 좀 다른 것이 스테이블코인의 사용

이 주로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나면 가상자산이 있으면 그 가상자산을 거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는 가상자산법에서 가상자산을 전혀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사용이라고 하면 환전이라든지 해외에 돈을 송금한다든지 해외로 돈을 가지고 나가기 위한 그런 필요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은행을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부작용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가상자산법을 통해서 가상자산이 육성되고 거기서 스테이블코인을 쓰는 것을 보고서 하더라도, 천천히 하더라도 이노베이션이나 이런 것의 큰 부작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지는 않았지만 한강 프로젝트라는 것을 1년 반 전부터 저희들이 하고 있었는데 그 한강 프로젝트가 바로 한국은행이 관장하는 네트워크 내에서 은행들을 중심으로 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던 중에 지금 스테이블코인 논의가 사회적인 논의가 됨으로써 이게 지금 더 빠르게 움직여야 될 그럴 상황인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 기능을 볼 때 미래를 위해 대비해서 필요하다. 그렇지만 그 필요한 것을 조금 점진적으로 은행 중심으로 간 다음에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지금 전체 있는 스테이블코인의 90%, 95%, 99%가 전부 달러 스테이블코인입니다. 그래서 달러화에 대한 스테이블코인은 수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달러를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반면에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어 주면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희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원화가 있을 때 달러 수요가 있는 것은 환율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해외에 돈을 얼마나 가지고 나가고 싶을 것인지 이런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데 달리 얘기하면 이것을 디지털화를 했다고 해서 생긴 것이 달러 스테이블코인과 원화 스테이블코인인데 이걸 만들어 준다고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대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우에도 역시 달러가 절상될 것인지 그런 움직임에 의해서 결정될 거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것을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방어를 하자라는 것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반드시 맞는 것이 아닌 면이 있기 때문에 국내 가상자산 발전을 통해서 발전이 얼마나 되는지 보면서 그것의 지급수단으로 쓰이는 스테이블코인은 시간을 가지고 점차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한국은행의 공식 견해입니다.

자세한 것은 한번 따로, 날짜를 더 길게 주시면, 긴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기술적인 면이라든지 자세한 내용은 더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견해는 정책 당국 그리고 또 한국은행이라는 곳은 보수적인 입장에서 안정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견해를 반영한 것이고요. 반대쪽으로 비은행을 허용해야 된다는 많은 분들은 기술혁신 이런 것들 많이 하는데 저희는 이것이 논쟁은 가능하지만 사실 저희가 생각할 때 안정성, 비은행이 발행할 때에 비해서 은행들이 발행할 때의 안정성이라는 장점은 분명한 반면에 비은행기관이 발행하면 여러 가지 이노베이션이 있을 거다라는 것은 아직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보면서 천천히 확장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충분하셨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 질의응답하시면서 하시지요.

○위원장 임이자 더 궁금한 사항은 질의응답을 통해서 해 주시고요. 더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는 양당 간사 간의 의견을 물어서 추후에 다시 날을 잡아서 할지는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이후에 대체토론과 일괄하여 실시하겠습니다.

2.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가. 기획재정부 소관

나. 국세청 소관

다. 관세청 소관

라. 조달청 소관

마. 통계청 소관

3.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가. 기획재정부 소관

(10시51분)

○위원장 임이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윤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기획재정부 소관 2024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재무제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입니다.

먼저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총세입 규모는 427조 7197억 원으로 예산현액 440조 8102억 원보다 13조 905억 원 적게 수납되었으며 일반회계 총세출 규모는 28조 1505억 원으로 예산현액 31조 199억 원 대비 2조 8694억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예산 미집행액은 예비비 불용 등 총 2조 8672억 원 불용과 다음 연도 이월 21억 원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 규모는 12조 9023억 원으로 예산현액 13조 422억 원보다 1399억 원 적게 수납되었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 규모는 계정 간 전출금으로 2039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부 소관 기금 결산입니다.

먼저 공공자금관리기금은 국채 발행, 예탁원리금 회수 등으로 327조 4110억 원을 조달하여 타 회계·기금 예탁 및 원리금 상환 등에 운용하였습니다.

국유재산관리기금은 토지 및 건물 매각, 대부료 등으로 3조 684억 원을 조달하여 각 부처 청사 등 공용재산 취득 및 비축토지 매입 등에 운용하였습니다.

대외경제협력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차관원리금 회수 등으로 2조 193억 원을 조달하여 개발도상국 차관사업 등에 운용하였습니다.

복권기금은 복권판매 수입, 기금예탁원금 회수 등으로 8조 4354억 원을 조달하여 기금사업 및 당첨금 지급 등에 운용하였습니다.

기후대응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2조 3058억 원을 조달하여 기금사업비 등에 운용하였습니다.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재화 및 용역판매 수입, 여유자금 회수 등으로 7899억 원을 조달하여 금융기관 예치, 기금운영비 등에 운용하였습니다.

외국환평형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여유자금 회수 등으로 173조 925억 원을 조달하여 원리금 상환, 금융기관 예치 등에 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부 소관 재무제표 결산입니다.

2024회계연도 기준 자산은 유동자산이 55조 5327억 원 감소하였으나 투자자산이 57조 9910억 원 증가한 영향 등으로 전년 대비 2조 3073억 원 증가한 505조 805억 원이며, 부채는 장기차입부채 47조 1806억 원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54조 7515억 원이 증가한 1087조 1825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재정부 소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는 7105억 원을 배정받아 국가안전보장활동 지원, 국제투자협력단 운영 등으로 6386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결산과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 내용은 결산심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광현 국세청장 나오셔서 국세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으로 나오십시오, 이쪽으로. 한 분은 이쪽, 한 분은 이쪽.

공정하게 사회 보는 위원장입니다.

○국세청장 임광현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회계연도 국세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국세청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자발적인 성실납세를 적극 지원하여 세입 예산의 조달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악의적·지능적 탈세에는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공정과세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세청은 민생경제 안정을 적극 지원하면서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국세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가산금, 벌금 등 3641억 원을 예산액으로 편성하고 3668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은 1조 9512억 원이고 그중 1조 9347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인건비 및 정보화 사업비 등에서 165억 원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제표 결산입니다.

자산은 36조 6633억 원, 부채는 32조 2708억 원, 순자산은 전년보다 2012억 원 감소한 4조 3925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국세청 소관 결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7월 13일 자로 새로 임명되신 이명구 관세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관세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청장 이명구 안녕하십니까? 관세청장 이명구입니다.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식적으로 첫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관세청이 정부 정책목표를 최우선으로 실현하고 AI로 공정 성장을 선도하는 부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24회계연도 관세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저희 관세청은 국민 안전과 경제활력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두었습니다.

불법·부정무역 단속을 통해 총기·마약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안보 위해물품의 국내 반입을 원천 차단하고 관세행정 전 분야에 대한 규제혁신으로 국산 석유제품의 블렌딩 수출산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첨단 IT 제품의 품목분류 분쟁과 같이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직면하는 어려움에 적극 대응하는 등 국가첨단산업 발전과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저희 관세청은 우리 기업들이 미국발 관세전쟁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해 내도록 미국 관세정책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우리 기업들이 체감 가능한 지원책을 적기에 제공하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총기·마약 청정국 실현, AI 산업·인프라 활성화 및 안정적인 재정수입 확보로 새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관세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1201억 원을 예산액으로 편성하고 373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696억 원으로 그중 6592억 원을 집행하였고 인건비, 여비 등 집행잔액 99

억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재무제표 현황입니다.

자산 4조 7152억 원, 부채 3조 2967억 원이며 순자산 1조 4185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관세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주시는 고견과 조언은 겸허히 경청하여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8월 13일 자로 새로 임명되신 백승보 조달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조달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장 백승보 조달청장 백승보입니다.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식적으로 첫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공공조달을 총괄하는 자리를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맡은 바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24회계연도 조달청 소관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조달청은 공공조달을 통한 경기회복 지원과 함께 공급망 위기에 대응한 경제안보품목 비축 확대와 새로운 나라장터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올해는 민생경제 회복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과 글로벌시장 진출을 역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가격, 품질 등 기본에 충실한 공공조달을 위한 조달업무 전반의 개혁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조달청 소관 결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은 8027억 원을 편성하고 9125억 원을 수납했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8179억 원 중 8009억 원을 지출하고 34억 원은 이월했으며 집행 잔액 136억 원은 불용했습니다.

다음은 재무결산입니다.

자산은 2조 5537억, 부채는 88억 원이며 순자산은 2조 5449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조달청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8월 13일 자로 새로 임명되신 안형준 통계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통계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청장 안형준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통계청장으로 임명된 안형준입니다.

국가통계를 총괄하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수요자가 원하는 통계와 데이터를 적기에 생산하고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서비스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24회계연도 통계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계청은 지난해에 사회경제구조 변화에 맞춰 다양한 통계를 개발·개선하고 이용자 친화적 통계정보 서비스 고도화를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경제활력 제고, 복지 증진, 인구위기 대응 관련 통계 확충으로 국가정책을 뒷받침하는 정확하고 신뢰성 높은 통계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가통계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통계청 소관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은 36억 원을 예산액으로 편성하고 34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4253억 중에서 4101억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등 152억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결산입니다.

자산은 2911억 원, 부채는 5억 원, 순자산은 2906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통계청 소관 결산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최병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기획재정부·국세청·조달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요약 자료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자료 1페이지입니다.

먼저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첫째, 기획재정부는 국가채무관리보고서 등에서 국가채무를 상환재원인 대응자산의 보유 여부에 따라 적자성채무와 금융성채무로 구분하고, 금융성채무는 대응자산이 있어 자체 상환이 가능한 채무로 정의하고 있으나 현재 금융성채무의 상당 부분이 채무에 비해 대응자산이 부족하거나 대응자산에 청약저축 납입액 등이 포함되는 등 대응자산이 과다 계상되는 문제 및 대응자산이 실제 상환재원으로 활용하기에는 곤란한 문제가 있어 국가채무 상태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착시효과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자체 상환이 가능한 채무만을 재분류하여 금융성채무를 재구성하거나 국가채무 성질별 분류체계 자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현재 국가 재무제표의 순자산을 산출함에 있어 국민연금기금과 사학연금기금은 국가 자산에는 포함되나 연금충당부채에는 포함되지 않아 불균형하고 순자산이 과다 인식되는 문제가 있으며, 해당 연금기금의 자산은 향후 연금수급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자산으로 사용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 동 연금기금은 국민들의 적립금으로 구성되어 국가 자산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국민연금기금 및 사학연금기금의 자산 규모를 별도로 표기하거나 해당 자산 규모를 제외한 순자산을 별도로 표기함으로써 국가 순자산 규모가 과다 인식되는 문제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지정 요건에 해당함에도 지정이 유보된 기관에 대하여 그 기준 및 사유를 비공개하고 있어 공공기관 지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공공기관 지정이 유보되는 경우 그 기준 및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넷째, 기획재정부는 1953년 한국은행과 체결한 정부대상금 약정서에 따라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에 대하여 원금을 상환한 이후 그다음 분기에 원금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 금전차입 상환 방식과 달리 정부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여 불공정계약의 소지가 있다는 점,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의 이자는 동 사업 및 국고금 운용수익을 통하여 지불하고 있는데 국고금 운용수익은 국가재정법 제17조에 따른 예산총계주의와 상충되며 그 규모와 지출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금 상환일과 이자 상환일을 일치시키는 상환 방식 개선 및 국고금 운용수익이 세입세출 예산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6페이지입니다.

기획재정부 소관 특별회계 및 기금 결산입니다.

첫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기타기금 예수금 상환 사업은 공자기금이 기타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자금의 원금을 상환하는 사업으로 기획재정부는 동 사업의 당초 계획액 편성 시 방폐기금 및 주택도시기금에 상환하여야 할 원금 총 9875억 원을 누락하여 편성한 문제가 있으며, 2024년 세수결산 대응 과정에서 산재기금 및 주택도시기금에 상환하여야 할 원금을 미상환하고 만기연장하였는데 이는 2023년도에 이어 2024년도에도 세수 대응 과정에서 국회의 심의를 우회하는 문제가 있으며 만기연장에 따라 재예수 시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받음에 따라 공자기금의 불필요한 이자 부담 231억 원이 증가한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정책연수원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예약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산취득비 4억 200만 원을 당초 계획과 무관한 노래방, 당구장 시설 등을 위한 자산 취득을 위하여 집행하고 예약시스템 구축을 동 연수원 운영 위탁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체 예산으로 부담하도록 한 것에 대한 책임 규명 및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자체 계정으로 지출한 임시예약관리시스템 구축비용을 환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기획재정부는 연례적으로 한국투자공사에 지급하는 외국환평형기금 자산운용 위탁수수료를 기금운영비 사업에 편성하지 않고 기타이자상환 사업에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는데 이는 자산운용 위탁수수료를 기금운영비 사업에 편성하도록 한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고 자산운용 위탁수수료 지급은 기타이자상환 사업 편성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으므로 향후 수수료를 기금운영비 사업에 편성하는 한편 수수료 금액의 적정성 등을 국회에서 평가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심사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재

비공개 중인 수수료율을 향후 예결산 심사 시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적정한 방법으로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11페이지입니다.

국세청 소관 결산입니다.

첫째, 체납발생액과 누계 체납액 규모가 증가하여 납세 형평성과 조세정의가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등 다른 주요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조세수입 대비 체납액 비율이 높은 수준이므로 국세청은 체납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세무공무원의 체납액 징수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강화, 체납자에 대한 제재 강화 등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입니다.

조달청 소관 결산입니다.

첫째, 민관 공동비축제도를 활용하여 조달청 창고에 비축하고 있는 구리는 실물 ETF 운용을 위한 대응자산으로 실질 소유권이 ETF 투자자들에게 있어 비상시 대비 용도로는 활용이 어려워 비축물자로서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민관 공동비축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구리 보관에 따라 조달청에 지급하는 비용이 민간 창고 대비 크게 저렴하여 특정 자산운용사 및 ETF 투자자들에게 금전적 특혜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민관 공동비축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민간사업자의 참여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지은 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요약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부 소관 국세세입 결산입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세수오차 문제 개선을 위해 정부가 세입예산안 제출 당시 고려하지 못한 경기의 변화 등 최신 정보를 반영하여 예산안 심의 단계에서 국세수입을 재추계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입니다.

현행 조세지출예산서의 정보로는 예산사업과 연계분석을 통한 유사·중복 지출의 정비가 사실상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조세지출에 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작성하는 등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 강화를 위한 실효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세청 소관입니다.

면허료 및 수수료 세입예산은 연례적으로 과다 편성되고 있고 특히 2024년에는 본예산 대비 83.6%의 큰 폭의 오차가 발생하였는데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고 업계 상황 등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끝으로 통계청 소관입니다.

연간 200조 원에 이르는 상품권 구매예산과 관련하여 여러 세부 사업에서 분산하여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는 관행을 지양하고 연말 추가 구매로 인한 불필요한 재고 발생을 최소화하는 한편 관련 지침을 제정하여 상품권 구매 및 사용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및 업무보고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배부해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서 실시하고……

○정일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이자 예, 의사진행발언 있으십니까?

○정일영 위원 예.

○위원장 임이자 그러면 정일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오늘 업무 현안보고도 있고 특히 결산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비비 결산이 특히. 우리 관계관, 기재부에서 1급들이 거의 다 참석한 것 같은데 제일 관련이 많은 예산실장, 유병서 실장이 아까 보니까 참석을 안 했습니다. 2024년 예산 편성·집행 그 당시 예산총괄심의관이고 현재 예산실장인데 반드시 참석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바로 즉시 참석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자료 간단간단하게 네 가지, 자료 협조가 잘 안 돼 가지고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가 국세청, 관세청의 특경비·특활비 이·전용, 불용 자료 제출해 주시고, 오늘 3시까지.

조달청의 경우 구매국에 좀 문제가 있는데 예산결산 이·전용, 불용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관세청에는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던데 마약 단속 관련 예산 일부가 안 쓰였던데 하여튼 불용, 이·전용 그 사유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네 번째로 기재부 예비비 승인의 건이 올라와 있는데 기재부 예비비 중에 사이버 안보 대응 경비 1060억 배정인데 무려 717억이 불용됐습니다. 그 불용사유 또 배정이 어떻게 됐는지 그 사업 내용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안전보장활동 지원 이게 제일 큰데 3550억 집행내역, 몇 해에 걸쳐서 어떤 용도로 집행됐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이자 정일영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 3시까지라고 말씀하셨지요?

○정일영 위원 예.

○위원장 임이자 오후 3시까지 각 국세청, 조달청, 관세청, 기재부에 자료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성실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재부의 유병서 실장이지요?

○정일영 위원 예, 예산실장입니다.

○위원장 임이자 유병서 예산실장님께서 오늘 불참할 이유가 있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지금 예산을 마무리해야 돼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빨리 참석하도록, 오후에는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2026년도 예산 지금 마무리하는 단계인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위원장 임이자 정일영 위원님, 오후에 참석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정일영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지요, 오후 2시경부터.

○위원장 임이자 2시경 가능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제가 한번 파악해서 최대한……

○정일영 위원 상임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실무적인 예산편성 작업보다도 상임위에 와야지요, 담당 실장이.

○위원장 임이자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제가 확인해서 최대한 빨리 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임이자 최대한 빠리가 어디 있습니까, 몇 시까지가 돼야 되는 거지. 시간을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봐 가지고 가능하면, 하여튼 2시로 맞추도록 하고요. 좀 불가피하면 또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그렇지요. 세종에 있으면 지금 올라오는 시간이 있는데 어떻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정일영 위원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세종에 있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정일영 위원님께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른……

○정일영 위원 그래도 KTX 타고 올라오면 늦어도 한 3시면 안 되겠습니까? 담당 실장인데요, 담당 예산실장. 예비비도 중요하고……

○위원장 임이자 물론 담당 예산실장이기 때문에 결산에 대해서 하셔야 되겠습니까마는 지금 세종시에 계시고 2026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지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관 계시지 않습니까, 예산 관련된? 제2차관……

○정일영 위원 아니, 핵심 예산실장이 매번 참석을 안 합니다, 우리 기재위에는. 저는 그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지요. 왜 기재위에 예산실장이 참석을 안 합니까?

○위원장 임이자 이재명 정부가 좀 문제가 있네요. 왜 참석을 안 합니까, 정부가 새로 바뀌었으니 새롭게 한다면서.

그에 대해서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위원장 임이자 여당 위원님께서 이렇게 요청을 강하게 하시는 건 나는 또……

그리고 지금 정일영 위원님, 예결산소위에 들어가 계십니까?

○정일영 위원 예.

○위원장 임이자 그러면 그때 하시면 되겠네요, 소위 위원인데, 소위원장이지니까. 그러면 되지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년 위원 그런데 소위에는 예산실장이 안 오나요?

○정일영 위원 예산실장이 안 오더라고요, 거기도.

○위원장 임이자 그때 부르시면 되지.

○김태년 위원 그러면 오늘 오라고 그래요, 그냥.

○위원장 임이자 세종에 있다잖아요.

○정일영 위원 KTX 타고 올라오면 한 3시면 어느 정도, 지금 3~4시간 남았는데……

○위원장 임이자 지금 여야가 바뀐 것 같습니다. 당혹스럽습니다.

그러면 점심 식사 시간에 부총리님하고 정일영 위원님께서 서로 좀 의견 조율하셔서 시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겠지요?

○정일영 위원 예.

○위원장 임이자 천하람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천하람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질의는 7분입니다.

○천하람 위원 감사합니다.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천하람 위원 지난번에 우리 관세협상 현안질의 할 때 제가 그런 걸 여쭙봤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재명 정부가 미 정부랑 관세협상을 해 가지고 3500억 불 수준의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그런 정부 간 약속에 따라서 기업들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 그런데 그런 미국에 투자를 늘린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에서 정의행위에 나설 경우에 이걸 어떻게 대응 방안이 있느냐라는 걸 여쭙봤었는데 그때 부총리님께서 ‘노동조합도 국익 관점에서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언론에서 좀 비현실적인 답변 아니냐, 너무 순진한 생각 아니냐라는 비판들도 있고 했었는데 부총리님, 여전히 같은 생각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지금 우리가 단순한 투자나 공장 증설 그 자체만은 노동쟁의에 포함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천하람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가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보면 노동, 이제 사업경영상의 결정이라는 게 포함이 되게 되는데 당연히 해외에 투자를 늘리고 거기 증설을 하게 되면 국내에서 생산하는 비중이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우리 캐파가 미국이나 이런 쪽으로 옮겨 갈 수 있지요. 그렇게 되면 이걸 당연히 노란봉투법에 따르면 사업경영상의 결정으로 정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그러면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국가 간 협상에 따라 가지고 미국 투자를 늘리긴 늘려야 되는데 이걸 늘리자니 노동조합에서는 파업이나 정의행위로 나아간다, 샌드위치 신세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혹시 그 이후로 고용노동부나 좀 협의를 하셔서 가지고 대응 방안이나 개선책이나 이런 걸 논의하신 게

있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래서 지금 고용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제가 그런 부분 우려를 전달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업 입장이라든지 이런 측면을 감안해서 세부 가이드라인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하람 위원** 그런데 지금 21일에 바로 본회의가 열리게 돼 있고 굉장히 촉박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제가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을 죽 보면 오른쪽 깜빡이 켜고 시원하게 좌회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업무보고도 보면 규제 개선하겠다, 이재명 대통령도 성장해야 된다, 코스피 5000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자잘한 것 규제 개선 10건, 100건 하면 뭐 합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기업계, 경영계에서 ‘우리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냐. 구조조정, 해외투자 하려고 해도 이것 다 쟁의행위 대상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경영하라는 거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기재부 차원에서도 제대로 된 해결책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들으면서 부총리님의 ‘노조도 국익 관점에서 판단할 거다’ 이 얘기가 저는 이게 비현실적이기도 하지만 사실 좀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런 사업 경영상 판단에 대한 쟁의행위가 막혀 있으면 모를까…… 노동조합 입장에서 국익하고 조합원인 노동자들의 이익하고 충돌하면 어느 쪽을 따라가야 됩니까? 그때도 국익을 우선해야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런데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데……

○**천하람 위원** 아니, 그런데 세부 가이드라인의 문제가 아니라 큰 틀에서 그런 거지 않습니까? 노조가 국익을 우선해서 적절하게 해 줄 거다 이것은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그리고 노동조합 제도의 취지에 맞지도 않잖아요. 굉장히 국가주의적 사고 아닙니까? 노동조합이 왜 국익을 우선해야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아니, 그 말은요……

○**천하람 위원** 법상 허용되는 거면 노동자의 이익을 우선하는 게 노동조합이 가진 제도의 본질이고 그게 위임의 본지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국익을 우선할 거다’ 이것 너무 나이브한 생각, 비현실적인 생각,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러니까 국가가 해외, 기업이 해외에 투자를 할 때 꼭 노조에 불리하다고는 못 본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왜냐 그러면……

○**천하람 위원** 아니지요. 그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거기에 가서 또 노동의 질이 더 좋아질 수도 있고 일자리가 늘어날 수도 있고요.

○**천하람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거기에서 그러면 미국의 일자리가 늘어나겠지만 우리 기업들…… 아니, 지금 경제 사령탑이신 분이 미국에 투자하고 미국에 생산라인 증설하고 하는데 어떻게 국내 노동자들의 고용의 질이 좋아집니까? 고용의 숫자도 줄어들고 당연히 비중이 줄어들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지금 조선업 같은 경우는 미국에 투자를 하는데 우리나라……

○천하람 위원 그거는 조선업에서 아주 소수의 기술자들이 가 가지고 미국에서 거기 좀 잡아 준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많겠습니까 아니면 미국 투자가 늘면 국내 일자리가 줄어드는 게 많겠습니까? 상식적인 말씀을 하셔야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러니까 미국에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국내는 또 공장을 줄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천하람 위원 아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국내에는 공장이 있고 새로 만드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케이스, 케이스로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천하람 위원 그거는 너무 나이브(naive)하고 비현실적인 말씀 계속 하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오른쪽 깜빡이 켜고 좌회전 한다라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 중의 하나가 자본시장 부분입니다. 코스피 5000이라고 말로는 계속하시는데 대주주 기준 10억으로 다시 환원하는 부분, 오늘 업무보고에는 빠졌다 언론에서 나오는데 그래서 이거 10억으로 환원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지금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천하람 위원 심사숙고해서 언제 정도에 그러면 결정을 하시는 겁니까? 차관회의에서 곧 21일에 결정할 거다 이렇게 얘기는 나오는데 그때쯤, 이번 주 내로 결정이 되는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거는 제가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하람 위원 그리고 제가 보다 보니까 이번에 증권거래세를 올라가고 또 양도소득세 관련 대주주 기준 다시 환원하는지 논쟁이 되고 뭐 이런 것들 보는데, 의외로 부동산 관련 세제를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처럼 환원하거나 증세하거나 이런 것들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하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 자산이 어떻게 보면 약간 경쟁하는 구도들이 있는데 부동산 있을 거고 주식시장 있을 거고 크립토 가상자산 시장이 있을 텐데 지금 증세안들이 계속해서 보면 주식시장에 집중된 걸로 보여요.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계속 코스피 5000를 부르짖으시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주식시장에만 증세안을 가지고 오는 게 좀 앞뒤가 안 맞다라는 생각 하지 않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저희들은 주식시장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가치 제고라든지 기업의 경쟁력 제고 이런 부분이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천하람 위원 그거는 본질적인 부분인데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 줘야 되는 거지요, 밸류업을. 그러면 우리 정부가 놓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하면서도 또 일정한 부분은, 과세 형평성이라든지 과세 효율성은 저희들이 같이 병행해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천하람 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나중에 지방선거 끝나고 부동산도 증세하겠다는, 그때 가서 그런 얘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지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지금은 지방선거 때문에 눈치 보시고 만만한 개미들 때려잡기 정도로 하다가 지방선거 끝나고 본격 증세 드라이브 하시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저는 정치적인 상황을 판단해서 경제정책을 운영할 생각이 조금도 없고요. 객관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종합 판단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하람 위원 추가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의 윤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 위원 부총리님 수고하십니다.

여러 가지 초혁신경제 또 글로벌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국가경제도 그렇고 특히 국가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한 1300조 원 이상 국가채무가 예상이 되고 현재 또 여러 가지, 가계부채라든지 기업부채 이런 부분도 상당히 우리 국가경제의 지속가능성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5년 동안에 각종 공약을 하기 위해서 210조 원의 재정이 필요하다 또 계속적으로 확장재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재정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5년 동안에 한 35조 6000억 정도 증세를 해서 하겠다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금년도 세법 개정으로 35조 6000억입니다.

○윤영석 위원 그리고 이번에 또 예산실에서 27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 거의 뭐 마른 수건을 쥐어짜듯이 이렇게 했을 텐데 이것을 또 매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매년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지출 구조조정은 매년 하려고 합니다.

○윤영석 위원 매년 하겠지만 이런 규모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그동안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한 20조 이상은 계속 해 왔습니다. 계속 그 정도로 해 왔습니다.

○윤영석 위원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부분에서 증세도 법인세 또 증권거래세 이런 쪽에 증세를 할 것이고 또 조세특례제도 이런 것은 각종 폐지를 한다거나 또 조정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할 텐데.....

법인세 이 부분은 특히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무역의존도도 높고 기업의 그런 활동에 상당히 의존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기업활동을 위축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법인세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법인세는 저희들이 과세 형평을 감안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지출 측면에서는, 나중에 내년도 예산안 발표한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훨씬 많이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지출로서는요. 받는 것은 받더라도 더 많이 지출해서 그래서 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에 정부가 유도도 하고 집중 투자를 해서 정부하고 기업이 같이 나가면 오히려 제가 하는 이런 정책도 사후적으로는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영석 위원** 지금은 지출하는 것, 정부 재정지출의 효과성 측면을 제고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러한 정부 재정지출이 제대로 된다면 경제를 살릴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재정지출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전략과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창용 한국은행총재님, 한국은행에서 재정승수효과를 분석한 것을 보면 민생복지지원금 같은 이런 현금이전성 같은 경우에는 1조 원 정도 정부 재정지출을 하게 되면 한 0.33 정도, 한 3분의 1밖에 승수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거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이전지출이 있기 때문에 0.3에서…… 어느 계층에 주느냐에 따라 다른데 0.2~0.5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윤영석 위원** 0.2~0.5 정도?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윤영석 위원** 반면에 정부 투자라든지 정부 소비 같은 경우에는 한 0.8~0.9 정도,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지금 구윤철 부총리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 재정지출을 할 때 이런 재정승수효과를 잘 고려해서 민생복지지원금 같은 이런 현금이전성 지출은 최소화해야 된다, 그것 동의하시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그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 경제가 양극화가 심해 가지고 또 어려운 분들은 도와주기는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잘 가려서 복지 이전지출도 누수되거나 또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석 위원** 정부의 재정지출이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주 긴급한 그런 부분의 현금성 지출은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잘 따져야 돼요. 지금 재정은 한정이 있고 또 쓸 데는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런 현금이전성 지출은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특히 기업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5일 날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 상황인데 지금 국방비 증액에 대한 압력도 상당히 크잖아요. 거의 전체 GDP의 한 3.8%, 그래서 상당히 많은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또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문제도 결국은 13조 이상 요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저희들은 12차 방위비분담금 협약이 돼 있습니다. 2026~2030년까지고요. 그래서 1조 5000억 정도가 지금……

○**윤영석 위원** SMA 협의가 돼 있지만 이번에 아마 미국에서 이런 안보 의제가, 안보 비용 문제가 상당히 큰 의제가 되지 않겠는가 많은 예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변화의 가능성도 크지 않습니까, 이미 협정이 이루어져 있지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그것을 수용할 것인지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 부분은 안보팀에서 아마 미국 가서 협상을 할 것 같은 가능성이 높는데 아마 국익 관점에서 저희들이 협상을 잘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윤영석 위원** 지금 특별한 어떤 기준이나 원칙은 확고하게, 확실하게 정해진 것이 없다는 것으로 지금 제가 들리거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저희들은 기존에 한 방위비분담 협정이 우선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영석 위원** 1분만 더 줄 수 있습니까?

○**위원장 임이자** 예,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윤영석 위원**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님께서 아까 원화 스테이블코인 말씀하시면서 ‘점진적으로 도입 필요성이 있다’ 또 ‘은행권 중심으로 발행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런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결국은 국가경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고 또 이용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아까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가상자산도 결국은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지금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양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을 허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것을 스테이블코인으로 발행할 때 준비자산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통화량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늘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방식을 도입할 때 한국은행이 하나의 이해당사자로서 참여해서 발행량 조정하는 데 저희들 의견을 냄으로써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것을 컨트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1분 더 쓰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영 위원** 인천 송도 국회의원 정일영 위원입니다.

장관님,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뉴스 보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보고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여론이나 우리 당 입장 뉴스 나오는 것 보면 50억 얘기를 많이 하고 부총리, 정부에서는 10억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도대체 언제 결정하실 겁니까? 굉장히 국민들은 혼란스러운데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혼란 상태를 가져갈 건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저도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있고요. 상황을 종합해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그렇게……

○**정일영 위원** 언제쯤, 언제 결정해요? 이게 맞는지는 모르지만 대주주 10억 때문에 우리 당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많은 불만들이 있는데 어쨌든 결정을 해야 되니까……

이게 세수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무슨 세정·과세 원칙 때문에 10억을 계속 고집하시는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정부로서는, 이번 세제개편의 원리가 과세의 형평·효율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부는 냈습니다만 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니까 저희들이 잘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빨리 결정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론의 또 국민들의 판단이 50억이 맞다

고 판단한 것 같은데 결정을 해 주시고……

○위원장 임이자 부총리님, 마이크 좀 바짝 갖다 대고 하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정일영 위원 더 가까이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정일영 위원 국민들께 설명을 하십시오. 10억이 확실히 소신 있다면 정부 입장에서 10억을 설명하세요. 제가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설명이 없어요. 아니면 빨리…… 여론을 언제까지, 이것까지 들으실 겁니까? 그냥 50억으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두 번째, 한미 관세 지난번에 타결 보고하실 때 보면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후속 절차가 어떤 게, 대표적으로 사례를 한번 들어 보십시오. 어떤 게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후속이라는 게 지금 미국에서 또 아주 디테일하게 2000여 개……

○정일영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설명을…… 어제오늘 보면 철강제품 또 여러 가지 그것이 섞여지는 품목에 대해서, 소위 407개 과생상품에 50% 과세를 한다고 나오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이……

다음 PPT 한번 보여 주세요.

보면 우리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그래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정일영 위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협상이 전혀 안 된 겁니까, 추가 협상 이런 것들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철강 관련해서는 미국에서 50%라고 지난번에 그 부분……

○정일영 위원 과생상품에 대해서 그때 얘기가 없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이거는 그때 협상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그런 것 논의를 지금 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의견을 제시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바이오라든지 의약품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때 부총리께서는 ‘최혜국대우를 받는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정일영 위원 그런데 최혜국대우를 받더라도 그 안에서 최혜국이지, 그게 관세율이 낮은 상태에서 최혜국이면 좋은데 이미 뭐 한 40%, 50% 정해 놓은 데서 최혜국 받아야 40%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정일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협상, 협의…… 협상이겠지요. 하고 계신가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이 25일 날 예정돼 있는데 그런 추가적인 논의가 그때도 있을 겁

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지금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에 대해서는 조율 중에 있습니다, 의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의제가 논의가 돼서 어떤 의제를 논의할 것인가는 지금 내부적으로 조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러면 이제 방위비를 포함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다 포함돼…… 투자를 얼마큼 더 할 수도 있다 이런 것까지 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조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어쨌든, 예.

그리고 장관님, 지금 경기가 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게 국민들의 시장의 기대심리 이런 부분은, 소비심리는 좋아지는 것은 확실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2/4분기 0.6% 성장한 부분은 확실한데 이게 아직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일영 위원 예,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진짜 경기를 살릴 수 있는 경기 성장·진작 대책을 부총리께서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청년들의 일자리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부의 어떤 대책이 없어요. 너무 답답한 상황인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아니요, 곧 나옵니다.

○정일영 위원 곧 나오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정일영 위원 기대해도 됩니까, 그러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정일영 위원 언제쯤 나오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예산도 다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정책하고 예산안이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이달 말까지는……

○정일영 위원 그래요. 한번 국민들께 시원하게 우리 경제 좋아지겠다는 대책 좀 발표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정일영 위원 그리고 예비비, 국가재정법 52조에 따라서 지금 심의 올라왔는데, 승인,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예비비 이것 국가재정법 52조를 걸고서 국회에서 자료 요구하는 걸 거부하는 사례들…… 예산실장을 제가 그렇게 찾았는데 예산실장이 계속 거부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가재정법 52조는 승인을 받기 위해서 제출하는 거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요구하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앞으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정일영 위원 예? 마이크에 딱 대고 답변하세요. 계속……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최대한…… 나중에 또……

한국은행 총재님, 금리 인하 어떻게, 8월 달에 예정…… 할 겁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통방회의가 다음 28일 날 예정돼 있어서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정일영 위원** 답변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시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고민이 많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부동산 문제도 있고 인플레이션도 있고 등등 있지만 경제가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니까 금리 저는 인하할 때 됐다고 봐요. 지난번에도 한번 금리 인하가 늦어 가지고 실기됐다는 지적들이 많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고.

경제성장률 올해 0.8% 문제없겠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지금 그것도 한꺼번에 이번 28일 날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일영 위원** 그래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지금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때 그러면……

하여튼 스테이블코인은 보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굉장히 신중하고 굉장히 천천히 가려는 그런 것을 보이시네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이것도 실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신중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 보면 굉장히 슬로우하게 가는 느낌이 드는데……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존경하는 정 위원님, 저희가 천천히라는 표현보다 점진적이라는 표현을 할 때는 누가 발행하느냐를……

○**정일영 위원** 조금 이따가, 제가 조달청장한테……

조달청장님!

○**조달청장 백승보** 예.

○**정일영 위원** 아까 조달청장님 보고에 조달청이 중소기업을 막 지원해 주고 살린다 그러는데 민원은 조달청이 엄청난 중소기업의 왕, 중소기업의 갑질 대장…… 특히 구매국, 나중에 제가 따지겠지만, 국감 때도 따지고, 중소기업을 살리려고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조달청?

○**조달청장 백승보** 예, 그렇습니다.

○**정일영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달청장 백승보** 당연히 우리 경제의 핵심이 중소·벤처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일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 특히 요즘 시대에 구매국이라는 데서 중소기업에 가격을 올려라 내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안 맞잖아요. 시장경제주의인데 시장에 맡겨야지, 기업들한테. 문제가, 이걸 공정위에서 담합이 있으면 처벌하고.

○**조달청장 백승보** 예.

○**정일영 위원** 그것을 공무원들이 앉아 가지고 가격을 통제하고 올려라 내려라 이러면 되겠습니까? 구매국에 너무 인원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은 좀 줄여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총재님, 아까 말씀하시다 말았는데 스테이블코인하고 내년도 경제성장 전망 한국은행에서 어떻게 예측하고 계신지 예측 전망을 말씀해 주시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지금 존경하는 정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 저희가 경제예측치를 얘기하면 금리에 관한 인식으로 들릴 수 있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통

방이 끝난 다음에 자세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러니까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언제쯤 이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행이 시작되면 좋다고 보는 거예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저희는 사실상 지금 은행을 중심으로는 이미 파일럿을 한 번 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미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슈는 은행권 중심으로 할 것인지 비은행권으로까지 넓힐 것인지 하는 건데 저는 당분간은 은행권 중심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핵심 정부기관은 한국은행이에요, 금융위원회예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이 문제는 여러 기관이 다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자본자유화 문제는 기재부와 같이 걸려 있고요 은행산업에 관해서는 금융위가 걸려 있고 통화정책에서는 저희도 관련돼 있습니다.

참고로 이 문제의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의 지니어스 액트 같은 것을 보면 이런 관계된 기관들이 전체가 모여서 합의 방식으로 결정하도록 인허가돼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1분 더 드렸어요.

○정일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이자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걸 위원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안도걸 위원 이번 세제개편안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세제개편 저번에 말씀을 올렸는데 여하튼 나무를 볼 게 아니고 전체 숲을 봐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35조 상당의 세제개편안, 왜 하셨습니까?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지금 국가가 할 일은 여러 가지 많은데 세금은 줄어 들고 과세 기반이 많이 훼손된 상황입니다.

○안도걸 위원 그렇습니다. 나라 공간이 텅 비어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안도걸 위원 부총리님 좀 놀라셨을 거예요. 지금 조세부담률 보면 우리가 한때 22% 정도까지 갔었는데 지금 3년 만에 17.6%로 전락을 했지요. 그리고 이 숫자는 OECD 평균 한 25%에도 크게 미달하고요. 그래서 정상적인 재정 운용이 좀 어려울 것입니다.

단적으로 세수결손, 작년 세수결손 우리가 보고 있는데 30.8조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안도걸 위원 그런데 23년도에 56.4조 또 금년에 우리 추경 하면서 단행했던 세입경정까지 합치면 어찌 됐든 간에 지난 정부의 원인으로 인해 가지고 97.5조예요, 지금. 세수

가 펑크가 나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이만큼 세수가 확 주저앉았는데 이 상태에서 무슨 일을 지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부총리님 아주 의욕이 많으시잖아요. 경기 빨리 회복시키겠다 그리고 우리가 초혁신경제를 통해서 앞서 나가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 그야말로 미래혁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대대적으로 하겠다.

그런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불가피하게나마 이번 세제개편을 하셨을 거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근거가 없고 정책 효과를 상실한, 예를 들어서 법인세에 대한 일괄적인 감세 이런 부분에 대한 정상화, 과세 정상화를 그 방법으로 택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맥락 그리고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다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서 가지고 국민들 설득을 해 주십시오라는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잘 알겠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리고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 한은 총재님께 여쭙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총재님, 스테이블코인은 정말 지금 상당히 빨리 확산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제수단으로서 압도적인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래 시간, 비용의 어떤 면 그리고 금융 접근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이것은 저희가 피할 수 없는 그러한 흐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미국이 지금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지금 한 2800억 불 정도 되지요. 지금 전 세계 코인의 99%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화 불안을 겪고 있는 남미 국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스테이블코인이 대체 통화 기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빠르게 확산이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만약에 놓치게 된다면 스테이블코인이 가지고 있는 금융혁신 기회를 상실한다라는 것을 떠나서 통화 주권도 우리가 놓치게 된다. 그리고 어차피 지금 디지털 통화 시대로 전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갖고 있지 못한 기축통화의 어떤 그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디지털 원화 시대에 있어서는 우리가 글로벌화함으로써 나름대로 우리의 입지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 빨리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미 다른 나라들이 이것 제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EU·일본·홍콩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발 빠르게 가야 됩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오늘 우리 총재께서 말씀 주시기를 이 필요성은 절박하고 있다, 절박성은 느끼고 있으나 다소 방법론에 있어서 이견이 좀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 관련해 가지고 제가 몇 가지 여쭙볼게요.

통화정책에 영향을 준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에 스테이블코인이 있잖아요, 지금 2800억 불인데 미국 통화가, 지금 M2가 22조 이 정도 되더라고요. 1%에 불과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정도의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확장은 못 가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우리가 우려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낸 법안에서도 인가·발행·유통 각 단계에서 우리 통화 당국, 외환 당국이 관여해서 그 통화량과 발행량과 유통량을 조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스테이블코인이 예금을 대체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현재 저 스테이블코인 준비금에 대해서는 지금 이자를 매기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금 대체 기능을 막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금에 대한 대체는 별로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또 준비자산의 상당 부분이 현금성을 가지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예금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단기국채를 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만큼의 돈이 또 은행권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그러면 이게 예금 창출 기능을 상쇄하는 그러한 역할도 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게 코인런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저는 충분히 제도적으로 방책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고유동성 안전자산으로 준비자산을 구성을 한다 그리고 안전자산의 몇 퍼센트 정도 일정 부분은 현금성자산으로 해 가지고 바로 상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즉각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또 준비자산 현황에 대해서 공시를 하고 또 유동성 리스크를 체크하기 위해서 스트레스테스트를 주기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런 문제는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외환 문제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의 하루 외환 거래량이 얼마나 됩니까, 총재님?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

○안도걸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7.5조 불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코인 시총이 지금 2300억 불인데 이게 일정 방향으로 만약 매도나 매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외환량의 3% 내의 아주 미미한 거다라고 하고, 실제 우리 원화 관련해 가지고 환투기가 일어나는 것은 NDF라든가 선물옵션 시장입니다. 거기에서 충분히 이러한 환투기 자금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스테이블코인을 투기 대상으로 하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발행사 범위에 관해 가지고 아까 아주 진중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은행의 통제가 되는 은행 중심으로 가자고 하는데 여기는 비은행권이 가지고 있는 혁신성을 상실하면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은행이 나름대로 역할을 해야겠습니다만 은행이 주도하게 되면 우리의 혁신, 결국은 아까 처음에 거래비용의 절감 그리고 또……

1분만 더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이자 예.

○안도걸 위원 여러 가지 어떤 새로운,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실물자산, 제품, 서비스 시장의 개척 이런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동기 유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형태로든지 비금융권이 관여해서 스테이블코인의 혁신적인 수요를 창출하고 해야만 또 우리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성을 우리가 담보할 수 있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작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난립하는 부분들은 자본금 요건 등 그리고 또 감독규정 등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이것은 관리가 가능하지 않느냐라

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 총재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우려에 대해서 상당 부분 방책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에 대해서 전반적인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존경하는 안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큰 이슈가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답변드리기 어려워서 자세한 내용은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빨리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제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천천히 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은행권을 중심으로 빨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발행자에서 안전장치를 갖추고 빨리 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통화정책에 관한 말씀 우선 드리면, 통화정책이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예금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아닌데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때 발행자가 국채 같은 것을 사서 다시 그 예금이 은행권에 오더라도, 어떤 면에서 그게 하나의 방식인데 예금 전체의 양은 변하지 않지만 소액 예금이 기관 예금으로 변하게 됩니다. 지금 그런 것들이 은행의 유동성 관리라든지 이런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제가 통화정책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발행량이라든지 누구한테 인허가를 줄 때 통화 당국이 들어가서 같이하게 되면 이것은 안전판을 마련하기가 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저희들이 참여하지 못하면 발행량이라든지 예금의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 저희가 못 하기 때문에 통화정책에 영향을 방지할 수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코인런이 안전자산으로 다 대체를 해 놓으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굉장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모든 발행자가 자산을 다 국채 담보를 잡고 있고 바깥에 커스터디를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면 예금을 찾을 수 있으니까 수요자가 걱정하지 않을 거다라는 것은, 저는 금융시장은 그렇게 작동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도 MMF나 이런 것이 그 자산이 다 바깥에 수탁되어 있어서 안전하지만 어느 증권사의 MMF가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굳이 그것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어려움을 겪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런이 일어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술적으로 그것이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더라도 발행자의 신용 상태라든지 다른 요인에 의해서 런이라는 것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돈을 가진 사람은 ‘내가 6개월 뒤에 분명히 찾을 수 있어. 예금 보호가 되어 있으니까 몇 년 뒤에 찾을 수 있어’ 이래도, 예금 보호가 되어 있어도 어떤 상호저축은행이 위험하다고 그러면 ‘내가 귀찮게 그것을 뭐 하러 거기에 다 두어야 돼?’ 이래서 런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 코인런이라는 것도 기술 말고, 그게 아무리 잘 보관되어 있더라도 발행자의 신용등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에 따라서 런이 일어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외환 문제만 마지막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게 근본적인 차이인데 지금 전체의 외환거래량에서 움직이는 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은 자본자유화하고는 굉장히 어긋나는 생각입니다. 자본자유화라는 것은 일부 돈 있는 사람이 쉽게 돈을 바깥으로 가지고 나갈 수가 있는냐는 것인데 전체 거래량은 얼마 안 되더라도 위급한 상황이 오면 이것을 빠른 속도로……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환치기도 할 수 있

고 NDF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은행이 한번 거르고 그 돈이 나가는 게 어떤 용도로 가는지 확인을 하고 가기 때문에 스피드를 체크할 수 있지만 스테이블코인이 있으면 급격히 나갔다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일부 악용하려는 사람에게 충분히 악용할 기회를 주는 것이고 그것이 자본자유화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그 거래량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 문제는 왜 자꾸 이렇게 충돌이 되고 혁신 얘기가 나오냐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금융산업을 발전시키고 주가를 올리고 혁신을 만들기 위해서 자본자유화도 허용하고 금산분리도 허용하고 그러면 당장 오릅니다. 그렇지만 지금 금산분리라든지 자본자유화라는 것은 금융산업의 발전이라는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할 때는 서로 조화롭게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은행 중심으로 먼저 가 본 다음에 천천히 가면서 안전판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이노베이션이 안 일어난다는 문제는 저는 은행 중심으로 가되 그 컨소시엄에 비은행금융이 들어와서 같이 이노베이션을 하게 되면 많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100%는 아니더라도 이노베이션에 대한 걱정은 은행이 51% 이상을 가지고 비은행금융이 들어와서 협조를 하게 되면 이노베이션에 대한 걱정, 우려가 많이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질의 마지막, 국민의힘 최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석 위원 장관님, 총재님, 청장님들 아주 고생 많으십니다.

작년 결산 관련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질의드릴 테니까 부처별로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걱정도 많고 외부 환경도 그렇고 또 장기적인 대한민국의 경제에 대해서 아주 우려가 많아서 구윤철 부총리님께 주로 말씀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취임하신 지 얼마 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이제 한 달 아직, 한 달쯤 됐습니다.

○최은석 위원 한 달 정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최은석 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그렇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한 지는 한 세 달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세 달째 접어들고 있는데, 세 달째 접어들어서도 이미 많이 지났는데 저는 지난 세 달을 좀 평가해 보면 경제 아마추어들이 좌충우돌하고 중구난방하면서 경제를 되게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과연 이 상태로 가면 우리 대한민국 선진경제가 지속가능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심각한 의문이 많이 듭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나라에는 여기 계신 부총리님도 그렇고 한국은행도 그렇고 또 여러 전문가 공무원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기재부도 그렇고 타 경제부처. 이렇게 전문가분들이 이런 상황에 왜 제대로 목소리를 내시지 않는가 하는 데 대해서 저는 의문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부총리님하고 기재부에 있는 여러 전문가분들이 지금 정부 여당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제를 어떻게 망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깨어 있는 소리, 바른 소리를 계속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슬라이드 잠깐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재명 정부하고 여당이 출범한 지 한 세 달 됐는데 세 달 전의 공약을 한번 보면 경제 살리기의 중심은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가지수 5000을 달성하겠다고 했지요. 그런데 지금 실상을 보면 경제 살리기의 중심이라고 한 그 기업들을 옥죄어서 과연 이 기업들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과거처럼 선순환구조로 끌고 갈 수 있을까 하는 데 대해서 의문이 많이 듭니다.

보시면 대표적으로 노란봉투법, 아까 천하람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사업경영상 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으로 포함시키기도 했고 또 사용자 범위를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으로 해서 되게 모호하고 앞으로 도대체 누구랑 노사교섭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불안정성을 많이 확대시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법도 보면 1차 개정에 이어서 2차 개정하는 것들을 감안하면 앞으로 기업의 이사회나 기업을 경영권 분쟁의 장으로 만들어서 글로벌 성장과 기업의 혁신에 주력하지 못하도록 기업을 난장판으로 만들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또 법인세율 인상이나 중처법 강화도 그렇지요.

그리고 주가지수 5000 관련해서도 이게 지금 자본시장 죽이기를 하기로 한 건지, 대주주 기준 하향도 그렇고 증권거래세도 그렇고……

이 와중에 이춘석 전 민주당 의원은 차명으로, 그것도 내부자거래 의혹이 있는 이런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법사위원장이자 이재명 정부가 만든 국정기획위원회라고 하는 데의 분과위원장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부자거래 하면, 부총리님 잘 아시겠지만 일반 상장기업의 내부자가 이런 거래를 하면 바로 구속과 실형이 나올 아주 중범죄입니다. 이런 범죄가 집권 여당의 내부에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었던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망치기로 한 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집권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이 정부 여당의 아마추어 같은 분들이 국민 경제를 대상으로 해서 실험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의혹이 진짜 강하게 듭니다.

조금 더 여쭙보겠습니다.

부총리님, 이번에 관세협상 할 때 아직 최종 마무리된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관세협상에 일부 성과가 있었던 것들 여기에 기업인들의 역할이 크게 있었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기업인들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최은석 위원 제가 보기에요 워싱턴의 정관계 인사들과 직접 접촉도 하고 또 공동의 펀드 조성이나 미국에 대한 투자 약속 이런 것을 통해서 전방위적인 기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부총리님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최은석 위원 만약에 이번에 기업들의 역할이 없었으면 이번 협상이 훨씬 더 불리한 결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큼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부를 믿고 협상 테이블에 직접 나서기도 하고 또 막후에서 큰 지원을 한 기업인들에게 돌아온 것은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노란봉투법이나 상법 개악 그리고 법인세 인상 이런 것인데…… 노란봉투법 관련돼서 저도 하나 여쭙보겠습니다.

제 생각은 이 법은 민노총이 주도한 청부입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법이 만약에 노동쟁의 대상을 사업경영상 결정으로 확대한다라고 하면 기업 경영활동의 핵심 영역까지 쟁의활동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앞으로 창업을 하겠습니까? 창업할 때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특정 기술이나 특정 비즈니스 아이템 같은 것들을 가지고 내가 가진 전략을 잘 구사해서 기업을 성장시키고 같이 일하는 종업원들도 같이 성장시킨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들 창업에 나설 텐데 내가 해야 될 일을 내 마음대로 못 정하고 회사의 노조가, 회사의 노동조합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합의하지 않으면 노사분쟁을 벌이겠다 이런 나라에서 앞으로 과연 어떤 사람이 창업에 나서겠습니까?

저는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장기적인 성장동력을 완전히 짓밟는 정말 아주 악법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위원님, 기업하고 노사 간의 정상화 개념도 좀 봐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에 노동위원회라든지 법원에서 나온 판례 이런 것을 가능하면 판단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법제화하는 과정 여기에도다 전문가 논의, 현장 의견 등도 충분히 들어서 기업들이 우려하지 않는 수준에서 어떤 기준을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중에서 과도하게 의혹을 증폭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국가경제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보여지고요. 저희들이 대안을 내서 걱정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은석 위원 저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임이자 예.

○최은석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부총리님 말씀 들으면 뭔가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희망을 가질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여당의 입장이나 또 민노총의 입장을 보면 저는 결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노동쟁의 대상을 사업경영상 결정으로 확대한다는 이런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도 당연히 없을 거고, 만약에 이게 일단 법에 반영되게 되면 그다음에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은 대개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기업의 투자, 새로운 신제품의 개발, 생산거점의 이동, 내부의 사업 구조조정 이런 것들이 노동조합의 합의 대상이 되고 노사 합의의 대상이 돼 버리면 앞으로 기업 경영은 정말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기업 하겠다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고 이런 나라에서 새롭게 창업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후 보충질의할 때 추가적으로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금 소위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저는 시중에서 과도한 우려를 하시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만 정부의 얘기를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일단 정부의 기본적인 생각은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그동안에 쌓인 판례나 그동안의 케이스를 기본으로 하면서 여기다가 저희들은 전문가 논의라든지 또는 현장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기업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해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분명한 것은 정리해고와 같이 근로조건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근로조건 변경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경우 이런 쪽으로 좀 한정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단순한 가능성만으로 노동쟁의 대상에 해당한다고는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 우려도 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과도하게 우려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은석 위원 그러면 근로조건의 개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들만 대상이 된다는 것들을 이번에 법안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것 반영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포괄적으로 사업경영상 결정을 법에 반영하게 되면, 그게 더 우선이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다시 또 논의를 좀 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위원님께서 경제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것은 좋은데요, 정부 여당이 경제 아마추어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좀 과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가 경제를 살리고 또 노사관계의 건전한 발전, 과거에 노조를 봤을 때 약간은 불편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상화를 하면서 또 그것을 투명화하고 더 클리어하게 해 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게 경제 발전, 국가 발전에는 더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다 이런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최은석 위원 좀 말이 꼬이시는 것 같은데 오후에 계속하시지요, 장관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지금 상법 같은 경우도 한편에서는 주주 이익을 보호하는 게 자본시장이 건전한 발전을 한다는 이런 측면도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저는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장관으로서 진짜 국가 발전을, 경제를 발전시키면서 또 그 과정에서 노사관계도 건전한 형태로 발전시키는 이 두 가지가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저도 참 할 말이 많습시다마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시간이 더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생략하기로 하고요. 오늘 오전 질의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이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첫 질의는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기형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기재부장관님께 쪽 말씀 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결산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서 작년도 세수결손의 원인이나 또 그 대응 과정이 적절했느냐 이런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2023년도에 역대급 세수결손 56.4조, 그런데 작년도 30.8조 정도 세수결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세수 추계가 제대로 됐느냐 또는 이런 세수결손이 반복되는 것의 이유가 뭐냐,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닌가, 과거 윤석열 정부하에서의 경제정책 중에 감세정책을 했는데 세수결손도 발생하고 경제성장도 확보되지 못하니까 경제정책 전반적으로 비판받아야 될 것 아닌가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세수결손을 대응하는 과정 속에서 국회랑 소통을 적절히 했어야 되는데 충분한 소통이 있었느냐, 너무 일방주의로 갔던 것 아니냐 그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아까 오전 질의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 활성화 관련된 세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도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세수결손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하는 것과 관련된 목적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세제개편이 나오니까 약간 혼선이라고 하는 용어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문제의식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세수 기반이 확대돼야 할 필요가 있고 정상화돼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는데, 그것 원상회복하자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소통 과정에서의 문제 제기도 분명히 있고 그러면 그 소통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설명도 해야 되지만 일방적으로 이렇다라고 하기 보다는 좀 더 소통해서 수용을 하는 그런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가격에 대해서 세수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논쟁이 많이 있는데 부동산 시장가격 잡겠다고 세금으로 하는 것 실패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실제 그렇게 접근해도 안 되고 별도의 고유한 세금의 목적이 있는 거고. 그런데 시장가격을 높이겠다고 세금정책으로 되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게 주요한 수단이 될 수도 없고. 결국에는 저는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배구조 개혁을 해야 되고 기업들의 관행도 바뀌어야 되고 실적이 뒷받침돼서 궁극적으로 자본시장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면 선진화가 될 거라고 보는데 그렇지만 과도기적인 과정에서의, 세금정책이라고 하는 게 여전히 소통 과정에서의 맥이 있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는 적극적 소통이 필요하다, 일정 정도 당에서 그런 고민 속에서 말씀을 드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오기형 위원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세수결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면, 지금 계속

반복됐습니다. 2023년, 2024년 그리고 올해도 세수결손이 있느냐 없느냐 상반기에 계속 논쟁을 했었는데 결국 세수결손이 예상이 되면서 10조 원 감액 추경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연장에서 이 지점을 계속 바라보고 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2023년도에 세수결손 대응하는 게 거의 기금 돌려막기 그리고 실제 이 기금 중에서 돌려막기 하는 과정이 20%냐 15%냐 하는, 기금의 재량권이 있는 범위를 뛰어넘었느냐 안 넘었느냐 하는 그런 논쟁 또 그 과정에 편법을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논쟁이 있었고 국회예정처에서도 충분히 비판 의견들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국회 예결특위에서도 논쟁을 했었고 기재위에서도 논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정 개선이 필요하고 2024년도 세수결손에 대한 대응 과정을 좀 더 투명하게, 사전적인 작업이 필요했던 것 아닌가 싶은데 그렇지 않았더라는 지적들이 지금 또 나오고 있어서 이 지적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2024년도 세수결손 보시면 30.8조 정도인데—수치가 약간 다른데—여기서도 여전히 기금 불용 과정 또는 공자기금을 매개로 한 상환 안 하는 과정 이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고, 불용이 좀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여전히 비슷한 방식들을 약간의 방법들 한두 개 뻗 상태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작년도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세입경정을 하자 그랬는데 안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게 반복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구윤철 장관님 책임이 아니라 그 전 정부에서의 문제였고 책임이지만 이번 결산 과정에서는 그런 지점들을 함께 평가하고 해야 그다음 단계에서 서로 신뢰를 갖고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번에 지적되는 것 중에 주택도시기금, 산재기금 등에 대한 지적들이 좀 있습니다. 이 기금들을 특별회계 재원으로 활용을 했는데 이게 적절하냐 이런 문제의식인 거예요. 저희가 2023회계연도 결산하면서 기재부한테 첫 번째 요구했던 것은 대규모 세수결손 발생하면 국회에서의 심의·확정권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사전 소통하고 또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또 실제 방법을 같이 찾아가면 되는데 워낙 또 그런 신뢰가 약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일방적으로 무시한다 그런 정서적 반감들이 있었습니다.

작년도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세수 재추계하겠다는 재추계한 것을 적시에 공개하지는 않았어요. 작년에 예산 처리하면서 뒤늦게 이것을 이야기했고 또 그게 올해 예산안 할 때도 반영되지는 않았었고 그런 지적들을 계속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4년도 결산 자료를 보니까 예보채상환기금이나 산재기금들까지 활용해서 세수결손을 메웠다 이러는데 이게 적절한가,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정부, 이재명 정부에서 구윤철 장관님은 앞으로 이런 상황을 똑같이 반복하실 건가 한번 한 말씀 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저는 하여튼 만약에 이렇게 세수결손이 또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면 국회하고 소통을 하고 진짜 좀 토론하고 의견도 청취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작은 범위라면 정부 안에서 수용이 가능할 거고 또 큰 범위라면 그것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소통을 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기형 위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저희도 주택도시기금 이것 보니까 대략 한 예산 총액 20% 이내에서는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것을 통해서는 약 2.07조 정

도 자체 기금 변경하고 또는 예수원금 미상환하고 합쳐서 보니까 약 3.18조 정도로, 약 20%의 그 한도를 좀 우회하려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몇 가지 상의만 하면 사전에 조율하고 감액 추정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하니까 불신이 쌓인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적자성채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 출범할 때부터 조건이 참 안 좋습니다. 감세정책을 해서 세수 기반도 약화되었고 그리고 적자성채무도 상당히 증가해서 국가채무의 질도 좀 안 좋고, 작년에도 보니까 적자성채무가 상당히 많이 증가했어요. 국가 전체 채무 증가액은 48.4조인데 적자성채무만 약 89조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결국에 돌려막기를 하는 과정에서 채무의 질이 안 좋아진 거지요, 실제 여기 세수결손이 발생한 것이 숨겨진 상태에서 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 모든 근본적인 원인이 무리한 감세정책 그로 인한 세수결손 그로 인해서 돌려막기 그리고 국회와 정부 간의 불신과 갈등 이런 게 같이 연동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적자성채무가 마치 분식회계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이런 게 앞으로 계속 반복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이번에 이런 행태를 반복했던 그분들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뭔가 감사원 감사청구나 뭔가 좀 책임지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분들은 또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했습니다만 국회하고 소통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국민들이 보시기에 납득할 방법으로 했으면 좋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국회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해서 투명하게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기형 위원 최종적인 것은 이후에 봐야 되겠지만 2023년도 감사 결과 그리고 국정 감사 보고서 아직 채택 안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데 그 이후에 2024년도도 똑같은 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논쟁은, 똑같이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에 대해서 논쟁이 있을 수 있다. 이것 같이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오기형 위원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위원님의 질의는 항상 날카로워요.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조승래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부총리님, 일전 전체회의에서도 한 번 했었는데 올해 성장률이 지난 4월 전망에 비해서 0.2% 하향한, 0.2% 하락한 0.8%로 현재 예측을 했고 내년 1.8% 정도 예정을 하고 있

는데 실제로 현재 이런 성장률에 기반해서 부총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혁신경제의 모멘텀을 잡고 그에 따라서 혁신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재정의 확보, 즉 세수 관련한 부분들에 대한 예측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사실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요 지금 한국 경제가 이 기간 동안에 AI 대전환이라든지 또 AI를 활용한 기존 산업의 경쟁력 제고 그다음에 초혁신경제로 나가지 않고는, 이것 돈을 아끼려고 하다가는 진짜 이게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일단 재정을 늘려야 되는데 이 재원을 국채에만 의존할 수 없어서 저희들은 지출 구조조정을 가장 세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과세의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너무 과세 베이스가 이렇게 악화된 부분에 대한 원상 회복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국채 발행 이렇게, 국채 발행은 최대한 늦추는 그런 식으로 지금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하에서 재원을 마련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확실하게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확실하게 넣어서 좀 성과를 내서 성과가 나는 재정 운영 그래서 성과가 나는 경제정책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그러니까 결론은 제가 보기에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안 해서 그렇지 조세의 정상화가 필요한 시점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지금 너무 많이……

○김영진 위원 지금 필요하지요. 제가 보기에는 2022년부터 25년까지 진행했었던 감세에 따른 세수의 부족이 아주 명확한 부분이기 때문에 세수의 정상화를 통해서 혁신경제의 물적 토대를 준비하는 게 사실은 필요하지요. 그래야지 제가 보기에는 계획한 바대로 투자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다라고 봐서 저는 그 문제에 관해서 조금 더 선명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행한 부분들이 법인세 24에서 25% 정상화 그리고 증권거래세 관련한 정상화, 실제로는 금투세를 도입하면서 증권거래세를 없애기로 했던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상화 맞지요. 정상화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김영진 위원 저는 그런 문제가 좀 분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년 연속 세수결손에 따라서 법인세 1% 인상을 했는데 실제로 내용을 보면 21년에 상위 5대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19.3%였어요.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맞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2022년에는 감세에 따라서 2022년 16.1%, 23년에 13.9%로 크게 낮아졌기 때문에 결론은 전체 국가재정의 큰 축을 담당하는 법인세, 소득세, 여타 부분들이 확 준 거지요. 그리고 실제로 감세가 2년간 87조, 3년 포함 100조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이 전체적으로 경제성장의 모멘텀을 만드는 데 사실 지장을 가장 초래했지요. 실제로는 법인세 인하를 통해서 기업의 투자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끈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었지만 현실은 23년에 1.4%, 24년에 2.0%, 올해 상반기 0.2%라는 경제성 지표가 있다는 객관적 사실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김영진 위원 저는 그 문제에 관해서 그래서 법인세, 증권거래세, 여타 세제에 대한 정상화를 통해서 경제정책의 토대를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님,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그래서 그전에, 세수를 정상화하기 전에 지출 구조조정을 더 세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아니, 그것 전체지요. 제가 보기에는 지출 구조조정을 정확히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기반 그리고 여타 정비 그리고 선택과 집중 그리고 조세의 정상화를 통한 물적 토대의 구축, 큰 3대 축을 통해서 저는 준비해 나가지 않으면 나머지 5년 동안 210조를 투자해서 혁신경제를 이끌겠다라고 하는 것은 공염불이지요. 저는 분명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금융투자에 대한 소득들, 대주주 요건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솔직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코스피 5000이 우리 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밸류업을 하고 가치를 높이고 경제성장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물로서의 코스피 5000이지 코스피 5000을 위한 모든 제도를 동원한다? 저는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해서 개인 투자자나 개미 투자자나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서로 인정하고 현재 우리 경제가 올해 0.8, 내년에 1.8밖에 성장되지 않은 가운데 어떻게 성장을 통한 가치를 높여서 갈 것인가에 대한 서로의 고민들을 저는 높여 갈 필요가 있다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결국은 지금 상항하에서는 돈을 조달하더라도 성과가 나는 조달이라면 이것은 위너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성과가 나는 재정 운영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김영진 위원** 맞습니다.

한국은행 총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미국 연준의 이사가 한 명 교체가 됐잖아요? 그것 아시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스티브 미란.

○**김영진 위원** 스티브 미란이 연준의 이사로 선임됐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김영진 위원** 총재님, ‘미란 보고서’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김영진 위원** 저는 미란 보고서가 실제로는 예전에도 죽 읽어 봤는데 핵심적인 내용이 약달러 유도 및 관세의 전략적 활용, 한마디로 강달러가 미국의 수출과 제조업의 약화를 불러왔기 때문에 약달러와 관세를 높여서 보호하고 들어오겠다라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 마라라고 합의를 통해서 동맹국들에 미국 국채를 장기 100년 국채를 통해서 달러 우위로 가겠다. 그다음에 통상 질서 재편. 크게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는 관세와 약달러를 통한 미국 경제의 보호무역과 제조업 부활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그에 따라서 금리 문제가 연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금리는 미국 금리와 연동해서 항상 판단하고 결정하는 건데 총재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실 예정입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미란 리포트에서 금리는 기본적으로 크게 한 축을 이루지만 금리는 기본적으로 단기적으로 볼 때는 물가에 의해서 변동되기 때문이에요, 미란 리포트에서 하는 것은 중장기 금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미란 리포트에서도 저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당연히…… 미국 기축통화의 역할을 강화한다, 그다음에 미국으로의 투자를 유도한다, 관세를 올린다 이런 것이 기축을 이루고 있는데 사실 미국 내에서도 미란 리포트에 의해서 하는 것이 서로 일치하느냐,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 돈이 들어오게 하면서도 약달러를 할 수 있느냐, 실제로 그렇게 하면 달러가 강화될 텐데 이런 논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렇지요. 제가 보기에는 약달러를 통해서 그게 경쟁력을 높인다고는 하는데 현재처럼 하면 전 세계에 있는 달러가 미국에 들어오겠지요. 강달러를 유도하는 정책을 통해서 약달러로 가겠다고 하는 모순적 정책인데, 그러면서 또 나오는 것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트럼프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잖아요. 동일한 것 아닙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것은 아마 단기적,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돈이 몰리면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서 장기국채의 금리가 떨어져서 미국에 유리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렇지요. 장기국채를 그것에 의해서 100년물을 팔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의도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런……

○**김영진 위원** 실제 본질적인 목표는 그거지요.

그러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방향을 어떻게 보세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어 준다고 달러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갖고 있는 수요나 다른 나라가 갖고 있는 수요가 크게 영향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달러에 대한 싸움이라기보다는 국내에서 어떤 면에서 지급결제시스템에 아까 프로그램도 집어넣고 효율성을 위한 것이 주목적이 돼야 되고 달러에 대한 대비는 별도로 우리가 어떤 자본자유화된다는 규제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진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권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세 위원** 아까 유상범 위원……

○**위원장 임이자** 아, 유상범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유상범 위원** 아니요, 하세요.

○**위원장 임이자** 아니에요?

하세요, 그러면.

○**권영세 위원** 그래요? 제가 먼저 하지요.

부총리님, 아까 앞서 오전에 어떤 위원님이 구 부총리께서 우측 깜빡이 켜고 화끈하게 좌회전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동의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권영세 위원** 그런데 저는 아까 그 위원께서 말을 제대로 하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부총리께서 지난 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성장전략 태스크포스에서 기업이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의 중심이라고 얘기하시고 또 기업을 한국 경제의 모든 것의 중심에 두고 글로벌 1위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전력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기억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권영세 위원 그런데 기재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법인세 세율을 전 구간에서 1%씩 인상을 했어요. 이 인상이 이게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전력 지원하는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 대신에 위원님, 그렇게 해서 들어온 세입으로 기업에게 더 많이 지원할 것입니다.

○권영세 위원 돈 뺏었다가 다시 주느니 차라리 그것을 그냥 갖고 있게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이게 지금 인상하는 이유는 뭐니까? 이게 무슨 지난 정부에서 인하였기 때문에 다시 인상하는 거다 이것은 아닐 거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권영세 위원 세수 문제입니까, 결국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게 2022년도에 법인세가 한 100조 넘다가 그다음 해에 감면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60조로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업의 경쟁력은 더 떨어지니까 오히려 조금조금 거둬 가지고 정부가 돈을 더 없어서 더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느냐……

○권영세 위원 작년에 법인세수가 얼마나 감소했는지 알고 계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알고 있습니다.

○권영세 위원 18조 원이 감소했다고 그러네요, 국회예정처에서. 그러나 법인세율 인하만으로 이 감소된 효과는 한 3조 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그러니까. 그렇다면 한 15조 정도는 이게 세율 인하하고 상관없이 경기 탓이라고 볼 텐데, 동의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그게……

○권영세 위원 이것은 수치에 관한 거니까 동의하시겠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저는 섞여 있다고 보면 확실하게 동의합니다.

○권영세 위원 예.

오전에 노란봉투법하고 상법 개정안을 여당에서 21일 날 강행하겠다 그래서 의장을 방문하고 왔는데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재계에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알고 있습니다.

○권영세 위원 어제 경총에서 1년만 유예해 달라는 얘기도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알고 있습니다.

○권영세 위원 이 법들에 대해서 부총리님의 개인적인 견해는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노란봉투법, 소위 노란봉투법에서 규정된 그 규정을 어떻게 불확정 개념을 줄이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고용부도 그런 식의 방향으로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세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굉장히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냥 확실, 물론 법이 확실하면 더 좋겠지요. 그런데 이것 확실하고 안 확실하고를 떠나 가지고 애초에 방향 자체가 잘못됐으면 그것은 방향 자체를 틀어야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한미 관세협상에 따라서 3500억 불을 그게 뭐 조선이 됐든 어디가

됐든 미국에 투자하게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물론 수년에 걸쳐서 하게 되지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권영세 위원 그래서 실제 우리 기업들이, 투자는 결국 우리 기업들이 하게 될 텐데 우리 기업들이 이 투자를 하게 될 경우 이게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것을 알고 계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 기업……

○권영세 위원 이게 기재부의 서면답변 자료에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남 얘기하듯이 써 놔던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권영세 위원 지금 이 법이, 노란봉투법이 없었을 때도 해외투자 가지고 예를 들었을 때 현대차 같은 경우에 항상 노사 간의 갈등의 원인이 됐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일부 그렇게 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권영세 위원 그러면 조금 아까 하시려 그랬던 부분 얘기해 보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지금 3500억 불은요 기업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정부가 투자하는 부분……

○권영세 위원 정부는 보증만 한다면서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보증을 하고……

○권영세 위원 그러면 실제 투자는 누가 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실제 투자는 저희들이 대출을 받는다든지 보증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고요.

○권영세 위원 기업들도 상당 부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아닙니다. 기업들은 다 따로 보는, 다른 부분입니다.

○권영세 위원 특히 마스가 같은 경우는, 주로 조선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주로 하게 되지 않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정부가 하는데 기업들은 수주를 받아 가지고 공사를 따는 게 되는 겁니다.

○권영세 위원 지금 분명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정부는 보증을 하고 그다음에 돈을 빌려 가지고 기업이 투자하는 건 없다 이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없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은 없습니다.

○권영세 위원 우리나라 기업은 없다 이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권영세 위원 그러면 다른 나라 기업이 있으면 그것은 다른 나라한테 우리가 돈을 빌려주는 거니까 그것도 또 이상한데…… 제가 지난번에 물어봤을 때 예를 들어서 TSMC가 미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고 그러면 우리가 거기 또 빌려줄 수 있는 거라는 얘기인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아니요, 우리 기업이 그 사업에는 조인을 하는데 정부가 미국에서 조인트벤처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대출을 일으키면 정부가 보증을 해 주고 거기서 사업을 하고 우리 기업이 들어가서 공사를 수주하고 우리 기업이 오퍼레이션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권영세 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우리 기업이 지금 3500억 불과 관련해서 투자하는

것은 없다 이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권영세 위원 어쨌든 노란봉투법 부분에 관련해서 쟁의 부분도 그렇고 손해배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이 굉장히 걱정하는 부분이라면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부총리도 잘 알고 계시다면, 그냥 장관도 아니고 부총리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리더십을 발휘해 가지고 여당하고 협의를 하거나 이럴 때 좀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래서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나 기업에서 걱정하시는 것을 감안해서요 저희들이 법안에 따른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구체적인 액션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진짜 좀 다 기업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하려고 합니다.

○권영세 위원 제가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분명하게 한다든지 가이드라인 정도 외에도 방향을 바꾸는 거나 이런 조치는 안 하겠다 이런 얘기시네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하여튼 최대한 이것을 좀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한국은행 총재께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체로 우리 총재님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찬성을 하시는 편이네요, 그렇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권영세 위원 그런데 지금 찬성이라는 말이 좀 이상한 게 지금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하려면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만들려면, IPO가 아니라 지금 코인은 뭐라고 그러지요? 어쨌든 코인시장에 등록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저희가 지금 가상자산 발행 자체를 법제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영세 위원 할 수 있는 거 아니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아직.

○권영세 위원 그러면 다른 나라라도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아니면 미국 가 가지고 발행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그런데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면 원화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현행법의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법 없이는 하기는 어렵습니다.

○권영세 위원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찬성이라는 얘기는 규제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되겠네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저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필요한데 은행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세 위원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필요한 이유는 뭘니까?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모든 디지털화폐가 프로그램을 집어넣게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프로그램 기능을 넣기 위해서는……

○권영세 위원 지급결제 기능을 굉장히 수월하게 할 수 있고 또 그다음에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고 이런 얘기겠네요. 그렇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권영세 위원 미국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적극적인…… 그것 외에 또 뭐가 있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우선 달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서 그 스테이블 달러를 다른 나라에서부터 받아들이면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권영세 위원 그러니까 기축통화성도 강화되고……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중앙은행은 통화정책 등……

○권영세 위원 그다음에 담보용인……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권영세 위원 단기국채의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지고 미국의 이자 부담이 낮아지고 뭐 이런 거네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권영세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얘이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우리하고 상관없습니다.

○권영세 위원 예.

나머지는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예.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 세제실장님 자리에 계세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김영환 위원 발언대로 좀 와 계세요.

세제실장님, 실무 담당 할 때 저에게 사표 낸다는 언급을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기억이 안 나십니까, 안도걸 위원님이 옆에서 들으셨는데?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그때 위원님께서 제 발언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하셔서 가지고……

○김영환 위원 그 내용은 뭐였어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제가 잘못된 정보를 말씀드리면 책임지겠다고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김영환 위원 예,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그때 서민·중산층하고 분류 기준이었었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평균소득 200%를 2016년도부터 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니고 ‘윤석열 정부 때 평균임금의 200%를 윤석열 정부 때 썼다. 그 전까지는 중위소득 150% 기준을 썼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책임을 진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제가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조금……

○김영환 위원 보여 드릴게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김영환 위원 보여 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21년 세법 개정안 뭐 썼습니까, 기준? 21년도 뭐 썼습니까? 중위소득 150% 썼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김영환 위원 16년도 아닙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제가 조금 말씀드릴까요? 제가 16년도라고 한 것은……

○김영환 위원 그때 이 세법 개정안 두고 얘기한 거잖아요. 판소리 왜 하십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아니, 판소리가 아니고……

○김영환 위원 안도걸 위원님 여기 증인 또 얘기해 드려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아닙니다. 제가 사실대로 다 말씀드립니다.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22년도 갑자기 뭐로 바뀌어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그러니까 200%로 바뀌었는데 제가 그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김영환 위원 아니, 말만 하세요. 책임진다고 했잖아요. 16년도부터 중위소득 150% 아니고 평균임금의 200% 썼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잖아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아니, 제가……

○김영환 위원 왜 판소리하세요, 지금?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아니, 판소리가 아니고요. 그런 뜻으로 드린 말씀이 아니고요. OECD 기준 자체가 16년도에 바뀌었습니다.

○김영환 위원 기재부가 그렇게 썼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기재부가? 그래서 책임지라고 했잖아요, 내가.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영환 위원 지금 왜 판소리하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아니, 판소리가 아니고요.

○김영환 위원 OECD 얘기가 왜 나오니까, 지금?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저희가 저 기준을 쓰는 것 자체가 OECD 기준을 인용을 해서 쓰는 내용입니다.

○김영환 위원 16년도부터 썼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세법 개정안을?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아니, OECD……

○김영환 위원 제가 세법 개정안 두고 얘기한 거지 OECD 얘기한 거예요? 세법 개정안에 분명히 이렇게 박아 댄잖아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저것 맞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래서 내가 이것 질의한 거잖아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그런데 제가 그때 드린 말씀은 저 기준 자체가 OECD가 기준을 바꾸면서, 16년도에 바꿨는데 저희가 그걸 그때 바로 바꾸지 못하고……

○김영환 위원 그 소리는 안 하셨잖아요. 저 세법 개정안 두고 평균임금의 200%를 윤석열 정부에서 썼다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그러니까 저 사실은 맞습니다. 윤석열 22년도 때……

○김영환 위원 왜 이렇게 정직하지가 못해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저는 정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영환 위원 세법 개정안을 16년도부터 썼다고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제가 16년도에 세법 개정안을 썼다는 게 아니고요. 16년도에 OECD가……

- 김영환 위원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사람 아닙니까, 지금? 의원 가지고 낚니까, 지금!
-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아니, 제가 그런 뜻으로……
- 김영환 위원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그런 뜻으로 드린 말씀이 아닌데 혹시 제가 오해가 있었다면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윤석열 정부 때 세수 귀착 효과가 평균임금 200% 쓴 게 윤석열 정부다 라고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그러니까 200% 기준은 22년에 쓴 게 맞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래서 책임지라고 한 것 아닙니까, 내가!
-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혹시 잘못이 있다면 제가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때 세법 개정안 두고 얘기한 거지 뭐 탄 얘기 했습니까?
-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아니, 그런데 저 세법 개정안 기준 자체가 OECD 기준을 저희가 차용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 김영환 위원 언제부터요?
-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저거를……
- 김영환 위원 16년도부터요?
-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16년도에, 제 말씀은 16년도에 기준을……
- 김영환 위원 세제개편에 썼습니까, 16년도에?
-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아니, 제가 혹시 16년도라고 썼다고 말씀을……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닌데 혹시 그렇게 들으셨다면 그것은 제가 정확한 표현이 잘못 됐던 것 같고요. OECD 기준 자체가……
- 김영환 위원 22년도, 23년도, 24년도, 25년도까지 왜 이 기준이 중요한지 제가 여러 번…… 부총리님,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왜 이 기준을 바꿨는지!
-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그러니까 제가 기준을 말씀……
- 김영환 위원 들어가세요.
-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 김영환 위원 들어가시라고요.
-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 김영환 위원 자꾸 거짓말하려면 들어가시라고요.
-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아니……
- 김영환 위원 들어가세요!
-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알겠습니다.
- 박성훈 위원 설명을 하는데 좀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김영환 위원 거짓말해서 그러는 거예요, 거짓말해서. 끼지 마시고.
- 박성훈 위원 뭐가 거짓말인지는 들어 보고 판단하셔야지요.
- 김영환 위원 얘기도 못 들었으면서 뭘 안다고 지금 끼어드세요!
- 위원장 임이자 위원님들……
- 박성훈 위원 왜 얘기를 안 들었어요? 저도 그 현장에 있었어요.

○위원장 임이자 김영환 위원님 질의 계속하시지요.

○박성훈 위원 설명을 들어 보자는 겁니다.

○김영환 위원 그 자리에 무슨…… 민주당 실무 당정 하는데 왜 박성훈 위원님이 계십니까, 거기에?

○정태호 위원 위원님! 박성훈 위원님, 위원이 질의하고 계시는데 하실 내용이 아니잖아요.

○김영환 위원 질의하는 데 끼어 들고 있어.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김영환 위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제가 이것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PPT 한번 봐 주세요.

조세지출을 해 놓고 수혜자가 누구지를 몰라요. 그러면 일단 수혜자 구분을 합리적으로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맞습니다.

○김영환 위원 조세지출은 잘 안 보여요. 보조금하고 다릅니다. 보조금은 명확하게 지정돼 있어요. 조세지출도 그렇지만 잘 안 보여요. 나중에 결산을 해 봐야 압니다. 그다음에 귀착 정보, 세분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재정지출이 최종적으로 국민들 누구에게 어느 계층에게 귀착되는지를 정리를 해 달라는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김영환 위원 해외 사례, 미국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통계 다 돼 있잖아요. 조세지출을 하면 어느 국민 계층들이 혜택을 보는지, 어느 계층들이 손해를 보는지 통계적으로 명확하게 제시를 해 달라. 5분위가 안 되면 최소한 이 기준들을 마련하는 근거는 기재부가 제시를 해 줘야 된다. 그래야 조세지출이 어떻게 최종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효능감 있게 받아들이는지 그 부분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많은 말씀 드리고 싶은데 일단 조세지출 수혜자 구분에 대해서 정확히 해 주셔서, 숫자로 장난치지 말라.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기재부는 달라져야 된다, 이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이자 김영환 위원님 딱 맞췄네, 그냥.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년 위원 부총리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김태년 위원 우리 부동산 통계 지금 두 군데에서 하잖아요, 하나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부동산원.

○김태년 위원 부동산원하고 민간은 KB에서 하고. 평소에 이게 좀 문제 있다 이런 생각 안 하셨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그래서 과거에 한때도 이게 좀 KB하고 부동산원이 맞지 않다고 해 가지고 그때 한번 조정한 기억은 나긴 합니다.

○김태년 위원 지금 국토부에서 이것 자꾸 문제 제기가 되니까 용역하고 있는 모양입

니다, 일단.

이것 매주 발표하는 게 이게 맞아요? 예를 들어서 6·27 금융규제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거래가 급감할 것 아니에요, 거래가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몇 채 거래됐는데 그걸 가지고 올랐니 내렸니 이렇게 발표하는 게 그게 합리성이 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것도 국민들의 또 알권리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능하면 좀 빨리하라고 하는 그런 요구하고 이렇게 해서……

○김태년 위원 아니, 우리가 부동산 가격과 관련해서 통계와 관련해서 발표를 하는 것은 정부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 경제심리에도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또 우리 언론들이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이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가 많잖아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도 무슨 주 단위로 발표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것 개선해야 되지 않겠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이것 오래전부터 문제 제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간 통계를 내더라도 이걸 내부 참고용으로만 쓰고 공식 통계는 월간 또는 분기 중심의 체계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표본조사 개수 말이에요. 이게 부동산원에서 이제 하는 게 한 3만 5000가구 정도 될 텐데—공동주택 관련해서—그런데 우리가 전체 공동주택이 한 2000만 호 정도 되잖아요. 겨우 0.3% 정도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해요. 민간인 KB의 표본의 절반밖에 되지 않아요, 부동산원에서, 국가기관에서 하는 데가. 그래서 이 0.3% 이걸 표본주택으로 뽑아 놓고 또 거래량도 줄였는데 이걸 가지고 통계라고 발표를 하면 정확성이 좀 떨어지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김태년 위원 이것도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표본가격 산정 방식도 있어요. 이것도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부동산원에서는 실거래가, 호가 그다음에 조사원의 판단 이걸 가지고, 이런 걸 혼합 방식으로 해 가지고 표본가격을 산정하게 되는데 그런데 실거래가 있으면 이걸 검토해서 표본가격을 산정하고 실거래가 없으면 같은 단지 비슷한 거래 사례를 가지고 표본가격을 산정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실거래가 있든 없든 다 표본가격으로 산정하는 셈인데 KB는 표본주택의 실거래가 있으면 실거래 가격, 실거래가 없으면 해당 지역 공인중개사 조사를 통해서 표본가격을 지금 산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 실거래가도 이것도 좀 정확하지 않아요. 이거 계약할 때 계약 시점으로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김태년 위원 산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최고가로 신고해 놓고 등기 안 해 버리면 그냥 집값을 띄우는 데 이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마 국토부에서도 이 문제는 인식하고 있을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용역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부총리께서 관심을 가지고 이게 어떤 방향에서 개선을 해야 될 것인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제가 같이 국토부하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한번 의논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통계 때문에 주마다 집값이 올랐니 내렸니 호들갑도 떨고 막…… 이게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경제주체들한테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불안하니까 막 영끌해 버리고 이런다는 말이지요.

그다음에 통계도 다 나뉘져 있어요. 실거래가는 국토부, 거래량은 통계청·부동산원, 공시가격은 기재부·행안부 이게 막 다 분산되어 있어요. 이것도 좀 통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오늘 제가 몇 가지 검토사항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보고해 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김태년 위원** 그리고 산업재해 줄이는 게 지금 우리 국가적 과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김태년 위원** 지금 대통령 주재 회의도 여러 번 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김태년 위원** 우리가 산업 기반이 제조업이 많고 또 건설업 비중이 크니까 아무래도 노출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 현실적인 요인도 있는데. 특히 건설 현장에 보면 산업재해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 중의 하나가 하도급 구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잖아요. 원청 있고 하청 있고 재하도 있고 심지어 재재하도까지. 그러면 최초 원청에서 재재하도까지 내려가 버리면 가격이 50%로 떨어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맞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러니까 위험해도 그냥 막 하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공기도 쫓기지요, 단가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위험의 어떤 외주화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입찰제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부대입찰제도라고 알고 계시지요, 부대입찰제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김태년 위원** 이게 일로 치면 원도급자가 하도급 업체하고 미리 체결한 계약서를 입찰서류로 첨부해서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첨부해서, 예.

○**김태년 위원**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어느어느, 일종의 이게 컨소시엄이 되는 거지요, 원청과 전문 하도급과의 일종의 컨소시엄. 이게 납품단가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공사단가를 아주 턱없이 낮은 가격으로 돼 가지고 부실 공사가 이루어지고 이런 걸 막으려고 그때 이런 제도를 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김태년 위원** 그런데 그 뒤에 이게 폐지가 됐어요. 부대입찰제도가 폐지가 됐는데 폐지할 때는 또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 다시 도입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예, 변형을 해서라도. 예를 들면 안전관리공정 포함형 특례 제도 뭐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해서라도 이 부대입찰제도는 다시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제가 건설 현장의 산재 문제 때문에 여러 당사자들을 만나 보니까 이 제도가 폐지되면서 문제가 많이 생겼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시간 더 주십니까? 1분 더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위원장 임이자 원하십니까?

○김태년 위원 부총리님, AI와 관련해서요 우리 지금 예산에 AI 전체 총량은 늘어난 것 같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태년 위원 늘어났지요, 왜냐하면 바우처 이런 것들 도입되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클라우드 고도화를 지원하던 사업 이걸 줄였어요. 이게 AI 생태계의 심장 아니에요, 클라우드 컴퓨팅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김태년 위원 이걸 줄여 버리면 어떡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보시는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육성 그 사업 말고, 이 사업은 줄인 대신에 AX 통합해 가지고 클라우드 하기 위한 GPU 구매라든지 국가 컴퓨팅센터라든지 이런 쪽은……

○김태년 위원 아니, GPU, 컴퓨팅센터 이런 건 늘어났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태년 위원 내가 말하는 것은 클라우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클라우드. 이걸 절대로 늘리면 늘렸지 줄이면 안 되는 사업이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이 사업 말고……

○김태년 위원 이게 혈맥인데, 혈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AI의 혈맥을 줄여 버리면 어떡합니까? 아니, 제가 다른 사업 안 늘어났다는 게 아니에요. 바우처도 새로 생기고 막 이랬어요. 의미 있어요. 그런데 이 클라우드 사업 이걸 줄이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걸 잠깐 말씀드리면, 하여튼 이 사업 자체는 여러 가지 세입 여건 이런 것 때문에 줄었는데 여기는 한정되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클라우드 사업을 많이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종류가 틀린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알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440억에서 150억으로 줄여 봤잖아요. 이걸 다시 검토를 해 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 세입 여건이 안 돼서…… 나중에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다음은 국민의힘 박대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출 위원 한은 총재님,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총재님의 답변을 듣다 보니까 제가 헷갈려요.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죄송합니다.

○박대출 위원 제가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러겠지요. 속도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천천히 확장하자고 그러는데 천천히 확장하자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제가 아마 그러면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고, 저는 발행 주체를 은행권으로 하면 여러 부작용을 저희가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발행 주체를 은행으로 해서 추진하자 그걸……

○박대출 위원 주체를 어디로 하자는 문제인……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그렇게 하고 스피드는 거기에 맞춰서 하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박대출 위원 이게 KTX 타고 가자는 건지 걸어가자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빨리 가기는 가야 되는 거다라고 말씀은 하시고.

이 주무 부처가 어디입니까, 이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정부 정책?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이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통화정책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고요. 이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함으로써 자본자유화에 미치는 영향은 기재부와 저희가 공동 책임이 있고 금융산업 특히 은행에 관해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관해서는 금융위에서 관장하게 돼 있습니다.

○박대출 위원 그러니까 세 부처가 지금 영역이 명확하지도 않다 보니까 이게 원톱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다, 그렇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이게 미치는 영향이 물론 법제화니 뭐 이러겠지만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분야가 조금 있습니다.

○박대출 위원 그래서 그러다 보면 스테이블코인의 정책이 표류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이 문제를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금 프로젝트 한강을 보면 기재부는 빠져 있는 상태에서 금감원·금융위·한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박대출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이 사업 자체가 무슨 테스트베드, 그냥 연습하는 사업 같아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그것보다는 지금 한 단계 넘어갔는데요, 저희가……

○박대출 위원 그냥 조금 더 넘어가고 뭐 하나 해 보자, 만들어 보자는 정도까지 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나 지금 중요한 것은 금융권이 할 거냐, 비금융권도 할 거냐라는 이 발행, 사업과 관련한 주체도 지금 영 아직 정해지지 않고 관련한 법규도 만들어지지 않고 굉장히 어수선한 상태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세 부처가 따로따로 놀다 보면 이게 표류할 가능성이 많다는 그 부분이 지금 이 대목에서 제가 바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쭙보

는 거예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그렇습니다.

○박대출 위원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 한강 사업을 하더라도 기재부랑 같이 공동으로, 아니면 TF팀을 만들든지 해서 매뉴얼이나 종합보고서나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발행 주체는 어떻게 하고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이며 시기는 언제로 할 것이며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이냐? 단계별로 할 것이냐, 금융권부터 하고 비금융권도 유보해 놓은 상태에서 할 것이냐? 이런 게 뭔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타임테이블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아닙니다. 사실은 저희가 파일럿으로 은행권 중심으로 하려고 준비를 해서 첫 단계가 끝났는데 갑자기 이런 논의가……

○박대출 위원 은행권만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스테이블코인하고 CBDC하고는 다른 개념이잖아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박대출 위원 비금융권도 할 수 있는 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저희는 사실은 그 중간 단계로……

○박대출 위원 스테이블코인이라는 것은 비금융권도 하는 사업으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그렇습니다.

○박대출 위원 CBDC야 한은 중심으로 한다 그러더라도, 그렇지요? 그러나 기능적이나 이런 것은 서로 다 다른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저희는 그 중간 단계가 하나 있는데요. 이게 기술적이지만 저희 CBDC를 기반으로 해서 은행 예금을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만드는 방식을 저희가 토큰예금이라고 불러 가지고 하고 있었습시다, 파일럿으로. 그런데 갑자기 이런 스테이블코인을 비은행금융권까지 넣자고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플랜을 다시 짜야 됩니다.

○박대출 위원 다시 짜야 되고 하는데 지금 주체가 안 보여서 이게 혼선을 빚을 가능성을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좀 잘 검토해 가지고요 우리가 국회에서 종합 토론회를 하면 어떤 방향이 제시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대출 위원 부총리님, 머리 좀 아프시겠어요.

언제 출국하십니까? 이번에는 안 가십니까? 25일 협상 관련……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것도 지금 미국하고 어젠다에 따라서 달라지는……

○박대출 위원 어젠다에 따라서 가고, 가시지는 않습니까, 직접?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것도 아직은 지금 좀 더 두고 봐야 됩니다.

○박대출 위원 우리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서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지적도 했고,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박대출 위원 결국은 악마 잡으러 가야 되거든요.

제작년에 주키니호박에서 미승인 LMO 발견돼 가지고 그 당시 전량 회수 조치한 사태 혹시 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들었습니다.

○박대출 위원 그 당시에 서부·경남 농가들이 아주 곤혹을 치른 그런 일이었거든요.

지금 미국 무역대표부가 올해도 마찬가지로 한국 비관세장벽도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거는 바로 미국 측이 비관세장벽, 쉽게 말해서 검역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장벽을 허물겠다, 아니면 최소한 완화시키겠다, 줄이겠다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로서는 빗장이 풀리는 거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저희들은 그런 쪽의 빗장을 안 풀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박대출 위원 그렇습니다. 좋은데요. 그러나 우리의 의지는 미국과 지금 충돌이 되는 지점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농업 비관세장벽이 어디까지 개방될 것이냐, 국민 건강주권을 어디까지 협상 카드로 삼을 것이냐 이런 게 관심사가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부총리,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과채류에 대한 검역 절차에 대해서 물었다고 그랬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박대출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미국 쪽에서는 한국 검역 절차가 너무 오래 걸린다, 어떤 경우는 8년씩 걸리는데도 2단계까지 못 나간다 이런 식 주장이었는데……

○박대출 위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유전자조작이라든지 잔류농약이라든지 그런 데서 언급을 혹시 한 적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런 언급은 없었습니다.

○박대출 위원 언급은 없었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박대출 위원 지금 GMO라든지 농약 기준 등이 완화된다면 우리로서는 국민 안전이 우려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박대출 위원 미국 농산물에 대한 빗장이 우리 국민, 농민들이 우려할 수준으로 빨리 빗장이 풀리게 되는 데 대한 부분에 걱정이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정부 방침은 정확히 명확하게 어떤 게 있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무슨 절차를 단축한다든지 이런 생각은 전연 없고요. 그 대신에 과학화를 해서 우리가 잔류농약이나 이런 걸 빨리 디텍트(detect)를 해 가지고……

○박대출 위원 이게 지금 협상 카드로 오를 가능성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저희들이 설명을 충분히 했었고요. 그때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이해를 한다고 넘어가셨는데 실무적으로는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을 저희들이 100% 없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저희들 입장을 계속 설명하고 그런 부분 과학화하는 쪽에다가 포인트를 두고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1분 더 주세요.

○박대출 위원 입장을 반드시 받겠다는 그런 의지나 방법은 지금 아직까지…… 지금 말씀은 시원하게 답변을 못 하시네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과학화를 통해 가지고 미국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과학화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박대출 위원 지금 자동차 관세 25% 5월 이후에 계속 적용받고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박대출 위원 지금 하루에 그 손실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정부로서 계산해 본 것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일일이 숫자로서는 저희들이 계산을 못 해 봤습니다.

○박대출 위원 그 여파로 2분기 현대·기아차 영업이익이 1.6조 원이 감소됐는데 부품업체 손실까지 합치면 하루에 200억 손실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분석에 대해서는 그 분석 결과 받아 보신 적 있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제가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박대출 위원 그러니까 협상 결과가 지금 15%로 일단 확정된 것 아닙니까, 자동차 관세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그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대출 위원 그러면 그것 빨리 적용받도록 해야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계속 미국 쪽에 푸시를 하고 있고요. 지금 EU, 일본, 한국이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5% 하기로 해 놓고 왜 빨리 이걸 안 해 주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15%가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미국하고 물밑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대출 위원 그러니까 정부 외교력을 이 자리에서 확인을 받고 싶은데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밖에 안 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저희들은 열심히 하는데 또 상대방이 있어 가지고요 그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대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근 위원 장관님, 한국 경제 상황 어떻다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지금 한국 경제 상황이 만만치 않은데요. 그렇지만 또 저희들이 잘 하면 그렇게 비관적이지 않다, 그 대신에 얼마나 우리가 진짜 집중적으로 해서 제대로 돌파를 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러니까 정부는 대개 객관적 지표나 자료, 정보를 가지고 국민들께 있는 그대로 상황을 설명해야 되고 또 국민의 대표인 국회도 마찬가지로 이게 여야를 떠나

서 한국 경제의 지금의 상황이라는 객관적 인식하에 적절한 처방을 내리는 데 우리가 또 협조를 해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맞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런 점에서 새 정부가 되고 주가가 좀 오르고 하다 보니까 자칫 장밋빛 낙관론이 또 횡행하는 측면이 있어 보여요. 그런데 아무리 곱씹어 봐도 지금 한국 경제는 성장동력이 매우 지금 저하되어 있고 10년 이내에 잠재성장률 0%대로 하락할 거라고 하는 게 대부분 전문가나 정부의 전망도 일치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박홍근 위원 그러니까 이런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저는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저도 공감합니다.

○박홍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는 반복적으로 국민들께 얘기를 해야 된다, 거기가 우리의 출발점이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자칫 업무보고라든가 이럴 때는 우리는 주관적 의지로서 잘할 수 있다라고 먼저 얘기를 하는 것이 국민들께 판단을 흐트릴 수 있는 것이라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은 경제와 산업 분야에서의 정말 혁신과 대전환을 이루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경제는 설 자리가 없다라는 정도의 막중한 책임감과 위기의식을 갖고 임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런 점에서 국가재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 볼 텐데 오늘 이 업무보고에 보면 고성과 부문에 과감하게 투입하겠다는,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그동안 저희가 하도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건전재정 이런 표현을 많이 들었던 말이에요. 재정의 건전성 중심으로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성과 중심의 재정기조로 전환하겠다는 이게 기본 입장인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맞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성과 중심의 재정 기조와 건전성 중심의 재정 기조의 가장 큰 차이는 뭐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성과 중심의 재정 운영은 줄일 데는 줄이고 성과가 날 부분에는 과감하게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혹시나 단기적으로 건전성이 조금 줄어들더라도 중장기적으로 건전성이 제고된다면 저희들은 이 방법을 쓰겠다는 거고요. 건전재정이라는 게 단기적으로 건전재정을 따지면 이게 재정을 지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 그다음에 또 이게 건전재정이나 이런 게 주로 이제 단계적으로 개념을 본다면 저희들하고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박홍근 위원 결국은 제약되어 있는, 한정돼 있는 재원을 어디에 우선적으로 쓸 거냐라고 하는 선택과 집중의 문제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모든 정부가 그동안 해 왔던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 이 단어를 어느 정부나 다 써 오지 않았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고요. 의무지출과 관련해서도 오늘 간단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제 여기에 대해서도 정말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그냥 피부로 느끼는 부조리한 일들도 많지 않습니까? 가령 일할 수 있는 사람이 기초수급 타기 위해서 일하지 않는 구조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구직급여 관련해서도 반복적으로 수

급을 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잘못된 제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살펴서 누수가 없도록 해야 되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맞습니다.

○박홍근 위원 이제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더 강한 의지를 갖고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러면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 공직사회에서도 저연차,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더 따뜻하게 더 두텁게 지원을 획기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잘 선택해서 재정을 투입을 해야 한다 이 말씀을 우선 좀 드리고 싶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박홍근 위원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해서도 그동안 제도개선에 대한 요구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선 SOC 사업 관련해서는 이제는 이게 바뀌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지금 저희들은……

○박홍근 위원 총사업비 1000억에 국비 500억 이상이면 이제 그렇게 가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500억 그렇게 기준……

○박홍근 위원 그것은 이제 내부적으로 다 확정이 된 것이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정부 의지는 확실합니다.

○박홍근 위원 그다음에 R&D 사업 관련해서도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것도 방침이 분명한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박홍근 위원 그렇게 가야 저는 성과를 이룰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

이와 함께 이제 정부가 국정과제를 선정하지 않습니까? 국정과제 중에는 대규모 정책사업, 가령 통합돌봄 같은 경우는 이것은 불가피하게 빠른 성과를 내기 위해서도 지방정부와 협업을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제외시켜야 될 그런 사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저는 정부가 속도를 내 줘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그런 정책 목적적인 사업도 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리고 환율에 대해서 짧게 하나 좀 여쭙볼게요. 환율이 이제 1300원대가 거의 고정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시장에서는 이게 뉴노멀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고 정부가 사실 환율시장에 개입하기 어려운 점은 압니다라는 사실상 묵인, 방조한 것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정부는 그렇지 않은데 또 일부 그런 시각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 관련해서 이게 물론 쉬운 일은 아닌데 고환율에 의해서 사실은 수출기업은 일부 이익을 받은 게 있지만 또 수입기업이라든가 어려움을 겪는 데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의견을 좀 들어 보는데 이번에 또 한미정상회담 할 때 통화스와프에 대해서 거론이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것은 거론이 안 됩니다.

○박홍근 위원 아마 다른 현안들이 많아서 거론이 안 될 텐데 이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기축통화국이 아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라는 이미 여러 나라가 상설

통화스와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반상설이건 또는 지속적인 중기적으로는 그 스와프를 좀 추진해야 되지 않냐 그런 것을 계속 요구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 보셨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지금 한국 경제 관련해서 통화스와프를 많이 확대하면 좀 안정성이 높아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나 또 국제적인 신뢰도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그런 협상 여하에 따라서 저는 충분한 가능성도 한편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살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하나만 이것은 당부 삼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1분만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다음에 안 해요?

○박홍근 위원 예,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예, 알았어요. 1분 더 주세요.

○박홍근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세제 문제 가지고 기재부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다 아마 전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누적된 부분을 바로잡는, 정상화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원내대표 시절에 주호영 원내대표하고 어렵게,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정말 꼼꼼한 지시를 하나하나 간섭을 받아 가면서 합의했던 문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만 유예하되 그때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10억 기준으로 하고 증권거래세는 2025년까지 0.15%로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이게 당시에 합의 사항으로 국민께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알다시피 다음 해에 바로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도 정부가 시행령으로 일방적으로 다 그냥 바꿔 버렸던 거거든요. 합의 사항을 그냥 우리한테 양해도 구하지 않고 파기를 했던 것이예요.

금투세 문제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논란 과정에서 아예 폐지까지 했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상황이지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여야가 합의해 왔던 과정과 역사를 종합적으로 살피면서 이 문제는 접근하는 것이 합당하겠다. 제가 어떤 특정한 결론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는 오히려 해답을 찾기가 쉬울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규근 위원 장관님, 지난 업무보고에서 보면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의 지배주주 지분

율이 너무 지나치게 낮아서 세금을 깎아 줘도 배당을 늘릴 유인이 없다고 그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증 결과도 그때 보여 드렸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ESG기준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소유지배과리도가 30%를 넘는 기업의 배당성향은 22.1%에 불과한데 과리가 10% 미만인 기업집단의 배당성향은 55.9%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안일한 단순 분리과세 논리를 되풀이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 기업의 소유구조의 현실을 모르는, 겉은 그럴듯해 보여도 속은 텅 빈 피상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배당 증대 효과는 전혀 없고 결국은 금융업 등 기존 고배당 기업 지배주주만 배 불리는 특혜 세제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일반주주를 최대주주 눈치만 보며 배당을 기다리는 무력한 존재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는 일반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고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를 견제하자는 최근의 상법 개정 취지와도 배치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좀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제기한 이러한 문제 제기에 불구하고 결국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가 도입된다고 한다면 지배주주의 몫을 줄이고 일반주주에게 더 많이 배당하는 차등배당을 조건으로 세제 혜택을 주자는 안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주주가 지배주주보다 1.5배 이상의 배당을 받도록 할 경우에 세제 혜택을 주자는 것인데요. 이런 조건이라면 최고세율을 현행의 절반까지 낮추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이때 차등배당으로 더 많은 몫을 가져가는 대상에서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은 반드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주평등원칙에도 불구하고 상법에서 예외로 차등배당을 허용하는 이유는 바로 주주환원과 재무구조의 개선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차등배당 조건부 분리과세를 도입한다면 이 제도를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방안이야말로 배당을 실질적으로 늘리고 일반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일반주주를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주주의 이익 관계에서 벗어나 배당을 요구하는 강력한 주체로 삼자는 것입니다.

이 법안 다 준비가 된 상황입니다. 조만간 발의할 예정인데요. 향후에 제가 이 법안을 발의하면 장관님께서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런데 위원님, 만약에 지배주주가 자기 배당을 줄이면서 그 몫을 물론 특수관계인한테는 안 주더라도 일반한테 줬을 때 이게 증여라든지 이런 이슈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규근 위원 예, 종합적으로 해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 구조조정 관련해서 장관님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지난주 목요일에 석유화학산업 종합대책 마련하라고 지시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그 우려를 표현하셨습니다.

○차규근 위원 아, 기재부장관이 아니라 산업부장관님한테 아마 직접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산업부장관께서 정부 방침을 이달 중으로 발표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최근 여천NCC 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석유화학산업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보스틴컨설팅그룹은 구조조정이 없으면 3년 내에 국내 석유화학 업체의 절반이 존립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차규근 위원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원인으로 가장 손꼽히는 것은 이제 중국과 중동 등의 설비 공급과잉입니다. 단기간에 해결될 일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탄소중립 관련 규제로 인한 수요 감소도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본과 EU 등은 10년여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석유화학산업 구조조정을 했더라고요. 혹시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알고 있습니다.

○차규근 위원 그러니까 2010년 대비 2023년 석화 설비가 일본은 -15%, 서유럽은 -9% 이렇게 줄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에 70%가 늘었습니다. 저는 이 통계를 보고 좀 놀랐습니다. 과연 우리나라 정부와 우리 국회는 이 동안 무엇을 했던 것인가,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구조조정을 차일피일 이렇게 미루다가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장관님, 혹시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저희들도 그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요. 지금 국내에서도 모 기업은 또 구조조정을 잘해 가지고 고도화하고 일반 제품은 줄이고 해서 그래도 이 경쟁에서 조금 살아남은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외국의 사례라든지 국내의 또 다른 기업의 사례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구조조정 하는 것에 대해서 관련 기업들과 좀 협의도 하고 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규근 위원 지난해 12월에 윤석열 정부에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자발적인 산업 재편만을 강조했지 미흡한 수준입니다. 석유화학산업의 위기에 가장 직격탄을 맞은 곳이 여수산단인데요, 여천NCC도 이 여수산단에 있습니다.

몇 가지 지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수시의 기업전망지수(BSI)는 올해 2분기 기준 69.4인데요, 2023년 2분기 102.9에서 큰 폭으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여수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신규 취득자는 3만 122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03명이 줄었습니다. 전국 기준 2.5%와 비교하면 2배가 넘는 증가율 감소 폭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843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09명이 늘었습니다. 증가율로는 27.3%에 달하는데 전국 증가율 3.6%보다 7.6배나 많습니다. 지방소득세도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2022년 2195억 원에서 지난해 1174억 원으로 지방소득세가 거의 절반 48% 줄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산업위기가 고용위기로 이어지고 고용위기가 경제위기로 그리고 지역위기로, 지역이 전체위기로 들불 번지듯이 악화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수시 올해 4월에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했습니다만 지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신경 써서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석유산업은 과잉공급으로 구조적인 불황에 처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부로서는 업계 자율 컨설팅을 토대로 해서 과잉설비를 합리화하고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또 필요하다면 법령에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전환을 위한 R&D 확대 등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도 같이 병행하면서 우리나라 석유화학 쪽의 산업이…… 또 더 강한 기업으로 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규근 위원 이따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훈 위원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박성훈 위원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의 철학에 대해서 저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칙도 없고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를 떠올리게 되면 몇 가지 키워드가 생각이 나는데요. 성장률 0% 그리고 재정 중독—쉽게 말씀드리면 증세입니다—그리고 반기업 정책, 여기에 더해서 한미 관세협상 이 정도 키워드가 저는 생각이 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성장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IMF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1%에서 0.8%로 하향 조정했고요. 특히 KDI가 올해 수정 경제전망에서 기존 경제전망치와 동일하게 유지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3조 2000억이라고 하는 현금성 지급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경제성장률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결국 현금성 지출이 우리 경제의 성장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일회성 소비에 그쳤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소상공인 매출 활성화에 일정 부분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는 생각하지만 이게 우리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하지 않았나, 기존 소비를 대체하는 데 그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 성장률에는 100% 반도체 품목 관세는 반영되지도 않은 전망치라는 점입니다. 이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한 발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려서라도 씨앗을 뿌려야 한다’, ‘2차 내수 활성화가 또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이 점에서 부총리님, 혹시 3차 추가 편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고려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지금 저희로서는 1차 추경, 2차 추경 그리고 금년도 본예산 집행을 더 철저하게 하는 데 우선 집중하고 있습니다.

○박성훈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 국채 이자로만 30조 원이 넘게 지급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상 처음이지요. 그리고 국민 1인당 감당해야 하는 이자는 약 60만

원 수준입니다. 우리 국가의 총예산 673조 대비해서 약 4.4%에 달하고 있습니다. 결국 나라의 빚 관리가 무엇보다도 우선인데 현 정부에는 재정준칙과 관련된, 재정건전성과 관련된 발언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원칙을 포기하셨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아닙니다.

○박성훈 위원 제가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코로나 팬데믹 당시 발행했던 국채의 만기가 이제 돌아오고 있지요. 올해가 94조 원, 내년에 98조 원입니다. 이렇게 몰오버가 되는 물량이 많아지게 되면 결국 채권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어떻게 해소하실 수 있을지 사실 걱정이 됩니다.

부총리님, 결국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이러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증세로 그리고 재정으로서 해결하겠다는 이런 시도가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 지금이 아니라 5년의 임기 동안 빚을 내서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겠다는 인식이 아닐까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재정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반시장·반기업 정책입니다. 최근에 정부가 교육세율을 인상하겠다고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박성훈 위원 금융사 수익 1조 초과분에 대해서 기존의 0.5%에서 1%로 세율을 상향하겠다고 합니다. 결국 이 세율 인상이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흡수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경제학자나 전문가들은 결국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되리라고 보는데,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그런 부분도 있지만요 이게 지금 0.5%, 1조 원 이상을 1%로 가는데 이게 1981년도 1.8조 원 규모 때 정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수치가 138조 원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도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성훈 위원 제가 구조를 보니까 손실이 더 큰 경우에도 아마 손익통산이 허용되지 않는 이런 부분으로 구조를 짜신 것 같아요. 결국 정부가 의도하는 진심은 제가 알겠습니다마는 결국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거고요. 금융상품 구조를 바꾼다든지 수수료율을 어떤 식으로든 변경해서 결국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막아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미 관세협상에 합의했다라고 합니다마는 저는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된 게 아니라 더 가중되고 있지 않느냐는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한미 관세협상 합의 시에 철강과 알루미늄 품목별 관세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것은 없었습니다.

○박성훈 위원 없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박성훈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발언한 것은 너무 성급한 것 아니었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만약에 하지 않았다면, 25% 상호관세 부분을 15%로 낮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러면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파생상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가 새롭

게 부과가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미국 정부가 원하면 언제든지 1년에 3회 정도는 부과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정부로서는 기본적으로 한국도 다른 나라보다는 불리하지 않게 하는 데 일단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또 더 낮아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열심히 합니다만 역부족한 그런……

○박성훈 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기존에 철강이나 알루미늄 부품을 생산하던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한미 FTA로 0%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가 품목별 관세까지 합하게 되면 상호관세율 15%에 그리고 50%의 품목별 관세 그리고 파생상품 관세까지, 과연 이러한 부담을 어떻게 중소기업이 떠안지 않고 회피할 수 있을지 저는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존의 FTA 원산지 기준, 그때는 생산지를 기준으로 했잖아요. 지금은 비특혜 원산지 기준이라 그래서 원재료 출처까지 따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원료의 함량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행정비용까지도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되는데 정부가 과연 우리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어떤 식의 부담, 어떤 식으로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굉장히 의문이 들고요.

제가 중소기업을 만나 보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나라에서 사업장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냐, 결국 오프쇼어링을 정부가 의도적으로 방치하고 있는……

1분만 주시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는 정부가 이제 조금 진솔하게 그리고 우리 국가경제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대기업이야 미국에다가 공장을, 생산시설을 만든다고 하지만 중소기업은 그럴 여유도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부담 완화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특히 이런 부담이 결국 국가경제 전체에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 헌법에 사실상 국민경제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울 경우에는 국회의 비준 규정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담이 결국 국가경제에 큰 부담으로 돌아오고 국민경제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비준은 아니더라도 국민 상대로 한 비용추계, 산업별 보완 대책 그리고 재원 조달 방안 등에 대해 국회에 상세한 보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지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경제정책이 증세, 반기업, 관세협상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달 말까지 아마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초혁신경제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나중에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을 보시고 판단해 주셨으면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모든 것을 증세, 재정으로만 하겠다는 의도가 없습니다. 정부가 중심이 되기보다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이 중심이 되고 기업이 R&D를 하고 거기서 정부가 도와주고 또 전문가가 도와주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품목별로 하는 초혁신경제로 간다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참 죄송하게 생각하는 게요 관세협상 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일부 역부족도 있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

중소기업들,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쨌거나 하여튼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든지 또 단계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 거기에 대해서 금융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또 재정지원을 한다든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이 위기를 극복하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업종별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을 내년 예산에다가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상 위원 저는 한은 총재님과 경제부총리께 좋은 일자리 그리고 나쁜 일자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생하고 경제 관련해서 중요한 게 보니까 일자리 그리고 물가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그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관련해서는 좀 나눠서 좋은 일자리는 무엇이고 나쁜 일자리는 무엇인지 거기에 관해서 여쭙보려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다음 것을 보겠습니다.

예전에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런 말들은 많이 들어 보셨을 거예요. 요새 저희 지역에서는 ‘어르신 한 분을 모시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으로 어르신들에 대한 돌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최근에 이런 표현을 봤습니다. ‘좋은 일자리 하나를 키우려면 온 동네, 온 나라가 필요하다’. 오늘 기재부 업무현황을 보니까 중점 추진과제에 ‘초혁신경제 전환 및 경제활력 제고’, ‘AI 대전환’ 해 가지고 ‘우리 경제 쿼텀점프 위해 전 분야 AI 대전환’을 이렇게 써 놓으시고 아래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범정부 역량 결집해 예산·세제·금융 규제 등 토털 패키지 지원’.

AI 대전환을 위해 이 정도 하신다면 좋은 일자리에 대해서는 이 2배, 3배 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시작을 합니다. 그 정도 각오는 가지셔야 되는데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없을 것 같아서요.

다음 것을 보겠습니다.

오늘 속보 난 내용입니다.

혹시 두 분 보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봤습니다.

○최기상 위원 대낮에 어떻게 이런 일이 여전히 있습니까? 이게 전형적인 나쁜 일자리의 표본으로 제기되는 거거든요, 일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 이 자체가 나쁜 일자리라고 하기보다는 왜 이게 나쁜 방식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안타까운 소식을, 만들었습니다만……

다음은 볼까요?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거지요. 3항을 보겠습니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무엇무엇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혹시 부총리님, 이 여섯 글자 뭔지 추측을 한번 해 보시겠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근로자의 행복권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아닙니까?

○최기상 위원 혹시 총재님 어떠십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잘 모르겠습니다.

○최기상 위원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인간의 존엄성.

○최기상 위원 역시 우리 기재위원장님 알고 계시는군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우리 대한민국헌법이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선조들이 이렇게만 하라는 거거든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이게 곧 좋은 일자리일 겁니다.

다음 보지요.

최근에 보도자료 보니까 취업자 수 증가했고 좋은 지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음 볼까요?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쉬웠음 인구, 뭔지 알고 계시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최기상 위원 40만 명이 넘어간다는 통계도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를 보니까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 결국 좋은 일자리를 못 찾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소위 일자리 미스매치, 일자리 부조화라는 얘기를 하던데……

부총리님, 사실은 그런 평가나 비판을 넘어서는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최기상 위원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다음 보겠습니다.

또 고령층 관련한 일자리 얘기를 한은에서 발표하신 걸 봤습니다. 아주 고민이 많으셔서 정부가 노인일자리 사업을 많이 하는데 단순 업무에 집중돼 있고 고령 노동자의 경험과 기술을 활용하기 어렵다라는 고심이 들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생산가능인구도 줄고 어르신들이나 일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좋은 일자리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의지와 목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보겠습니다.

결국 일자리라는 것은 월급봉투의 숫자를 넘어서는 것이다. 가령 가장이 일자리를 상실했을 때는 소득 상실을 넘어서 배우자·아이들과의 갈등, 아이들의 교육, 아이들의 미래, 그러니까 저당 잡힌다는 평가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나라에서 실업수당이나 다른 방식의 금전 보전을 넘어서서 일을 함으로써 본인이 인간의 존엄을 얼마나 지킬 수 있고 아이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의 생성은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것은 혹시 자료를 보신 적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일자리 하나를 만들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게 오스트리아의 마리엔탈 마을이라는 사례 얘기가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한번 찾아보시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결국 좋은 일자리의 반대가 나쁜 일자리인데요. 말씀드렸듯이 산업재해가 가장 대표적인 나쁜 일자리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또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은, 특히 기재부총리께서는 경제부총리시기도 하니까 꼭 좀 챙겨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자리에 대한 평가를 이론적으로는 이런 말씀을 하더라도요. 약자가 동등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가 그리고 그 논의에서 동등하게 존중받는가 그리고 소득은 충분히 받고 있는가, 이 말은 오늘 이 산재 사건 등을 보더라도 위험한 상황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 일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평가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그런 위험한 일을 하면 그에 대한 보상이나 인정이 충분해야 되지 않을까요?

또 하나 넘어갈까요.

결국 좋은 일자리라는 부분이 안전과 적정 소득 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부분인데요. 아까 기재부총리께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AI나 기계·기술 도입에도 전 정부가 동원되는데 한 가족과 한 사람의 존엄과 미래를 책임지는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그 정도 각오를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계획을 우선 한번 말씀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다음 질의 때 계속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말씀에 가슴이 찡합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도 어떻게 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 것이냐 그게 고민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좋은 기업을 만들고 새로운 성장 기업을 만들고 이게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첫걸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는 그런 기업에 취업을 하려면 거기에 맞는 합당한 기술이라든지 무슨 자격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특히 지금 현재는 AI 툴을 활용하면 좋은 기업에 가서 취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AI 교육을 시키고 또 군에 간 청년들은 군 재직 기간 동안에 진짜 거기서 AI 교육을 시키고 또 영어교육이라든지 필요하면 교육을 시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또 좋은 일자리에 갈 수 있는 자격을 만들어서 청년들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또 좋은 일자리라는 게 여러 가지 근로조건이라든지 또 안전 이런 조건이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정부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사금액에 반영한다든지 그게 안 되면 계약에서 탈락하게 한다든지 다양한 조건을 통해서 안전한 일터를 만들게 하고 또 그래서 이렇게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조건을 줘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는 경우는 페널티도 강화하는 그런 양면 전략을 통해서 가능하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거기에는 또 저희들이 R&D를 통한다든지 기술혁신을 통해 가지고 경쟁력을 가지는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좋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기상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최기상 위원님 감동적인 질의였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위원님, 배당 분리과세 때문에 이리 오셨지요?

○이소영 위원 아니요, 뭐 꼭 그렇지는 않고 국가경제 전반에 대해서 좀 배우고 싶어서 왔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차규근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실 때 제가 옆에서 이렇게 살짝살짝 보니까 막 그런 것 같은데 한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영 위원 예상하신 질의는 오늘 하지 않을 거고요.

○위원장 임이자 그래요?

○이소영 위원 첫 회의니까요.

○위원장 임이자 기대했는데.

○이소영 위원 제가 그동안 국토위 활동을 하면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나름 관심을 가지고 고민들도 같이해 왔는데 오늘 기재위 와서 첫 회의이니만큼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질문을 몇 가지 드려 보고 싶습니다.

먼저 한은 총재님께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답이 있는 질문은 아니고 답답하실 것 알면서 질문드리는 건데 저도 부동산 공급대책이나 전세사기대책, 미분양대책, 각종 갖가지 대책들을 죽 지켜봐 왔는데 작년부터 부동산시장이 심상치 않았던 것은 사실이고 한은 업무보고 자료에도 자세히 지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지역 중심으로 지금 주택가격 과열 양상이 작년부터 감지돼 왔고 다행히 6·27 대책 발표되면서 급한 불은 꺾다는 평가들이 있는데 그것 또한 두 달 정도 지나니까 약발이 조금씩 약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8월 11일 조사, KB 자료 기준으로 보면 주간 상승률 높은 구가 벌써 0.46%까지 올라왔고 전년 말 대비 상승률도 높은 곳이 14%, 13%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위태로운 상황인 것 같은데 총재님, 한국은행 수장이시기도 하고 또 금리 결정하는 금통위 위원장이셔서 아마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좀 시급하게 필요한 정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이소영 위원님이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금통위가 다음 주에 있어서 제가 어떤 발언을 하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서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겠고요.

○이소영 위원 이해합니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저는 지금 말씀하신 수요와 공급 외에 서울로 집중되는 유입을 막는 정책도 같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소영 위원 구조적으로는 그렇지요.

지난달이지요, 7월 10일 날 금통위 결정문을 보니까 향후 통화정책은 성장 하방 리스크 완화를 위해서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 나가는데 여러 정책 상황 변화와 물가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하겠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읽었을 때는 금리인하는 성장을 때문에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로 인한 부동산가격 상승이나 가계부채 증가나 이런 것들이 우려돼서 솔직히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으로 읽혔고요. 답변 안 주셔도 되고.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시기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소영 위원 그래서 지금 금리를 내리자니까 주택가격이 걱정이고 또 금리를 동결하자니 성장률이 걱정인 그런 딜레마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어쨌든 금리 결정하는 데 있어서 주택가격이 좀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달라고 하면 말씀이 어려우시겠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원칙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한국은행의 주요 목표는 물가안정입니다. 그래서 물가가 안정된 상황에서는 저희가 금융안정을 보는데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이 가계부채와 연결돼 있고 서울지역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50% 이상이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달리 부동산가격이나 가계부채에 조금 더 웨이트(weight)를 두고서 통화정책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소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재부총리께도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6·27 대책 약발 이제 점점 떨어지고 있다, 아까 수궁하시는 표정을 봤는데 후속 대책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언제 나오냐 이런 시장의 의견이 많다는 것 아실 겁니까.

6·27 이후의 후속 대책 준비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소영 위원 언제쯤 발표되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지금 저희들이 대책을 다양하게 마련해야 될 것 같아서요. 지금 여러 아이디어도 구하고 또 전문가 간담회 등도 하고 이렇게 해서 관계 부처가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빨리 발표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의 지표들을 보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이소영 위원 그리고 총리님, 아까 앞선 질의 답변하고 좀 관련된 내용인데 저는 우리 사회가 너무 오랫동안 부동산 불패 신화가 이어져 오다 보니까 국민들 자산이 부동산으로 좀 비정상적으로 편중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아마 다들 공감하실 거고.

한국은행이 매년 발표하는 국민대차대조표 2024년 말 자료를 봐도 우리나라 국민 순자산이 부동산에 80% 편중되어 있고요. 가계, 물론 여기 비영리단체도 포함되는 지표기는 한데 이걸로 좁혀 봐도 74.6%가 부동산, 개인 기준 다른 통계들도 다 마찬가지로 칠팔십프로가 다 부동산에 쏠려 있는데 이게 사실 정상적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선진국은 보통 대략 절반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편중되어 있으니깐 부동산가격이 끝 간 데 없이 점점 올라가고 국민 대부분은 부동산 대출의 노예가 돼서 평생을 살아가고. 이런 국민 자산의 부동산 편중, 이것을 일부라도 바로잡아 보자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그 의지의 표명으로서 코스피 5000이라는 표어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이소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5000이나 6000이나 이런 숫자는 저는 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별로 얘기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이 정책이 단순히 주식투자하는 사람들 돈 많이 벌게 해 주자 이런 것이 아니고 이런 비정상적인 우리 대한민국의 부동산 자산 쏠림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부동산 말고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고 돈을 흘려보내기 위함이다, 그런 경제개혁의 목적을 가

지고 있는 정책이다라는 것을 부총리님께서 별로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아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소영 위원 그러면 자신 있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코스피 5000이 정책으로 만들 수 있는 거냐, 주가지수는 그냥 경제의 결과물이나? 저는 정책으로 어느 정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변 나라인 일본을 봐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님, 지금 저희 코스피 3200 정도라고 하는데 소위 PBR이라고 하지요, 주가순자산비율이 우리나라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10 정도 안 됩니까?

○이소영 위원 1.0입니다.

대만이 얼마, 2.4. 일본이 1.6, 브라질 태국도 1.6, 1.7. 신흥국 평균이 1.8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보다도 주가가 너무나 못 미쳐서 1.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옆 나라 일본인 1.6만큼만 높여도 코스피지수가 얼마가 되는지 아세요? 5100입니다. 그런데 왜 안 됐느냐? 우리나라 기업들이 배당을 더럽게 안 하거든요. 여러 요인도 있지만 가장 불리한 선택지라서 배당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짓을 해서 기업의 성과를 다 빼먹고 주주들한테 주지 않거든요.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까지 국장 탈출했던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만 바로잡아도 자본시장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바로잡는 정책을 하자고 하는 것이고요.

○위원장 임이자 1분 더 주세요.

○이소영 위원 그런데 지금 정부의 정책으로 너무나 저평가돼 있는, 눌러 있는 코스피가 앞으로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큰데 7월 이후에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실종됐습니다. 기재부 업무보고 자료에도 소위 말하는 코스피 5000이라는 표어로 대변되는 과감한 자본시장 활성화 노력 이런 것들이 거의 드러나 있지 않아요.

정부의 세제개편안, 특히 배당소득세 개편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얼마나 엉터리로 만들어져 있는 정책인지는 제가 기재위 왔으니까 앞으로 차차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새로운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은 저속한, 가벼운 ‘부자 되세요’ 구호를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부동산의 노예가 되지 않고 균형 잡힌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라는 점을 부총리께서 명심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지금 한국 경제가 사실은 부동산에 너무 과도하게 익스포저(exposure)돼 있는 부분은 한국 경제의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비중을 줄이고 자본시장 가야 된다는 것에 동감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자본시장을 5000이 되든 1만이든 갈 것이냐, 그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자본시장의 플레이어인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지지 않고는 아무리 무슨 증권거래세를 낮춰 주고 뭐를 하더라도 이게 잘못하면 오히려 주식시장에 뛰어들게 해서, 국민들한테 오히려 자본시장에 뛰어들어라 해 놓고 부동산에 놔뒀으면 괜찮을 걸, 더 망쳐서는 안 된다는 그런 책임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시장이 5000이 되든 우리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져서 기업들이 수익을 창출해 가지고 진짜 누구나 투자하면, 내버려 두면 진짜 엄청나게 주식이 올라가고 돈을 번다는 차원이 아니고 자동적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여기에다 가장 중점을 두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물론 단계적으로 저희들 정부가 이렇게 증권거래세라든지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펴는 부분은 있지만요 그런 부분을 넘어서는 자본시장의 어떤 불공정거래라든지 다른 요인까지도 다 포함하고 또 중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남북 간의 관계 이런 부분도 우리 주식시장의 PBR을 줄이는 굉장히 큰 요인이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다 해서 결국은 실력 있는 대한민국 주식시장 그래서 누구나 주식시장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고 부동산은 들고 있는 게 인구구조라든지 여러 가지로 지금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또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하고 똑같이 저는 동의를 하고요. 이런 자본……

○이소영 위원 부총리님, 설명을 길게 해 주셨는데요. 자본시장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북관계가 디스카운트 요인이었던 것은 옛날얘기고요. 우리보다 안보가 더 불안정한 상황에 있는 대만도 우리보다 자본시장이 훨씬 더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의 지금 디스카운트 요인은 정부가 일관된 정책 시그널을 주고 좋은 정책, 활성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방점을 두고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그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이자 다음은 국민의힘 이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선 위원 부총리님, 제가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자료가 잘 오지 않습니다. 결산 자료나 오늘 봐야 될 자료도 어제 오후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대로 볼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료 제출을 제각제각 해 달라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선 위원 사실 자료제출은 결국은 우리가 국회법상에 꼭 해 줘야 될, 지연하거나 안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야당에 대해서 기재부가 자료를 안 주나 생각하고 보니까 늘 안 왔더라고요, 기재부가. 자료제출을 꼬박꼬박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이인선 위원 그리고 지금 전 국민 소비쿠폰 8조가 풀려서 소상공인이나 서민들이 이제 조금 활기가 돈다고 느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어쨌거나 특히 지역 같은 경우는 우선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인선 위원 조금 그런 분위기가 있지요. 있는데, 한 가지 여쭙보면 삼성이나 LG, 하이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대형마트에서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인선 위원 사용 못 하지요?

그러면 70조가 넘는 중국 거대 기업 샤오미에서 이걸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샤오미 매장?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샤오미 매장에서 사용 못 합니다.

○이인선 위원 사용 못 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이인선 위원 못 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점검해 보시고요.

사실은 우리가 서민이나 소상공인을 위한 소비쿠폰이 지금 어떻게 설계가 돼서 중국 대기업에 이렇게 사용했고, 3주 정도 전에 알게 돼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3주 동안 방치가 돼서 우리 서민에 가야 될 돈이 이미 중국에 넘어갔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인선 위원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이인선 위원 그리고요 어쨌든 이러한 걸 보면서, 얼마 전에는 포스코이앤씨가 산업재해가 두 번째 일어나게 되고 인명사고가 나고 하면서, 포스코이앤씨나 DL건설이 보면 전국적으로 150개 사업장에 15만 정도의 일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협력업체 전체 자산도 한 5조가 되고 2100개의 협력사를 가지고 있는데, 물론 극도의 엄벌주의로 해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기업에 대해서 영업정지 그리고 면허취소, 압수수색이 이렇게 막 들어가고 있습니다. 엄벌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게 맞기는 한데 그래도 어쨌든 건설업계가 너무 위축이 돼 있는 상황인데, 이런 토목·건설업계가 이렇게 되면서 관련된 근로자나 관련된 업장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불안하고 또 불만이 많아지고 위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이 방법밖에는 없는 건지, 그래서 어쨌든 국민의 정부라고 시작을 했는데 한쪽에 벌을 주는 것하고 그 벌로 인해서 힘든, 양쪽의 상황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잘 구분을 해서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이번 이 상황은 우리는 실제로 포스코이앤씨 사업장을 갖고 있지는 않고 우리 피부에 와닿지는 않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2100개의 업체들은, 먹고사는 일자리는 굉장히 위급한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하여튼 해 주시는데, 소비쿠폰이나 중대재해처벌법은 물론 기재부 부총리의 소관은 아니지만 그래도 행안부나 국토부가, 전체 경제 컨트롤타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한쪽에, 오른쪽 왼쪽에 결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마는 서민들의, 그분들도 다 서민이고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제일 위의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벌금을 주거나 어떻게 하는 건 좋은데 전체적으로 영업정지나 면허취소가 되면서 사업장이 일차

적으로 지금 다 문을 닫게 되는 그런 일들이,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이재명 정부의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칼로 베듯이 엄벌주의는 맞는데 자칫 잘못하면 자만스럽게 가다 보면 우리 국민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부작용이 빨리 나타나게 되지요. 그래서 최근에는 화무백일홍(花無百日紅)이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총리님께서서는 하여튼 이런 전반적인 것을 수장하시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보면, 제가 질의를 하면서 건전재정성에 대한 얘기를 늘 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건전재정보다는 확장재정으로 가면서 현재 국가부채가 1300조고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GDP 대비 4%를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에 우리가 어물쩍하게 이자비용이 2020년에 18조 6000억에서 2024년 28조 2000억으로 10조 가까이 늘었다고요.

그래서 빚을 내서 잔치를 하는 이 부분이 어떤 상황이 드냐 제가 고민을 하면서, 심지어 나라 빚은 3대가 갚아야 되고 3대가 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8월 15일 날 광복절 행사에 국채보상공원에서 행사를 하면서, 그때 우리가 대한제국 말기에 졌던 그 부분들이 아마 1300만 원인가 부채를 갚기 위해서 금비녀나 반지를 팔아서 마련한 돈이 23만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겁니다, 계속적으로 운동이 펼쳐지지 못하도록 막았기 때문에. 아무튼 이렇게 전 국민들이 빚을 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빚을 내서 우리가 뭔가를, 쿠폰을 하고 할 때도 제대로 하는지, 아까처럼 그것까지 어떻게 설계했는지는 모르지만 샤오미 매장에서 썼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담당하는 행안부하고 잘 협조를 해서 그걸 꼭 봐 주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가 늘어나고 이런 상황부터 보면 어쨌든 빚장을 풀기 시작하면 진짜 빚을 자꾸 내야지만 유지를 해야 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과 또 이런 확장재정으로 가야 되는 부분하고 양쪽이 굉장히 어렵기는 합니다마는 최근에는 이리다가 또 제2의 IMF가 오는 것 아닌가 불안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총리님께서서는 조종석에 딱 앉으셨으니까 건전재정과 확장재정 양쪽에서 짊어지고 이 부분들을 어떻게 컨트롤을 해 주셔야지 자칫 잘못하면 헛들이 오른쪽 갈 수도 있고 왼쪽 갈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 주셔야 우리 기업들도 살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상공인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재정 건전성을 하루하루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하루하루는 조금 아니고 이것을 한 달로 할 것이냐 이런 식의 개념으로 보신다면요 저는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건 전문가입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너무 건전성만 고집하다 보면 지금은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AI 대전환을 위해 가지고, 한국이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한국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단기적인 건전정보다는, 단기적으로는 재정을 좀 쓰는데 제가 무조건 쓰자는 게 아닙니다. 아낄 부분은 과감하게 저성과 부문은 줄이고 날 부분은 진

짜 돈이 없어 가지고 연구를 못 하는 이런 것은 막아서 중장기적으로는 기업이 발전하고 그래서 GDP가 성장이 되고 GDP가 올라가서 또 다시 적자비율이 떨어지고 국가채무비율이 떨어지고 하는 이런 선순환구조로 가겠다는 소신이 있다는 걸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런 방향으로 제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선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고, 하여튼 균형을 잘 잡으셔야 된다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규근……

박민규 위원님, 기재위에 처음이시지요?

○박민규 위원 예.

○위원장 임이자 인사말씀과 더불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규 위원 위원장님께 임팩트를 못 드려서 제 이름을 아직 기억 못 하시지만, 박민규입니다.

서울 관악구갑 국회의원이고요. 사실은 정태호 간사님께서 같은 지역구이시기 때문에 가급적 기재위를 오지 않으려고 했지만 임이자 위원장님의 멋진 영도력을 잘 따르기 위해서 이번에 진출 왔습니다. 참고로 과방위에 있었기 때문에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대학 때 경제학을 전공했지만 그렇게 경제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아직 아는 게 부족한 초선의원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일단 기재위 온 게 너무 영광스럽고요.

부총리님께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와서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기획’이라는 것을 한번 쳐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돼 있네요. 기획이라는 것은—아마 한자가 이것인데—일을 꾀하여 계획함입니다. 꾀한다는 게 어찌 보면 준비한다는 뜻일 것 같고요. 어쨌든 기획재정부는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부처이기도 하지만 부총리로서 미래를 준비하는 플랜을 짜는 부서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는 부총리님께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지 좀 여쭙보고 싶은데, 제가 인식하는 것은 IMF라 하면 외환위기, 97년도 외환위기 때는 우리가 단기 외환의 유동성의 문제였고 일부 대기업의 문제지요, 차입경영의 문제로 국민들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는 대한민국 금융산업이 워낙 국내에만 머물고 있고 해외에서 돈을 벌 수 없는 실력이 없는 금융, 여전히 지금도 그러고 있는데 그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파생상품에 투자하지 않아서 대한민국은 그나마 위기가 짧게 끝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93학번인데요 제 선후배들이 기획재정부에도 많고 관료들이 많은데 다들 일할 맛이 안 난다고 합니다. 이유는 과거 93년, 95년에 입부했다 하더라도 과거의 위기는 극복이 가능했는데 현재 대한민국의 지표는 구조적인 불황이어서 극복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앞이 안 보인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재명 정부는 과거 윤석열 정부 3년, 문재인 정부 5년, 누구의 잘못이라고 평가할 이유가 없을 정도로 위기 상황이어서 대한민국의 경제 전반적인 구조조정을 해야 될 때라고 보이는데, 기재부의 조직도를 보니까 경제구조개혁국, 이름만 거

창합니다. 내부 업무를 보면 그렇게 개혁의 업무는 별로 없습니다. 미래전략국 또한 이름만 미래전략이지 미래전략, 구조조정 이게 부족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부총리께서 기재부 내에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을 광복 80주년에 맞춰서 우리가 선진국이 된 지도 몇 년 됐지만 금융위기 또는 외환위기를 겪은 뒤, 97년 이면 28년 지난 것 아닙니까? 그 후 28년 동안 우리 정부가 어떤 구조개혁을 놓친 게 꽤 많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TF를 꾸리든, 거기에 대한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제가 보는 한 1997년 외환위기든 그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든 그 당시에 한국은 단기적으로 쇼크가 오면 성장률이 떨어지더라도 원복, 복원하는 능력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경제 전체가 이렇게 올라가는 트렌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오히려 경제가 이렇게 내려가는 구조인데 그게 왜 그러냐 봤더니만 과거에 추격 경제 시스템을 한국이 잘하다가 이제는 한국이 선진국입니다. 우리의 경쟁 상대자들이, 소위 선진국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글로벌 1등의 경쟁력 적어도 2등, 3등의 경쟁력을 가져야지만 개내들하고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조직은 제가 일일이 건드리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선 당장 초혁신경제로 가자 해서 아마 이달 말까지 발표할 것인데 그 내용을 좀 봐 주시면 한국 경제의 지향하는 어떤 방향이 나타날 것이고 그걸 하기 위해서 재원을 그쪽에다 집중해 넣었고 그다음에 하반기 9월 달부터 당장 그걸 실현할 수 있도록 기업들하고 협업을 해서 그걸 실현하는 데, 그래서 글로벌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식의 전략을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민규 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필요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박민규 위원** 두 번째는 아까 이소영 위원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대한민국이 대만에 비해서 GDP도 거의 2배 이상 많고 인구도 약 2.2배 그런데 시가총액은 비슷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경제가 불황일 경우에는 돈이 움직이도록 정부 부처는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아까 이소영 위원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자본시장 관련해서 관심 가져 주시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박민규 위원** 두 번째는 제가 과방위에 있다가 왔는데 기초실장님과 면담할 때 두 가지 제가 기재위원으로서 집중하겠단 말씀을 드렸던 것은 과학 R&D 예산, 윤석열 정부에서 사실 비효율성을 해결하겠다는 그 방향은 좋았습니다. 방식이 문제였던 거지요. 그런데 어쨌든 R&D 예산을 과기부에 혁신본부를 만들어 가지고 조직까지 만들어 놔는데 우리가 6월 달, 7월 달 법에 의해서 점검한 것을 다시 예산실 과장과 사무관이 과기부 산하기관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 한 번 또 점검합니다. 이것은 R&R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이왕 과학기술 예산에 대한 전문성을 과기부로 인정했다면 맡겨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아울러 과방위를 통과한 과학기술 예산 R&D 개선안에 대해서도 기재위에서도 속도감 있게, 저도 노력할 테니까 좀 도와주십사 말씀드리면서 마치

막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진 지 이제 한 20년 됐습니다. 예산처에서 만들었던 건데 공공기관의 합리적인 관리 감독의 권한을 기재부가 굳이 지금까지 갖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운법에 대한 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공공기관 조항 한번 협의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저희 방에 와서 설명해 달라고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R&D 쪽은 사실은 과기부나 저희나 싸울 일이 전연 없고요. 어떻게 하면 R&D가 제대로 편성이 돼서 성과를 내고 그게 국가경쟁력 제고가 되고 국민경제 발전을 시키느냐 이런 방향으로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같이 손잡고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운법 관련해서도 부처에 자율성을 줄 부분은 주고 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높낮이를 맞춰야 될 부분은 맞추는 이런 식, 말씀하신 R&R을 잘 설정해서 결국은 국민들에 플러스가 되는 그런 공공기관 관리·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말 질문을 많이 하고 싶은데 뭘 할까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막판에 제가 주제를 좀 바꾸기로 했습니다.

여하튼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의 가장 큰 목표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정태호 위원 그것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기술 선도 성장이고 그래서 대한민국을 AI 시대로 전환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부총리께서 제안하신 초혁신경제를 추진하시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정태호 위원 이걸 들으면서 제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현장 방문을 통해서 몇 가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초혁신경제가 실현될 수 있을까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서 질문을 드려 볼게요.

리벨리온, MPU를 만드는 조그마한, 조그맣지는 않지요, 벤처기업인데 그다음에 마음 AI라는 또 퍼지컬 AI를 하는 회사인데요. 거기서 공히 하는 얘기가 스타트업 또는 벤처기업의 초기단계에 대한 지원 대단히 잘돼 있다고 그러합니다. 그런데 초기단계에 있는 기업들이 고만고만하게 경쟁하는 구조가 지금의 우리의 현실인데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하고 대결을 하려면 리벨리온 사장은 엔비디아하고 자기네들이 싸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규모도 말도 안 되지만.

그러나 이게 진짜 가능하려면 스타기업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 규모가 1000억, 2000억 정도의 투자 규모를 해 줄 데가 없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코스닥시장이 활성화돼 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코스닥시장은 개인주주들이 그냥, 소액주주들이 투자하는 시장으로 전락해 버리는, 그러니까 코스닥시장이 역할을 못하는 거라. 그런데 외국자본을 받으려니까 이 기업이 국적이 문제가 돼 버릴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면 스케일업 단계에서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자본시장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 줄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한 과제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대책이 뭔지, 보고서를 보니까 그 내용이 없어 가지고 하나 여쭙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현대자동차를 갔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현대자동차를 간 이유는 자율주행 부분을 저희들이 보려고 갔는데 사람들이, 연구진들이 다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물어보니까 전부 다 테슬라로 간다는 거예요. 이유는 보상 체계가 잘 안 돼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고민이 되지요. 우리가 점점 경제는 성장했는데 빈부격차는 심해지고 있고 첨단 분야에 있어서 임금을 대규모로 올리면, 대폭 올리면 또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도 않고. 이 보상 체계를 어떻게 만들어 줄 거냐 이게 결국은 우리의 과제가 되는 데…… 결국 AI 시대 초혁신경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그 인재를 어떻게 육성하고 나가려고 하는 인재를 어떻게 붙잡을 수 있을 것이고 외국에 있는 인재를 어떻게 유입할 것이고 이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우리가 안고 있는 거지요. 여기에 대한 답이 없으면 뭘 해도 저는 성공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 번째로는 서울대학교 AI연구원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연구원에서 들은 얘기뿐만 아니라 과거의 얘기를 제가 좀 더 하고 싶은데, 서울대학교에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을 만들었는데 그때가 AI 시대를 염두에 두고 대학원을 만들었는데 한 300명 규모의 대학원생을 육성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육성하려고 딱 규모를 잡아 보니까 다른 과 교수님들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과가 만들어지면 다른 과 인력을 줄여야 되거든요. 교수 인력을 줄여야 되거든요. 하여튼 정원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그런데 이 정원 문제가 수도권에서는 잘못하면 이 정원을 늘려 버리면 또 수도권 중심으로 대학이 몰려 버리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지금 서울대 AI 연구원도 똑같은 문제에 부딪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교육과정 그다음에 자본시장의 문제 그리고 지금 인력의 육성, 유입 그다음에 유출 이 세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문제에 부딪히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고를 받아 보면서 느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답이 안 보인다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드는 거지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한 부총리님 의견을 한번 들어 보고 싶은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첫 번째 말씀 주신 부분은 사실은 이게 제가 보니까요 사실은 큰 문제입니다. 테스밸리 전까지는 이렇게 자금이 아주 작은 단위에서는 잘 되어 있는데 이게 점핑을 하려면 재원이 없는데 그래서 첫째는 기존의 자금 중에서는 모태펀드가 있습니다. 모태펀드의 위험 투자를 좀 늘릴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AI 관련해서 국민성장펀드라고 자금을 100조 이렇게 지원하게 되

면 여기서 과감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그렇게 정부가 유도를 해서 진짜 실력만 있고 될 만한 기업이라면 돈이 없어서 성장을 못 하는 일은 없도록 이렇게 정부가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인력 관련해서는 세 가지 부분인데 국내에서 AI 또는 과학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문제 그다음에 이 인력이 해외로 안 나가는 문제 그다음에 해외에서는 유능한 인력이 들어오는 문제 부분인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이번에 경제정책 방향에다가 같이 넣어서 자세하게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나중에 더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AI 전문기술 인력 양성 그리고 해외로 안 나가도록 뭔가 하여튼 단 같은 것을 만드는,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줘 가지고 거기에서 성과를 내면 굉장히 나중에 보상, 아까 말씀한 대로 보상시스템을 개편해서 보상을 많이 받도록 하고 또 해외에 있는 인력을 국내로 이렇게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돈을 좀 쓰더라도 필요한 인력, 필요한 기술을 가진 인력이라면 과감하게 좀 유치를 하자, 그게 대규모일 수는 없겠지만 그런 전략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 연구원이라든지 또 공대 같은 경우, 우리가 필요로 하는 소재라든지 AI 관련이라든지 데이터 관련은 사실은 저는 인력을 아예 한도 외로 늘려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내버려두면 수도권만 늘어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방부터 이런 분야의 인력을 늘린다고 하면 교육부총리 새로 오시고 이러면 진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협의도 하고 이래서 지방은 진짜 과감하게 늘려 주고 또 수도권은 집중을 막으면서 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기존에 있는 과가 줄어드는, 입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줄어드는 티오를 과감하게 전환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필요한 인력은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과감하게 공급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태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대전환의 시기이지 않습니까? 대전환의 시기에 맞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저도 위원님하고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박수영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영 위원** 부총리님 지난 7월 31일 날 세제개편안 발표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박수영 위원** 오늘 업무보고 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박수영 위원** 두 가지 사이에 하나 빠진 게 있는데 뭔가 아십니까?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7월 31일 날은 지난 정부에서 50억 늘려 왔던 것을 10억으로 낮추겠다고 했고 오늘은 그 내용이 쪽 빠졌는데 안 하겠다 이런 의도로 읽으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실수로 뺐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고 심사숙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수영 위원 너무 속도가 느린 것 아닙니까, 주식시장은 출렁이고 있는데?

부총리님 개인 소견은 뭔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여러 가지 상황을 봐야 되는데요. 또 국민적인 입장 그리고 또 정부가 보는 입장 그리고 재정 측면에서 보는 입장 여러 가지가, 사실은 이게 입장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영 위원 글썄요,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용산이나 당의 입장을 너무 눈치 보시는 것 아닌가, 경제 수장답게 소신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대미 협상에 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그래프 지난번에 한번 보셨을 텐데 한국은행 총재님 계십니다마는 우리나라 기업들과 정부가 연간 설비투자 하는 금액 200조를 조금 넘고 있고요, 250조는 안 되는 금액인데 지난번에 부총리님 가서서 3500억 불 대미 펀드 하겠다고 한 것은 그 금액, 우리 1년에 설비투자 하는 금액 전체의 2배에 달하는 엄청난 돈입니다.

일부 보도대로 25일 날 가서 또 추가로 투자하겠다고 약속을 하시게 되면 3배, 5500억 불, 즉 일본 수준에 가게 되면 우리가 연간 투자하는 돈의 한 3배 정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돈인데 25일 날 가시면 또 1000억 내지 2000억 정도 추가 투자를 약속하실 예정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 부분은 기업들이 하는 부분입니다.

○박수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업들이 추가로 또 더 할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니까 우리나라의 돈이 약 5000억 가까이 나간다 이것은 틀림없는 얘기네요? 그렇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지금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미국에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박수영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합하면 그 정도 된다는 얘기가 되고, 그렇다면 다시 질문할게요.

3500억 불은 아까 존경하는 권영세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정부가 투자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박수영 위원 투자, 보증, 대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박수영 위원 정부가 그렇게 투자를 하면 정부가 485조 원, 트럼프 임기 중에 3년으로 쪼개서 한다면 1년에 한 150조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돈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요, 물론 트럼프는 자기 임기 중에 투자하기를 원하겠지만 사실은 부지를 선정하고 설계를 하고

공장을 짓고 하는데 3년 안에 그 돈이, 저는 사실상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수영 위원 5년이나 6년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5년 해도 1년에 100조 정도 나가야 되는데 정부가 우리 예산 규모가 얼마인데 100조를 어떻게 조달하고요, 보증을 선다고 하더라도 산은이나 수출입은행 또는 무보의 자본금을 늘려야 할 텐데 지금 맵시만으로 보증 서고 있지 않습니까? 이 돈을 어디서 재원을 확보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것은 정부가 출자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수영 위원 그러니까 출자를 하는데 정부 예산은 어디서 나오냐고요, 100조, 200조 되는 돈이? 도대체 저는 아무리 봐도…… 우리 예산 670조, 700조 정도 되는데 그 100조를 1년에 투자한다, 150조를 투자한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게 1년에 100조, 150조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박수영 위원 그런데 약속은 하셨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토털, 총액만 확정해 놓은 거고요.

○박수영 위원 그리고 이것도 말이지요, 우리 기업이 투자하는 것은 아니라고 아까도 답변하셨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박수영 위원 그러면 우리 정부가 보증을 서고 대출을 해 주는, 그 대출을 받고 보증을 받은 기관은 어디입니까? 기업이 아니면 누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미국에 있는 조인트벤처 회사가……

○박수영 위원 미국 회사들이 하는데 우리가 보증을 서 준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회사가 하는데 우리가 보증을 해 주고 이렇게, 거기서 사업을 하게 되는 거지요.

○박수영 위원 글썄요,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요……

○박수영 위원 저는 좀 더 연구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그런데 조선만 따지면요, 미국의 조선업 관련된 기업이 아무도 없습니다.

○박수영 위원 아니, 조선은 그렇다 치더라도 나머지는 또 그렇지 않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나머지도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박수영 위원 글썄, 우리 기업이 보증받아서 투자하는 게 오히려 우리 기업에게 더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브룩 롤린스 장관 혹시 저번에 가서 만났습니까? 미국 농무부장관 안 만났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저는 못 만났습니다.

○박수영 위원 이 양반이 AFPI, 즉 아메리카 폴리시 퍼스트 인스티튜트(America First Policy Institute)를 만든 양반이거든요. 이분이 이달 초에 국내 언론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25일 날 쌀 시장 완전 개방을 요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부총리님 지난번

답변은 ‘쌀시장은 전혀 개방 안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농림부장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 정말 직을 걸고 막을 수 있습니까? 지난번 답변하신 것 사실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트럼프 대통령하고는 사실입니다.

○박수영 위원 그런데 왜 밑에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박수영 위원 대변인 그리고 농림부장관 그리고 왜 이렇게 지금 다른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것은 미국에 아마…… 미국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수영 위원 하여튼 잘 지켜 주셔야 될 것 같고, 말씀하신 것 꼭 지키십시오.

그다음에 드디어 우리 올해 국채 이자가 30조 원을 넘게 되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박수영 위원 룰오버나 리볼빙 한다 하더라도 이자는 계속 나가야 되니까 이자만 해도 30조,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나가고 있는 정도로 우리 재정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D1·D2·D3·D4 중에 우리 정부는 D4는 인정을 안 하니까 D1·D2·D3를 보더라도 정부는 계속 D1만 발표해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것만 부채율을 발표하는데 국제 비교기준은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D2입니다.

○박수영 위원 D2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박수영 위원 그런데 왜 D2를 정부는 발표를 안 하고 있고 오히려 IMF가…… 우리 정부는 23년까지만 발표했어요. 보시면 그런 색으로 녹색 선이 D2 선인데 D2를 우리는 23년까지만 발표를 했고 빨리빨리 발표를 안 해요. 그런데 IMF는 25년 전망까지 내놨습니다. 25년 가면 우리나라는 GDP 대비 56.6%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내놨는데 왜 기재부는 빨리빨리 안 내놓는 겁니까? 국제기준을 빨리 내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검토해서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저희들이 D2 기준은 발표를 합니다.

○박수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빨리빨리 해야지요. 지금 2024년 게 발표가 안 됐다니까요, 25년인데.

그다음에 D3도 마찬가지로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D4까지 발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군인·공무원·국민연금에 대한 연금충당부채가 법률에 의해서 보전해 주도록 지금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는 없는데 우리가 그 규정이 있으면 그것도 다 우리 적자지, 우리 부채지요. 그런데 왜 D4는 또 포기를 하고 D1으로만 계속 고집을……

1분만 더 쓰겠습니다.

D1으로 계속 고집하시는 것은 부채 규모를 작게 보이게 하는 착시현상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일부 정치인들 중에는 우리 GDP 대비 아직 50%도 안 넘었다, 미국보다 훨씬 적

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D4 기준으로 하면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 되는 겁니다. 미국은 사적연금이나 공적연금에 대한 충당부채 이게 없어요. 우리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같은 기준으로 비교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는 D1·D2·D3·D4를 전부 다 발표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재정이 어려운데 대통령께서는 ‘빌려서라도 써를 뿌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210조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돈은 어떻게 충당할 생각입니까,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지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로는 210조가 세입 확충을 통해서 94조 그다음에 지출 절감을 통해서 106조, 민간투자 활용해서 10조 이렇게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수영 위원 구체적으로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일단 이렇게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영 위원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오늘 부총리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 지난번에도 마찬가지로 애매한 부분은 애매하게 피해 나가시면서 뭘 하시려고 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관세에 대해서 좀 여쭙보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가 몇 %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지금은 50%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이 50%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자동차 부품 50%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자동차 및 자동차 관련……

아, 25%……

○위원장 임이자 깜짝 놀랐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제가 철강을 착각했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왜 이러십니까, 진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이자 정말…… 제가 놀랐습니다. 지금 이 방송 보고 있는 분들 다 놀랐을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이자 그리고 철강은 50%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위원장 임이자 그러면 자동차 완성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부품 협력사가

1차·2차·3차까지 해서 총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일반 구매까지 해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잘……

○위원장 임이자 자동차 부품 관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우리 국민들이 지금 가슴을 졸이고 있는데 이것을 잘 모르신다는 말입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대응 지원책을 마련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한 9000여 개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지금 자동차 부품을 우리가 수출할 때에 관세가 0에서 몇 %라고요? 15%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자동차는 지금 25%입니다. EU·일본·한국 다 동일 25%입니다.

○위원장 임이자 자동차 25% 맞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위원장 임이자 우리 15% 아닌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자동차는…… 15%로 협상을 했는데 미국에서 그것 사인을 안 해 가지고 현재로서는 25%입니다.

○위원장 임이자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오케이.

저는 그래도 15%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15%가 됐을 때 부품도 15%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위원장 임이자 그러면 과연…… 물론 아직 사인은 안 했지만 자동차 부품을 우리가 미국에 수출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 부품을 하다 보면 볼트 조이고 나사도 조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볼트나 나사는 관세가 몇 프로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자동차가 완성품으로 가면 전체가 지금 현재는 25% 또는 향후에는 15% 이렇게 되는 거고 부품이 파트 하나하나로 가면 그것도 25%, 15%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임이자 제가 현장에서 듣기로는, 현장의 대표님들께서 말씀하시기는 볼트·나사는 철강이기 때문에 50%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부총리께서는 그것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계시다면 참 곤란한데요.

그래서 제가 충남 그리고 경북 지역의 자동차부품회사 대표님들과 간담회도 하고 또 도청 공무원들하고 간담회를 해 본 결과 부총리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자동차부품회사들의 마진이, 영업이익률이 2~3%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영세한 속에서도 지금까지는 관세가 제로에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은 그래도 관세가 2.5%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가 실질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5% 정도 이점이 있어서 그래도 괜찮았다고들 해요. 그런데 지금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잖아요.

더더군다나 대기업 완성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큰 대규모의 기업이기 때문에 가서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지만 부품회사에 관련돼 있는 그런 중소기업들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애로 사항을 많이 겪고 있고 그런데 이 중소기업들이 한군데에 이렇게 몰려 있는 것이 아니고 산발적으로 지역적으로 흩어져 있다 보니까 이와 관련돼서 어떤 산업위기 선제 대응 법에 의해서 이 부분을 갖다가 규율할 수 있는 부분도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애로 사항이 굉장히 많아서 여기에 대해서 대출 좀 완화를

해 주든가 아니면 신용등급을…… 지금 기업들은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신용 등급 평가하는 게? 그런데 이 기간 동안만은 신용등급을 좀 유예를 시켜 주든가……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었고 아마 부총리께서도 이와 관련해서 많은 부분들을 청취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위원장 임이자 거기다 또 한 가지 저도 깜짝 놀랐던 부분은 뭐냐 하면 정부가 전기차 시대를 연다고 해 갖고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라 해서 기업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또 대규모 투자를 한 적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위원장 임이자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공급과 수요의 미스매칭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서 예산을 상당히 많이 세워 줬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계속적으로 불용처리가 2023년도만 해도 6500억 이상 그다음에 작년에도 7000억 이상, 올해도 2차 추경에서 아예 삭감, 3600억 정도 삭감했지요?

차관, 답변해 보세요, 장관님 잘 모르시면. 올해도 2차 추경에서 전기차, 친환경 보급차 관련돼 갖고는 한 3600억 정도 삭감했어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집행 안 되는 부분을 반영해서 일부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하고 관련해서는 집행이 잘될 수 있게 지금 저희하고 환경부하고 이렇게 개선 방안을 만들고 있고요.

○위원장 임이자 뜬구름 잡는 얘기 그만하시고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아니요, 그 개선방안을 26년 예산에 유의미하게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그게 지금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만…… 돈은 분명히 충분히 세워 놓았어요, 2조 이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처리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차 보급 관련돼 갖고 지원 문제라든가,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위원장 임이자 보조금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리튬 배터리라든가…… 요새 배터리 포비아가 형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전기차 포비아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전뿐만 아니고 이런 데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충분히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불용처리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불용처리되지 않고 제대로 지원해서 나갔다고 한다면 이쪽에 대규모 투자를 했던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에, 이런 분들에게는 낙수효과로 인해서 흘러들어 갔겠지요. 그러나 이 부분이 없다 보니까 중소기업은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관님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부품회사, 협력사들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위원장 임이자 대부분 보면 300인 미만이고 100인 이쪽이 많이 집중돼 있고 5인 미만도 많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김태년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국내생산 촉진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과 그다음에 자금 또

거기에 대한 지원, 신용등급 총체적으로 정리를 하셔서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대응책을 좀 조속히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점을 감안해서 관계 부처와 협력해서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볼트·너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는 어떤 논리이냐면요 볼트·너트가 꼭 자동차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게 다양한 형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꼭 자동차만 이게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다 해서 50%, 철강 관련해서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어쨌거나 하여튼 자동차 관련 부품이라고 설득을 할 수 있다면 좀 낮추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그래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얘기들을 계속 기자들이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파고들어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고 계셔서 다행이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위원장 임이자 그래서 아까 차관님도 답변을 하시는데 약간 ‘돈 있는데?’ 그런 표정이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환경부하고 얘기를 잘하셔서 가지고 친환경차 보급에 있어서, 물론 우리가 탄소중립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또 중소기업에서 그만큼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낙수효과가 있듯이, 흘러들어 가듯이 그렇게 해 줘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아 주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26년 예산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 겁니다.

○위원장 임이자 믿을 수가 없어요. 저렇게 얘기하면 정말 믿을 수가 없거든요. 없으면 어떻게 해요? 책임지실 거예요? 속기록에 똑똑히 적어 놓으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있을 겁니다.

○위원장 임이자 얼마나 예산을 반영했습니까, 지금 친환경 보급에 대해서? 친환경차.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26년 예산안이 확정되면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지금 알고 계실 텐데, 지금 하고 있다면서요, 지금?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예산 차관 아니에요? 예산 차관 맞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위원장 임이자 지금 세종에서 심의하고 있다며요, 그 정도는 알고 계신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산안 마무리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위원장 임이자 그러면 2조는 넘습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2조 넘게 지금 했습니까? 2조 이상입니까, 2조 미만입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위원장 임이자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김태년 위원 20분 넘었어요, 지금 혼자서.

○위원장 임이자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원장의 특권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 드릴게요.

○김영진 위원 또 있어요?

○김태년 위원 조금만 해. 이제 그만.

○위원장 임이자 내가 궁금해서 그래요.

초혁신성장을 말씀하시면서 210조 예산 투입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재원 조달을 94조 그다음에 지출 저감을 116조 한다고 발표하셨어요. 그렇지요, 장관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국정위에서요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총경비를 말한 겁니다.

○위원장 임이자 그러면 차관님 생각은 달라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이게 전체 새로운 국정과제를, 123개 국정과제를 하는 총예산이 210조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임이자 96조, 5년 동안 96조를 조달하는 방법으로는 세입 창출을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세입 창출 94조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것은 국정위에서 이렇게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세부적으로는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그러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발표했을 뿐 이재명 정부 차원에서 기재부총리님의 생각은 다르다 이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아닙니다.

○위원장 임이자 같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이 숫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위원장 임이자 아니, 그러면 당정 협의는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당정 협의……

○위원장 임이자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갖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발표를 했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당정 간에 소통을 하고 협의는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94조 원에 대한 세입 창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얘기가 있었고. 아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얘기한 부분을 갖다가 정부에서 안 받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도 고민을 했고 같이 노력은 했을 것 아니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위원장 임이자 94조라는 이 세입 창출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구체적으로는, 구체적인 방안은 지금 저희들이 36조 5000억 원, 금년도 세법 개정으로 만약에 통과된다면 확보해 놓은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게……

○위원장 임이자 60조를 어떻게 조달하실 생각이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국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또 다른 증세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또다시 국민 아니면 가게 아니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런 부분에서 다양한 방법을 저희들이 해결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임이자 아니,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느낀 게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자신

이 없으면 맨날 ‘다양하게 하겠다, 다양하게 하겠다’ 그러는데 도대체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뭘 하겠다는 건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웃음소리)

○김태년 위원 혼자 30분을……

○정태호 위원 위원장님, 회의 운영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위원장 임이자 안 할게요.

○정태호 위원 회의 운영을 정확하게 7분이면 7·5·3으로 간사 간 합의를 했으면 그대로 해 주시고……

○위원장 임이자 제가 환노위에 있을 때도 우리 위원장님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 제가 누구 보고 배웠겠어요?

○정태호 위원 위원장님이 임의로 시간을 늘였다 줄였다 하고……

○박수영 위원 저하고 얘기하세요. 저하고 얘기하시고 이제 좀 쉬어 가지요.

○위원장 임이자 제가 위원장을 누구 보고 배웠겠어요? 다 민주당 위원님들, 위원장님들 보고 배웠어요.

○정태호 위원 아니, 그러면 그쪽에 가서 하시든지. 위원장님이라고 그냥 임의로 막 시간을 더 쓰고 그러세요.

○박수영 위원 저하고 얘기하시지요, 저하고 얘기하시고. 이제 좀 쉬었다 안 합니까, 2시간 넘었는데?

○정태호 위원 기재위가 이런 적이 없어요.

○위원장 임이자 아니, 기재위가 맨날 같으란 법 있어요? 발전이 있어야 되는 거고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정태호 위원 상식적으로 하셔야지요, 상식적으로.

○위원장 임이자 이게 상식이지요.

○오기형 위원 좀 과하셨지요.

○박수영 위원 좀 쉬었다 하시지요, 좀 쉬었다 하시지요.

○위원장 임이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정태호 위원 전혀 원활하지가 않잖아요.

○위원장 임이자 5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시에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이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질의 시간 때 국민의힘 유상범 위원님께서 여야 간 협상이 있어서 지금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유상범 위원님 주질의하시고 천하람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를.

유상범 위원님 주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범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부총리님, 아까 세수 부족과 관련된 질의 답변에 여러 가지 모호한 말씀을 주셨는데 세수결손을 2024년 내용을 좀 살펴보면 소득세·법인세·관세 등 해서 약 30.8조 원 정도가 결손이 났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유상범 위원 그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법인세가 15.2조 원이 결손이 났고 소득세가 8.3조 원인데 그중에 양도소득세가 5.7조 원 결손이 났어요.

그러면 이 법인세 결손의 주요 원인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사실은 반도체 가격의 하락,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세전 순이익이 6.6조 원으로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전년에 59.1조 원이었지요. 그러면 88% 이상이 감소한 겁니다. 그 외에 서비스업, 화학, 철강금속 업종에서도 세전 순이익이 30% 이상 감소했어요. 이걸 가지고 조세 감세 때문에 감소했다고 평가한다는 것은, 이거는 경제 상황이 워낙 악화됐고 수출 상황이 악화되는 여러 가지 국제경제의 영향 때문에 발생한 일이지 이 정도 감소는, 세금 1% 감면 때문에 이런 원인이 발생했다고 말한다는 것은 전혀 타당치 않은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끊임없이 부총리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1% 법인세 감소가 하나의 원인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경제 상황 평가에 대해서 적절치 않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요. 그러니까 세율을 내리는 효과 그다음에 경제 상황이 복합적으로 됐다고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유상범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조세의 정상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늘 세수 부족이 발생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조세의 정상화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건 결국은 앞으로 현재 글로벌 경제 상황 또 관세협상으로 인해서 우리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지금 굉장한 타격을 입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철강·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50% 관세가 그대로 부과되고, 이러면 결국은 앞으로 세수 부족은 더 예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전망이 되고 있어요.

(임이자 위원장, 박수영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데 국정위에서 보면 세수 증대를 얘기하면서 성장을 통한 세수 확충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부총리께서 보시기에는 성장을 통한 세수 확장이라는 이 부분이 과연 현실적으로 지금 경기 전망을 보면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성장을 통한 세수 확장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유상범 위원 물론 해야지요, 물론 해야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것 하지 않고는 세수가 나올 곳이 없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한은 총재님 옆에 계시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경기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우리 올해 경제성장을 0%대로 보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올해 5포인트……

○유상범 위원 그러면 어렵지요.

내년은 어떻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저희가 5월 달에 전망한 것은 1.8%로 보고 있는데 지금 다시 전망해야 됩니다.

○유상범 위원 또 하향을 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하향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자료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물론 이것은 목표일 수는 있지만 이걸 지금 현재 상황에서 성장을 통한 세수 확충이 사실상 쉽지 않다고 본다면 결국은 비과세·감면 정비라는, 결국은 세금 증액을 통해서 세수를 확보하는 것으로 치중할 수밖에 없는 세입 확충 계획이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래서 위원님, 저는 지금 제가 진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성장을 통한 세수 확보를 하여튼 최대한 해야 됩니다.

○유상범 위원 좋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보시기에는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저도 뭐 이게 무조건 된다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어쨌거나 하여튼……

○유상범 위원 성장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기본적으로 국가 경제성장도 있지만 결국은 사기업의 성장을 통한, 즉 경영활동의 활성화를 통한 법인세의 증가 또 민간 차원에서의 거래 활성화…… 양도세라는 게 다 대부분 민간의 거래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유상범 위원 그런데 그게 확 줄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유상범 위원 그런데 지금 정책이 뭐냐면요 부동산 대출 6억으로 제한했지요? 그다음에 전세자금대출까지 제한했지요? 게다가 지금 소위 노조법, 노란봉투법이라고, 저희는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하는 법률을 하면서 이제 사업가가 굉장히 경영 불확실성을 맞이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사업가의 범위를 확장해 가지고 이제 하청기업이랑도 교섭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고 사업상의 결정, 고도의 경영상의 결정까지도 노조의 쟁의 대상으로 만들었고 기업 경영활동이 굉장히 불확정한 상황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상법에서도 더 쉐 상법에서 소위 이제는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면서 기업의 경영권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만들어지고.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기업을 발전시켜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시행되는 대책은 정반대의 대책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으니 부총리께서 적극적으로 의견 제시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하시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변화가 없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아닙니다.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저희들이 문제 제기도 하고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들었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작업이라는 게 뭐냐면 법에서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이라고 법에 규정하고 지침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제한된다고 규정을

하겠다는 건데요. 아시지요? 법에서 제한 없이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대해서 노조 쟁의 대상으로 만들면, 지침으로 그걸 제한하게 되면 나중에 법원 가면 다 깨집니다, 왜냐하면 법에서는 제한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뭔가 판단 착오가, 착각이 있는 거예요. 법률에서 그 부분을 제한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소위 말해서 우측 깜빡이 켜고 완전히 좌회전하는 이런 국내 기업에 대한 정책들이 진행되는데 어떻게 성장을 통한 세수 확충이라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너무 모순되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또 기업들도 우려하는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거나 하여튼 기업들이 우려하는 상황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들하고 협력해서 초혁신 아이템 위주로 해서 기업들을 도와주고 또 정부가 진짜 기업이 중심이 되고 해서 R&D 또는 기술개발을 통한 경쟁력 제고 이런 부분이 오히려 다른 우려를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식의 기업 정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수영 예, 1분.

○유상범 위원 부총리께서 답변은 그렇게 하세요. 기업을 도와주는 거고 R&D에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건요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을 할 수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만일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 하청기업이, 벤더가 수백 개가 있어요. 거기서 노조 교섭의 문제가 발생하고 계속 법률적인 쟁점이 발생하고 해외투자를 하는데 그것이 당연히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친다고 광범위하게 포함될 수 있으면 그것도 쟁의 대상이 되고 그러면 기업이 어떻게 발전을 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를 총괄하는 부총리께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지요. 언제까지나 이렇게 말은 성장인데 실제로는 경영환경의 악화 이렇게 되면 결국 국가적으로 불행한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목표를 이루겠다는 세수 확보 이것 불가능해진단 말이에요. 결국 세금만 올리는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우려 또는 우리 경영계의 우려 이런 걸 감안해서 하여튼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소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우리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수영 유상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간사 간 협의에 의해서 5분으로 제한하고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추가 1분이 없다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천하람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하람 위원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천하람 위원 예전에 2022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원화가 곧 기축통화가 될 거다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원화가 기축통화 언제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원화가 기축통화 되려면 결국은 한국 경제가 아주 경쟁력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하람 위원 빠른 시간 안에는 쉽지 않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천하람 위원 그런데 지금 원화는 아쉽게도 기축통화가 아니고 단기간에 기축통화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축통화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은 뭐, 말씀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스테이블코인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것의 몇 퍼센트 정도가 달러 기반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지금 스테이블코인은 사실은 USDT, USDC 이게 가장 많이……

○천하람 위원 그게 99%, 100%에 가깝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천하람 위원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만들면 어디서 씹니까? 수요가 어떻게 되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수요는 지금 다양하게, 스테이블코인이라는 게요 백(back) 된 코인이니까 아마 안정성이 있고 국내적으로도 쓸 수 있는데 아까 한국은행 총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외환관리, 통화관리, 금융시장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렇게 잘 문제를 제거하면서 저희들은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천하람 위원 달러 기반이 아니라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수요로 할 만한 요인이 특별히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저는 동남아 같은 데는 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천하람 위원 왜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지금 베트남 같으면 한국 돈을 받는 데가 있습니다.

○천하람 위원 그게 어느 정도 수요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많지는 않지만요.

○천하람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면 아주 제한된, 예를 들면 케이팝 NFT 결제에 쓸 거다…… 사실 케이팝 NFT도 왜 꼭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으로 사야 되는지 모르겠거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게 만약에 훨씬 수요자 입장에서 좋아지면……

○천하람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우리가 지금 자칫 잘못하면 수요 없는 공급을 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화가 아직 기축통화가 아니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봐도.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수요 없는 공급을 하고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보여 주기식,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정치인들 입장에서 약간 국뽕정치처럼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스테이블코인 만든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있다, 막 만들어요. 그런데 수요는 안 나와요. 그러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진짜 모르겠습니다, 국채 발행을 늘리기 위한 하나의 쇼가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안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수요나 제대로 된 어떤 사용처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만든다 만든다 이렇게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총리께서도 이 부분은 좀 면밀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과연 수요가 있을 것인가, 어디서 나올 것인가.

그리고 제가 걱정하는 것 중에 또 한 가지가요 이게 자꾸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으로 막 이렇게 논의가 가니까요…… 정작 우리 사회에 중요한 것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국내에서 우리 기존에 있던 외국환관리와 관련해서 어떤 규율을 할 것인가 이 논의가 어찌면 더 중요한데 이것은 뒤로 밀려 버리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어떻게 만들까, 어느 범위에서 만들까, 비은행권도 할까 이런 쪽으로 가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기재부가 스테이블코인 규율 도입을 하겠다고 했다가 최근에 연구용역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오히려 챙겨 봐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내부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천하람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것을 제대로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도 보면 제가 자꾸 수요 없는 공급 이런 얘기를 하는 게요 지금 보면 우리나라는 STO, 그러니까 토큰증권이지요. 그리고 RWA라고 실물자산 토큰화하는 것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천하람 위원 뭐랄까 제대로 된 사용처나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와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테이블코인이라는 건 사실 거래 수단이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천하람 위원 그런데 뭘 어떻게 거래할지 이런 것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안 되면서 뭔가 스테이블코인이라는 말이 핫해 보인다는 이유로 자꾸 뭔가 좀, 약간 이상한 수박 겉핥는 논의들만 자꾸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 화려하게……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주식시장에서 한탕 하고 끝나는, 그 얘기까지 안 하고 싶습니다마는 이춘석 의원이 이번에 차명거래할 때 보면 거기 나오는 카카오페이네 네이버 LG CNS네 이런 데들이 전부 언론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수혜주 이런 걸로 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들이 한탕 해 먹고 주식시장에서 한번 그냥 작전주처럼 쓰여 가지고 털어먹고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실 있게, 제대로 수요처를 따져 가 보면서 일을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는 스테이블코인을 이렇게 봅니다. 이게 한국 시장에 당장 도입하는 그런 이슈보다는요 한국이 제대로 된,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제대로 된, 가장 퀄리티 좋은 스테이블기반을 만든다. 거기다 달러를 얹으면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되고 원화를 얹으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되고 유로화를 올리면 유로화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을 저는 가지고 기술개발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당장 우리 사회에 도입했을 때 이게 어떤 식으로 쓰여질 것이냐 또는 금융시장이라든가 외환시장 그리고 우리 통화관리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봐 가지고 그 시기는 저희들은 얼마든지 조절 가능하고요.

또 두 번째는 한국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안 한다 하더라도 달러 베이스로 해 가지고

미국이 했을 때 한국이 가는 걸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것도 진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고려해서 저희들이 연구도 좀 하고 필요하다면 기술개발도 하고 이런 준비는 제가 단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하람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수영 천하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민규 위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박민규 위원 예.

○위원장대리 박수영 그러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성훈 위원 경제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박성훈 위원 국정위가 123대 국정과제 이행하는 데 5년간 210조 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제가 보면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5년간 116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94조 원의 세입을 확충하겠다는…… 일단 저는 94조 원 세입 확충에 대해서도 잘 이해가 되지 않고요. 왜냐하면 23년도에 56조 세수결손이었고 지난해는 30조 6000억이었나요 세수결손이 확정됐지요. 경기둔화와 세수결손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94조 원을 세입 확충하겠다는……

만일에 지금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인하가 정부 원안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아마 5년간 35조 6000억 정도의 새로운 세원이 확보되는 데, 늘어나는 데 그칠 전망입니다. 여전히 약 60조가 부족하지요. 결국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려면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보여지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증세를 할지 방향이 있습니까, 아니면 방안이 고려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현재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위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들은 바가 없고요. 저희들은 다만 국정위에서 생각하는 세외수입 확충이라든지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로 하여튼 성장잠재력을 키워 가지고 하는, 그런 경제성장에 따른 세입 증가 이런 걸 좀 감안해서 이렇게 숫자를 내놓은 것 같습니다.

○박성훈 위원 부총리님,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담뱃세 인상과 같은 서민 증세를 검토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아니요, 그런 것은 전연 없습니다, 현재는.

○박성훈 위원 알겠습니다.

한은 총재님 나오셨잖아요.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한국은행에서 114조 원에 달하는 돈을 빌렸습니다. 재정을 충당했는데요. 이게 종전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보다 8.4% 늘어났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한 이후 두 달 동안에 한은에서 43조 2000억을 빌렸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한번 여쭙보겠습니다.

정부의 한은 일시차입은 사실상 국채 발행을 우회하는 거다, 국채 발행은 한도가 있는 반면에 차입금은 일시차입의 경우에는 실무자들의 협의만으로도 돈을 끌어다 쓰는 구조기 때문에 국회와 국민이 재정 상태를 정확히 알 길이 없게 된다. 정부 부채를 화폐화하는 통화 증발의 효과도 있다. 파행적인 재정 운용을 방조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걸 제가 여쭙보는 게 아니고요, 바로 지난해 정부의 일시차입과 관련해서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입장이 바뀌지 않겠지요.

오늘 오전 질의에서도, 기재부도 제가 같이 한번 부총리께 여쭙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기재부는 달라져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이후 한국은행의 일시차입 어떻게 계속 유지하실 생각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일시차입이라는 것은 정부가 재정을 운용하다 보면 세입하고 지출이, 지출 같으면 예를 들어서 이게 재정을 조기 집행해서 경제를 살리려면 조금 부족한 부분은 일시차입 했다가 또 갚아 버리고 이런 겁니다.

○**박성훈 위원** 제가 일시차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일시차입의 순기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유동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과거에 지금의 여당이 야당이었을 때 했던 그런 지적들에 대해서 이 기준이 달라지는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은 잉여금에 대해서 한번 여쭙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은법 99조 규정상 매년 순이익의 30%는 법정으로 적립을 하게 되어 있지요, 총재님? 그리고 나머지가 남으면 결국 국고에 납입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새 정부 수입 확대 대책 중 하나로 한은 잉여금 등 배당 출자 확대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은 입장은 어떻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지금 저희가 저희 자본금의 5%까지 적립금이 충족될 때까지는 계속 적립을 하고 5%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확장해서, 확대해서 정부 세수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적립금은 결국 현행법상 회계연도에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는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총재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그런데 적립금의 최적 규모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적립금을 너무 많이 가져도 그 유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한은 입장에서는 한국은행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자본금의 5%까지는 미니멈 쌓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 3.5% 정도 가지고 있는데 5%까지는 지금의 방식으로 적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훈 위원** 부총리님, 결국 한은 잉여금은 배당출자 확대를 위해서 적립금의 처분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지금 한은법 제99조에 보면 한국은행이 결산 순이익금을 적립하고 나서 나머지가 있는 경우는 정부에 세입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박성훈 위원** 부총리님, 그래서 적립금 30%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쭙봤고요.

전국금융산업노조가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공공기관이 정부 재정을 보충하는 배당금 ATM으로 전락했다라고 비판을 하는데 정부가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서 정책금융에 집중해야 할 국책은행의 팔을 비틀어 배당금을 더 받으려 한다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우려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들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정부가 과도하게 하지는 않을 거고요. 공기업이나 이런 데서 잘 경영을 해서 이익이 나는 경우는 국채 발행을 늘리는 것보다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는 것도 국민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과도하게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수영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일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국과의 관세 문제에 대해서 아까 장관님 답변과 관련한 건데요. 철강, 알루미늄에 50% 관세 매기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발표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정일영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미국에 자동차, 기계 수출할 때,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아까 장관님께서서는 완성체로 갔을 때는 자동차 같으면 일단 25%, 따로 부품으로 갔을 때는 50% 이렇게 답변하신 것 같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아닙니다. 부품 중에서 자동차용 부품이라고 명확하게 인증이 되면 25%인데 아까 너트·볼트는……

○정일영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제가 알기로는, 업계에서 하는 얘기는 기계가, 자동차가 있다면 그게 1억인데 1000만 원이 철강이고 나머지 9000만 원이 다른 거라면 철강에 대해서는 같은 완성체 자동차인데도 1000만 원에 대해서는 50%를 매긴다는 거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장관님이든 차관, 참모들도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아까 오전에 질의드린 대로 중소기업이나 우리 기업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수출을 하는데 그중에 몇 퍼센트가 철강인지 알루미늄인지를 다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관리 이런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부담도 되고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히 잘 대응을 하시라는 그 얘기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는데……

○정일영 위원 그렇지요. 그게 자동차로 갔을 때는 25% 그렇고 따로 부품만 갔을 때는 철강, 볼트·너트 50이 그게 아니고 자동차에 들어간 철강제품에 대해서도 50%를 때린다는 겁니다. 그것을 정확히 대처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 걱정이 미국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하게 되니까 우리 청년들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에서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들었을 때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는구나’라는 구체적인 대책을 꼭 발표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정일영 위원 좀 마이크를 앞으로 하시고.

그리고 세수결손 문제인데, 우리 오늘 기금 결산도 많은데 제가 주택도시기금 예를 드는 것은 지난번에 윤석열 정권 때 23년하고 24년에 걸쳐서 거의 90조의 세수결손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맞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거에 대한 대책으로 해 가지고 주택도시기금도, 물론 다른 기금도 갖

다 썼지만, 그러다 보니까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의 엄청 줄어 버렸어요. 전에 비해서 한 20% 수준으로 80% 줄어 버렸어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기금도, 주택도시기금은 물론 국토부에서 관리주체인 것 같은데 전체 기금을 기재부에서 하니까 잘 챙겨 주시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정일영 위원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이거 한은 총재님 답변 자세히 들었습니다만 저는 정부에서 기재부장관이 부총리시니까 뭔가 주관하는 기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서로 의견이 다르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기재부가 할 겁니다.

○정일영 위원 기재부가 중심이 돼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전에 요구했던 자료 많이 받았습니다. 국세청은 별문제가 없는 것 같고, 관세청은 마약 단속 예산 아주 적절히 잘 사용을 한 것 같아요. 2026년, 마약이 너무 많이 퍼져나가서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약 예산, 내년도 예산 지금 편성 마무리 단계라고 그러는데요, 잘 좀 예산이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달청장님,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사업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려 26억 9500만 원이 불용이고 5500만 원이 이월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통 일자도 늦어졌지요, 지금? 지연됐지요?

○조달청장 **백승보** 예, 품질 확보 때문에 계약 연장을 좀 했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개통 이후에도 여러 가지 서비스 오류, 장애도 많이 일어나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많이 이월·불용됐는지 그게 명확하지가 않고요.

구매사업국 예산도 받았는데, 이것도 소위에서 더 보든지 하겠는데 공무원 운영 여기서 1억 1600만 원 등 여러 가지 불용액이 나타났는데 청장님이 이런 것은 좀 잘 챙겨 보십시오.

○조달청장 **백승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리고 한은 총재님, 어쨌든 우리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요. 그렇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래서 경제, 한은에서 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금리 아닙니까? 그렇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러 가지로 여쭙보긴 했는데 금리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실기하지 않게, 저는 인하를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거기 입장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관세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거고,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언제라고 그랬지요? 8월 28일?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28일에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28일이지요? 잘 결정해 주십시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수영 정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태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총재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천하람 위원님도 질의 중에 내용이 있었는데요. 7월 18일 날 미국에서 지니어스 법 통과를 시켰습니다. 내용은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이게 해외 지급용 스테이블코인 미국 내 판매 및 거래 원칙적 금지를 담은 내용 아닙니까? 이런 유사한 법안들이 다른 나라들도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김태년 위원 그러니까 각국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은 다 연구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있습니다.

○김태년 위원 일본도 자금결제법 23년에 만들어 냈고요, 이것을 통해서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하는 거고. 그다음에 EU도 미카(MiCA) 그래서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이 EU 역내에서는 거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그런 법인데, 우리가 지금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논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하더라도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이 우리 원화 중심의 통화주권이나 또는 한국은행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규제를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그렇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아무 조치를 안 취하고 있잖아요. 이미 USDT나 USDC가 지금 한국에서 거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그렇습니다.

○김태년 위원 거래소 보면 빗썸, 코인원은 이미 진작에 되고 있었고 여기에 작년부터 업비트까지 합류를 해 가지고 한국에서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규제 정책이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아까 존경하는 천하람 위원님하고 김태년 위원님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기재부와 저희가 논의를 해서 이것을 어떻게 규제할지는 반드시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유심히 보고 있는 것은 미카법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렇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그래서 동일한, 비슷한 규제를 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태년 위원 물론 한국은행이 직접 법을 만들어서 규제하거나 그럴 권한은 없는데요. 그래도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은행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 통화정책의 유효성 문제 또는 원화 통화주권을 침해할 소지가 매우 높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은행이 주도적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연구하고 안을 제기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기재부 국제국과……

○**김태년 위원** 좀 늦은 거 아니에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좀 늦은 면도 있습니다.

○**김태년 위원** 서둘러야 될 것 같은데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년 위원**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국내 지급결제수단으로 확산이 돼 버릴 경우에 달러 의존도도 심화될 거고 통화정책의 파급력도 약화될 거고 우리 통화정책의 영향력 이런 것도 약화될 거고 그다음에 원화의 지급결제에 대한 독점적지위도 흔들릴 위험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는 걱정하지만 현실적으로 저희 인플레이션이 높든지 아니면 통화정책을 잘못하는 나라와 다르게 저희는 국내 지급을 할 때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쓰게 되면 지금 저희가 지급수단을 쓰는 것보다는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그 면에서는 걱정이 좀 덜한데 뭘 걱정하느냐면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있게 되면 환율을 저희가 그냥 시장에 맡겨 놓고 큰 변동이 있어도 상관없다고 하면 모르지만 조금이라도 달러의 가치가 변할 것 같으면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통해서 많은 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걱정, 변동성에 대한 걱정 또 일부 악용을 해서 국내의 돈이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걱정, 이런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태년 위원** 아무튼 뭔가 문제가 생길 소지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그렇습니다.

○**김태년 위원** 이와 관련해서는 잘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들도 보면 발행인가, 준비자산, 공시, 소비자 보호 이런 것을 규제의 핵심 요소로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국내 유통 가능 스테이블코인 요건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또 금융당국에 신고하고 등록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록 절차도 마련을 해야 되고 그리고 국내 이용자 보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치금 보전이랄지 분쟁조정제도랄지 이것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도 마련해야 될 것 같고 또 해외 발행 국가와의 어떤 정보 공유 또는 감독·협력 체제 이런 것도 구축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야 안정성 있지 않겠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그렇습니다.

○**김태년 위원**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될 것 같아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두 분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그래서 지금 외환거래법 개정안이 존경하는 최은석 위원님 발의로 나와서 일단 국경 간에 이런 가상자산이 왔다 갔다 할 때는 모니터링하는 시스템도 좀, 법적인 조치를 갖추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세청·관세청 FIU가 해 가지고 정보 거래를 통해 가지고 불법의 거래를 막기 위해 일단 그렇게 하면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다른 나라 사례를 잘 연구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우리 상황에 맞는 대

책들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수영 김태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은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은석 위원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최은석 위원 제가 오전 질의 때 경제 아마추어들이 좌충우돌, 중구난방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망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경제 아마추어라는 말에 대해서 아마 부총리님이 과도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죄송합니다.

○최은석 위원 제가 이재명 정부와 집권 여당 전체를 평가할 때 경제 아마추어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게 부총리님 개인을 두고 한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잘 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최은석 위원 그런데 부총리님,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부총리님 개인적으로도 보시면 혹시 기업 경영의 주요 경영진으로 참여하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없었지만 제가 이사회에는 참여해 봤습니다.

○최은석 위원 그리고 이사회의 의사결정을 이렇게 참여해 보셨지만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대표이사가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대해서 아주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는지 직접 경험해 보신 적은 없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건 없습니다, 위원님은 해 보셨는데.

○최은석 위원 또 노사 간에 노사 교섭 같은 것도 직접 업무에 깊이 관여해 보신 적은 없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최은석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은 전문가들의 말을 충분히 듣는 게 또 다른 전문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 법안 발의하신 분들 제가 존경하는 민주당 의원님들이신데 보면요, 여러 분 계신데 금융기관 노조위원장, 공기업 노조위원장, 의료기관 노조위원장, 노동 전문 변호사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업 경영자 입장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못하셨던 분들이 이 법안을 발의하는 데 주도적으로 관여를 하셨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최은석 위원 그리고 좀 부끄러운 일이지만 우리 기재위에 계신 모 위원님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더러운 짓을 해서 기업의 성과를 다 빼먹고 주주들한테 주지를 앗거든요.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라는 발언을 좀 전에 하셨습니다. 저는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님이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는 게…… 지금 기업 경영 현실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이번에 노란봉투법이나 상법 이런 것들을 논의해서 이런 법안들이 지금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저는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보고 경제에 대해서 아마추어 분들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보십시오. 지금 노란봉투법에 보면, 제가 예를 들어서……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최은석 위원 우리나라 어떤 제조업이, 국내하고 중국에 생산공정을 각각 갖고 있는 회사가 있다고 치면 미국으로의 수출 물량이 계속 증가하는데 국내에 원재료의 수급이 안 되거나 숙련된 인력의 수급이 잘 안 되는 경우에 만약에 부총리님이 그 회사의 대표이사라고 하면 국내의 생산을 줄이고 중국 공장에서 생산을 빠르게 하도록 의사결정을 하시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최은석 위원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이 노란봉투법이 통과가 되게 되면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국내의 일거리가 줄어들겠지요, 일시적으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최은석 위원 그러면 이게 회사의 생존을 위해서 국내 생산을 줄이고 해외에 있는 공장에서 빠르게 생산하도록 의사결정하는 게 기업 전체의 이익과 우리 국가의 이익을 보면 그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것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최은석 위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노사 쟁의의 그런 타깃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 노동관계법이 통과되게 되면 이런 예측하지 못한 기업경영의 불확실성과 기업의 주요한 의사결정이 앞으로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법률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얘기를 경청하지 않고 또 사회적인 이해관계자들이 충분히 숙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저는……

지금 보시면 공약에서는 경제 살리기의 중심은 기업이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기업을 죽이기 위한 이런 법안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발의되고 또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이런 단계까지 온 것이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이렇게 국가의 경제를 죽이기로 작정하지 않은 이상 결국은 경제에 대한 아마추어들이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제가 아까 오전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보십시오.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전문가들이나 업계에, 산업계에 있는 그런 이해관계자들의 얘기를 제대로 경청하지 않고 이런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강행시키게 되면 우리나라의 제조업 경쟁력은 이제 세계시장에서 도태될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의 자식 세대나 어린 세대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결국은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들의 기반이 다 붕괴되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일자리도 갖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견이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우려하신 바나 또 우리 기업들이 우려하는 바를 저는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하여튼 그 범위 내에서 또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우려가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은석 위원 전문가로서 이런 산업계의 목소리나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에 대해서 충분히 경청해 주시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석 위원 그런 부분들이 국가의 정책이나 입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부총리님이 또 기재부의 주요 전문가들이 정말 늘 깨어 있는 소리, 바른 소리 꼭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수영 최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님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오기형 위원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후에 답변하시면서 약간 좀 의아했던 게 있어서 하나 더 질문을 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세수결손이 발생했고 또 국세가 절대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줄어든 상황이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거냐에 대한 이런 논쟁이 있어서, 약간 그런 식으로 답변하셔서 저는 그것은 아니더라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아니요, 복합적이라고 말씀……

○오기형 위원 여기 좀 보시면 사실상 22년도에 396조 정도의 세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세가 그 이후에 절대치가 감소했지 않습니까, 336조까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오기형 위원 그러면 이 감세가 뭘 의미하는 거냐. 이 시기의 경상성장률은 4~5%씩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절대치가 감소했으면 이것은 감세정책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실제 이 시기에 세수결손도 발생했고 그리고 돌려막기 하면서 그런 많은 비판을 받아 왔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오기형 위원 감세정책에 대해서는 이게 너무 무리했거나 실제 지금 세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대책을 만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오기형 위원 이 팩트를 숨기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오기형 위원 그다음 두 번째는 세수결손 관련해서 돌려막기에 대한 23년도의 사례나 비판들이 있었고 24년도에도 지금 이번에 결산 정리하면서 또 나올 겁니다. 그리고 예결특위에서 논쟁을 해야 될 주제인 것 같고.

그런데 그 지점에 대해서 국회에서 계속 시정요구를 했지만 시정요구가 제대로 수용되지 않는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계나 감사원 감사 측면에 많은 이야기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것입니다. 이것 그냥 흘려보내실 문제가 아니라 확실하게 그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오기형 위원 다음 주제로, 윤인대 차관보님 지금 나와 계시지요?

○기획재정부차관보 윤인대 예.

○오기형 위원 잠깐만 좀 질의할 게…… 팩트만 좀 물어보려고요.

요즘 계속 내란 관련해서 조사가 있어서 한두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차관보 윤인대 예, 말씀하십시오.

○오기형 위원 다 답변하셨을 텐데……

최상목 부총리 예비비 확보 있는 계엄 문건, 그것에 대해서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언제 받으셨다고 그러셨지요?

○기획재정부차관보 윤인대 그때 여러 번 진술했습니다마는 12월 3일 한 11시 반 정도로 기억합니다.

○오기형 위원 그러면 실제 그 F4 회의가 있었던 시간이 언제인가요?

○기획재정부차관보 윤인대 11시 40분에 개최됐습니다.

○오기형 위원 저희가 자료를 쭉 뒤져 보다 보니까 2월 6일 최상목 부총리가 내란특위에서 답변할 때는 10시 40분부터 11시 40분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윤인대 차관보께서 2월 25일 답변하실 때는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11시 40분부터 12시 사이에서 회의가 있었다고 그러고 이렇게……

○기획재정부차관보 윤인대 그것은 최상목 부총리께서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한은 총재……

○오기형 위원 그때 위증…… 그러니까 증인 선서하고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팩트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윤인대 차관보께서는 그 쪽지를 받은 시점은 언제입니까?

○기획재정부차관보 윤인대 정확하게 11시 반이었습니다.

○오기형 위원 11시 반에 받았고……

○기획재정부차관보 윤인대 그리고 같이 받았던 거를 옆에서 본 증인도 있습니다.

○오기형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받았고 그러고 나서 F4 회의에 참석했고 끝나고 나서 리마인드했다는 거고요.

○기획재정부차관보 윤인대 예, 그렇습니다.

○오기형 위원 그것 받은 상태에서 한번 확인하셨고, 내용을?

○기획재정부차관보 윤인대 예, 맞습니다.

○오기형 위원 확인하면 그게 실제 비상입법기구의 예산까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그게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기획재정부차관보 윤인대 일단 제 눈에 들어왔던 거는 예비비 확보라는 내용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엄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었고, 하지만 제 소관이 아니라서 빨리 다시 한번 여쭙어봐야 되겠다 그 정도까지 생각했었습니다.

○오기형 위원 그 내용 이후에 2시간 뒤에 리마인드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차관보 윤인대 맞습니다.

○오기형 위원 그에 대해서 그냥 그것 확인하고 아무런 조치를 안 했습니까?

○기획재정부차관보 윤인대 그때는 이미 계엄이 해제가 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저희는 계엄을 거부하기로 했고 국회에서도 거부가 됐기 때문에 무시하자고 해서제가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오기형 위원 계엄 해제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발표하기 전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질문이 있었던 것이고 제가 계속 앞으로 질문이 있을 겁니다.

○기획재정부차관보 윤인대 예, 그때 계엄 해제가 1시 50분 이때쯤이었습니다.

○오기형 위원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어쨌든 내란 관련된 의혹은 다 정리를 해야 된다, 어떤 식으로든 깔끔하게 계속 해명을 할 때는 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일관된 기준으로 가야 된다 이것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부동산 PF 관련해서 한국은행 총재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자료에 보니까요, 자료집 17페이지에 보면 PF 대출 연체율이 올해 1분기가 4.49%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저도, 그전부터 수치에 대해서 계속 쫓고 있었습시다마는 부동산 PF에 대해서는 적시에 대응을 해야 된다는 논쟁을 계속 해 왔고 그런데 지금 1분기가 그렇게 안 좋아졌고 다시 2분기 상황도 지켜봐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건설경기, 내수경기가 안 좋아지고 이것에 대한 대응이 쉽지도 않고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부동산 PF가 적시에 더 과감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그다음 단계를 못 가는 것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부동산 PF가 지난 1년 반 동안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었는데 조정이 일어나는 가운데도 경기가 좀 안 좋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부실이 더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그렇다고 이것을 다시 원상태로 돌리고 하기는 어렵고요. 또 여기 지금 연체율 되는 데가 대부분 지방 부동산 PF라 사실은 금방 해결되기는 어려워서 이것들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금 금융위·금감원·한은 이렇게 협조를 해서 부동산 PF 구조조정을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상황이 아주 급격히 개선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기형 위원 이게 새 정부에 얼마나 부담이 되는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해법이 뭐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 나올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저는 단기적으로는 지방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수요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미 공급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조조정을 통해서 싸게 팔고 나가고 정리가 돼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정리를 안 하고서 해결할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기형 위원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수영 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부총리님, 우리나라 2024년 기준으로 GDP가 세계 몇 위 정도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세계 한 12위……

○김영진 위원 12위에서 13위 정도 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김영진 위원 우리나라 경제적 규모가 세계 12·13위 정도 되고요. 되는데, 저희들의 자료로 보면 자본과 노동의 분배율 중에 노동의 분배율이 GDP 순위 13위 나라 중에 거의 꼴찌입니다. 한마디로 생산되는 것 중에, 분배 중에 자본이 훨씬 많고 노동에 대한 분배율이 낮은 나라 중의 하나입니다.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노동조합이나 이 부분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ILO에서도, 국제노동기구에서도 국제기준에 맞는 정도의 노동조합법과 노사관계법이 필요하다는 권고를 지난 20년 동안 해 왔던 내용을 담은 것이 이번에 노란봉투법입니다.

기업가와 노동자 측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고 했는데 수많은 기업가들과의 논의를 통했고요. 제가 환노위 간사를 임이자 위원장하고 같이했는데 공청회만도 여러 번 했습니다. 기업가 측의 의견도 많이 들었고 노동조합 측의 의견도 많이 듣고 그러면서 조정해 왔던 법안이 현재 낸 법안입니다.

핵심적인 것은 저는 미국에 대한 투자에 관해서 이 노란봉투법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요. 미국에 대한 투자는 삼성,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등 대부분이 다 자본, 장치산업 중심으로 되기 때문에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업종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노란봉투법에 대한 해당 대상은 제조업, 노동집약적인 산업인데 우리나라가 조선업이 아직까지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많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김영진 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 세계 13위 정도 되는 GDP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노동조합이 파업을 했다고 해서 노동조합 위원장과 개인에게 400억씩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세계에서 이런 나라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게 노란봉투법의 핵심.

두 번째는 너무 많은 다단계, 1차·2차·3차·4차 하청에 의해서 사실은 자본의 이익을 위해서 노동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일감이 많을 때는 쓰고 일감이 없을 때는 1차·2차·3차 하청기업에게 일감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노는 거지요. 그 핵심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문제를, 그 문제 속에서 구체적인 직접적인 지휘관계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 해당 노동조합과 그 기업의 일하는 사람들이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가장 합리적인 수준의 노사관계 절차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두 가지가 이번 노란봉투법과 노사관계법의 핵심인데 충분하게 이 정도를

유지하더라도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잃거나 해외투자를 막는 그런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 돼요.

저는 주 5일제, 최저임금제를 도입한다고 할 때 대기업과 모든 사업가 측, 자본 측에서 나라 경제 망한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망했나요? 주 5일제 도입하고 주 40시간 노동제 도입하고 최저임금제를 통해서 인간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급여를 주면서 혁신을 통해서 사실 우리 경제가 발전해 오면서 GDP 13위 국가가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 그런 문제를 과도하게 공격하는 소재로 사용하면 안 된다, 충분하게 우리 사회의 경제적인 토대와 노사관계의 합리적인 논의 그리고 우리 노동조합이 무지막 지하게 경영 외적인 문제를 가지고, 노동관계의 외적인 문제를 가지고 쟁의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일자리와 임금을 손해 보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은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문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합리적인 상태에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구요.

두 번째는 국세청장에게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이 지난 3, 4년 동안 여러 가지 부동산, 법인세 여러 부분에서 감세를 통해서 사실 되게 재정이 취약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큰 방향으로 보면 그동안의 잘못된 조세 정상화, 그를 통해서 자본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한 양 과제를 잘해 나가는 게 필요한데 청장으로 취임하신 이후에 우리 기업과 개인에 국세행정을 징수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데 현재 현장의 흐름과 내용, 느낌이 어떻습니까, 진행하시면서?

○**국세청장 임광현** 지금 우리나라 재정 상태가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사회에서 국가재정 수요의 원활한 확보는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제 생각에는 담세 여력이 있는 기업들이 조금 더 부담을 해 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영진 위원** 이번에 조세 관련한 여러 가지 증세 논란이 있지만 저는 조세 정상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고 하는 조세 기본원칙을 잘 지키고 담세능력이 있는 기업과 개인이 사회공동체를 위해서 분명히 역할을 하는 것은 타당한 우리 공동체와 민주공화정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원칙대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기재부총리 마지막으로 한말씀 해 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지금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상법 개정 등을 가지고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또 불합리한 점이 저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게 기업들 입장에서는 또 너무 불확실하다고 해서 우려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서로 간에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찾아서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장할 건 보장하고 기업들은 경영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쪽으로 저희들은 콤프러마이즈(compromise)하고 그런 방향에서 좀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수영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영환 위원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김영환 위원 소득분포 자료 할 때 왜 중위소득을 쓰는지 아세요? 왜 평균을 안 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평균 개념을 하면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밑으로 떨어뜨려질 수 있고 또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좀……

○김영환 위원 그게 정규분포가 아니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정규분포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러면 메디안(median)하고 민(mean)하고 거리가 멀겠지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늘 중위소득 기준 발표하지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일지 복지정책의 수혜대상들을 하잖아요. 왜 그러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래서 중위소득이라는 게 그래도 어느 정도 소득이 생활하는 데……

○김영환 위원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중위소득을 쓰는 이유는 상대적 소득을 발견하기 쉽습니다, 평균보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그 중위소득 기준으로 해서 그 분포들을 찾아내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김영환 위원 아까 평균임금 200%는 제가 조세지출 수혜자라고 했을 때 불평등 개선 효과를 보려고 하는 것 아니었어요? 그러면 어떤 자료 써야 됩니까? 평균 써야 합니까? 메디안을 써야 됩니까?

기재부가 윤석열 정부 때 평균임금 200%로 바꿨어요. 그래서 그 기준들을 다시 정상화해라 그래서 소득의 불평등 개선 효과를 조세지출로 어느 정도 개선 효과가 있는지 파악해라 이게 주요 질의 포인트 아니었습니까? 그것 고쳐 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 반드시 고쳐 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김영환 위원 그리고 이 조세지출 수혜자들이 계층별로 어떤 조세지출 수혜를 받는지, 어느 정도 받는지, 그냥 딱 잘라서 중위소득 150%, 평균임금 200% 이런 식으로 딱 잘라 내지 말고 계층별로 조세지출 효과로 소득불평등 개선 효과가 어떻게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해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조세지출 관리제도 세 가지 있습니다. 제가 PPT 띄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세 가지 어느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어요. 첫 번째, 국세감면을 한도 매번 어겼지요, 3년 연속? 그런데 이게 무빙 애버리지(moving average)라 계속 어기면 계속 높아져요,

한도가. 직전 연도 3개년 플러스 0.5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이 높으면 그다음 또 평균이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그것도 또 어기고 그것도 또 어기고.

그래서 조세지출은 실제 잘 보이지가 않아요, 일반 재정지출보다. 그래서 불평등 개선 효과는 재정지출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조세특례평가제도, 300억 이상 예타 하게 돼 있지요, 조세지출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그렇습니다.

○김영환 위원 일반 재정지출과 똑같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김영환 위원 그런데 이번에 세법 개정할 때 예타 한 것들이 있어요, 300억 이상 특례 제도 신규로 도입할 때? 경제·사회적 여건상……

부총리님, 저 보시면 됩니다.

경제·사회적 여건상 국무회의 통과하면 조세지출 면제가 돼요, 예타 면제가. 그런데 재정지출은 사업계획성 적정성 검토라고 해서 예타 면제 되더라도 이에 준하는 계획검토를 해요. 조세지출은 없어요. 제도적 보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리고 예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300억 이상이면.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조세지출 없애고 보조금 정책으로 다 바꿔 버려야지요.

그다음에 의무심층평가 이것 환류 시스템, 제대로 돼 있는 것 없습니다. 조세지출은 여백이에요. 지금 법만 있지 어느 것 하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총리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재명 정부의 조세지출, 재정정책은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결산이잖아요. 결산에 없는 게 있습니다. 뭐가 없어요, 지금? 조세지출 결산서가 없어요. 조세지출예산서는 있는데 조세지출결산서가 없어요. 지금 8월이에요. 그렇지요?

제가 이제까지, 전면에 얘기했던 이런 결산 내용이 있어야 조세지출예산서를 볼 것 아닙니까? 5월이면 종합소득세 신고 다 끝납니다. 국세청장님, 그렇지요?

○국세청장 임광현 예.

○김영환 위원 그러면 6월 정도면 보고서 나올 수 있습니다. 조세지출에도 결산이 있어야지요. 결산이 없으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늘 이렇게 빈 곳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또 이재명 대표 시절에 유일하게 사인한 법안입니다. 그래서 합리적 조정을 통해서라도 조세지출결산서를 꼭 만들자 이렇게 한번 요청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주신 말씀 관련해서 조세지출제도 전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수영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안도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안도걸 위원 부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작년도 결산 관련해서 여쭙게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지고 계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안도걸 위원 그리고 23년도, 작년도 결산할 때 56.4조에 대한 세수결손 대책 가지고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작년 결산의 경우에도 30.8조 원의 세수결손, 국세결손이 생겼거든요. 이것을 정부가 어떻게 메웠는가 봤습니다. 지출삭감한 게 한 절반이 되네요. 15조 되고 또 기금이라든가 여타 다른 재원에서 일종의 돌려막기를 한 게 15조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과 마찬가지로, 그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큰 변화가 없이 정부가 이것을 좀 재량적으로 해결을 한 셈이 된 겁니다. 이게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첫 번째 문제가 뭔가 하니 기금에서 상당히 갖다 썼는데 이게 그냥 공짜가 아닙니다. 이게 다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불가피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공자기금에서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추가로 예수를 받았어요. 2조 5000억 정도 됩니다. 이것 다 이자 추가로 물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공자기금에서 상환기로 한 것 그거를 또 만기 연장을 했네요. 그러면서 추가 이자가 또 266억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가장 많이 정부가 꾀감 빼먹듯이 빼먹었던 것이 바로 외평기금이예요. 외평기금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보니까 공자기금이 외평기금에 예탁해 줘야 될 것 4조를 줄였어요. 그리고 또 당초 계획대로 조기상환 43조 5000억 원 또 했네요. 그래서 외평기금만 본다면 23년, 24년에 물경 67조 4000억 원의 돈을 이만큼을 빼서 일반회계에서 갖다가 끌어 쓴 겁니다.

향후에는 우리가 원-달러, 원화강세도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이 적정한 원화를 가지고 있다가 투입을 하면서 우리 원화를 좀 안정시켜야 되는 이런 것도 있지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 부분 외평기금의 어떤 재원 압박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도까지 갔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 공자기금 예수 원금 만기 연장이라는 약간의 편법을 썼어요. 그래서 공자기금에서 자체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게 20%인데 20% 재량지출 가지고는 돈이 부족해요. 그래서 만기 연장이라는 사실상의 어떤 편법을 좀 써서 주택기금에서 3조 2000, 산재기금에서 1.6조 해 가지고 4조 8000억. 결국에 이거는 20% 행정부의 재량 범위를 넘기 때문에 원래는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 없이 지금 사실상 세수결손책을 마련을 해서 해결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것 물론 부총리께서 하신 일은 아니에요. 지난 정부에서 한 일인데 이렇게 정부가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재량 범위를 사실상 넘었다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이만큼 30조, 31조에 가까운 돈을 국회가 확정을 해 줬는데 국회와 아무 상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한 겁니다.

부총리님 잘 아시겠지만 한 해에 우리가 본예산 조정할 때 5조 삭감해서 한 4조 증액

하고 1조 삭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고작 해서 3개월 동안 국회가 매달려서 한 5조 매 해 예산을 조정하는데 30조에 달하는 대규모 예산을 행정부가 독단적으로 한다 이거는 저는 크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문가이신 부총리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심각성을 인식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수 오차 있잖아요, 일정 규모 이상 대규모 세수결손이 생긴다라고 할 때는 이거는 추경을 해야지요. 세입경정도 하고 그에 따른 세출경정도 해 가지고 국회에 가져와야 되지요. 그래서 국민의 대표기관의 의결을 받아서 이거를 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수 오차가 일정 규모 이상으로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추경 편성 사유로 이거를 잡아넣어서 추경을 하도록 한다 이런 법안을 지금 제출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번에 국정과제에도 반영이 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부총리의 소신을 제가 한번 듣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앞으로 재정 운용에 있어서 귀담아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케이스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고요 혹시나 발생한다면 국회하고 상의해서 국회하고 의논해서 국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도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수영** 안도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대출 위원** 한은 총재님, 지난해 4월 12일인데요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농산물 물가 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걸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기억나시는지 한번 보시지요.

‘중앙은행으로서 제일 곤혹스러운 것은 농산물가격이다. 재정이나 통화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불편한 진실이지만 기후변화로 인해 가격변동이 심할 때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금과 같은 정책을 계속할지 그게 아니면 수입을 통해 해결할지 고민해 봐야 한다. 유통구조를 개선하면 된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기후변화 때문에 생산이 줄면 유통을 아무리 개선해도 해결에 한계가 있다.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점이 어디인지 생각할 시점에 있다’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거든요. 기억나시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박대출 위원** 지금 한미 관세 합의를 보면 결과는 이런 겁니다. 농산물 개방은 어쨌든 정부 주장대로 하면 막은 게 되는데 대신 자동차라든지 이런 관세는 결국 양보한 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은 총재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동차 관세라든지 이런 기타 문제와 농산물 수입 개방의 문제를 선택해야 된다면 지금 현재의 결과가 옳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농산물 개방 문제를 이 기회에 기후변화의 문제, 물가안정의 문제와 겹쳐 가지고 오히려 농산물 개방 쪽으로 좀 더 여유를 뒀더라면 한은 총재가 말씀하신 그 두 가지, 물가안정이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같이 해소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님 지금 질문은 저는 농산물 시장의 구조

개선 이 문제를 관세협상과 짧은 시간 내에 어느 것이 좋으나 이 문제로는 파악하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박대출 위원** 아니요. 제가 말한 것은 선택의 문제가 결국은 될 수밖에 없는데 가격 안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 등으로 봐서 농산물 수입 개방도 오히려 필요하다는 그런 관점의 의견을 지금 제시한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관세협상에서 오히려 이런 문제를 동시에 둘 다 해결할 수 있는 사안도 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어떻게 봐야……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그런 문제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한 것에도 이렇게 계속 수입을 안 할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관세를 할 때 제조업을 더 볼지 농수산을 더 볼지는 이런 선택의 문제고요. 제 생각에는 그런 선택의 문제를 바로 협상할 때는 가장 어려운 문제가 그건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 농산물 중에서도 100% 수입 안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은 식량안보하고도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제가 4월에 얘기한 것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대출 위원**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농산물 시장을 지켰다고 우리는 자화자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자화자찬하기에는 일본에 비해서 너무나 조건이 상대적으로 많이 불리하다, 오히려 가혹하다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한번 던져 보는 겁니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그건 선택의 문제고 시각에 따라서 다른, 서로 답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박대출 위원** 좋습니다. 그 정도로 하지요.

부총리님, 8월 13일 날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재명 대통령이 ‘가을에 한 가마니 수확할 수 있으면 당연히 빌려다가 씨 뿌려야 되는 것’이라는 말씀 하셨거든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박대출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같은 날 국정위에서는 210조 원 조달계획 발표하고 기재부는 내년 예산안 총액으로 역대 최고 27조 원 절감하겠다고 이렇게 됐거든요. 오늘 좌회전 우회전 얘기 많이 나왔는데 대통령은 좌회전하고 국정기획위와 기재부는 우회전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제가 봤을 때는……

○**박대출 위원** 지금 이것 두 개를 보면 빚을 내겠다는 건지 안 내겠다는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국가 운영이나 재정 운영을 성과가 날 분야라면 빚 문제라기보다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고 또 줄일 부분이라면 저희들이 역대 최고로 줄인 것처럼 과감하게 구조조정하고 이게 저는 같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대출 위원 동문서답하시는 거예요. 제가 던지는 질문은 그게 아니에요. 대통령은 빗내자 그리고 국정기획위와 기재부는 빗 안 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성과가 날 분야는 그런 각오로, 하여튼 과감하게 좀 넣자는 말씀이시고요. 또 우리는 저성과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겠다는 이게……

○박대출 위원 빌려다가 하라는…… 빌리는 건 어디에 빌립니까? 빗을 내는 게 빌리는 것 아니에요? 대통령은 빌리자, 빗을 내자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그러니까 빌려서라도 성과 날 분야는 과감히 하자는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대출 위원 지금 서로 엇박자를 내고 있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 문제는 다시 따져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수영 박대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차규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차규근 위원 장관님, 아까 제가 석유화학산업 구조조정 질의를 드렸는데 이어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주질의 때 제가 작년 12월에 윤석열 정부에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이라는 걸 발표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그 내용 한번 읽어 보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차규근 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장관님께서 이런 석유화학산업의 자율적 사업 재편이라든지 R&D 투자 또 그렇게 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한 답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작년 12월 달에 발표한 그 보고서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실무자들이 그 보고서에 근거해서 장관님 예상 질의 답변을 준비한 것 같아요.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고 상당히 좀 피상적이고 미흡합니다.

관련해서 장관님, 석유화학산업 위기가 우리 산업 전체 위기의 시작일 수 있는 다른 원인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기후위기의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철강산업의 경우도 내년 1월부터는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시행되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든 것이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이렇다할 산업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나라 산업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지연된 원인으로 몇 가지 원인이 있겠지요. 정치적 부담 또 이해관계자 간 갈등도 있겠지요. 그런데 저는 오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회안전망이 열악하다는 점입니다. 관련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산업 구조조정은 필연적으로 실업 유발하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차규근 위원 또 해고가 곧 살인인 우리나라에서는 당사자 반발이 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차규근 위원 실제로 우리나라 실업급여만 보면 최대 지급기간이 270일인데 일본은 360일, 독일은 24개월에 달합니다. 또 소위 직업전환을 위해 필요한 직업훈련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LMP)에 대한 지출도 GDP의 0.37%에 불과합니다. 그나마도 직업훈련이나 고용서비스의 비중은 낮습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직접일자리인데요. 구조조정은 이해관계자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그렇습니다.

○차규근 위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에 협력할 수가 어렵지 않을까요, 이렇게 사회안전망이 열악하면? 그런데 지난달에 국회에서 석유화학 구조조정을 위한 산업 재편이라는 토론회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도 노동자들은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한국은행 총재님, 최근 구조조정을 강조하고 계시는데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실업이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주요 원인이라는 데 동의하시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차규근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구조조정이 요원하다, 정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 세 가지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올해 5월 달에 여수 노동자들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합니다. 이분들을 만나셔서 구조조정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듣고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차규근 위원 두 번째로 내년 예산안에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지원 예산이 증액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관련 규제가 본격화할 예정이라 산업 구조조정도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세입 확충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감세는 안 됩니다. 국정기획위의 발표를 보면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이재명 정부는 94조 원의 세입 확충이 필요한 걸로 확인되는데요. 이렇게 구조조정에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특히 노동자들의 삶을 안정시키는 것이 구조조정의 핵심인데요. 이재명 정부에서 어느 정부도 하지 못했던 산업 구조조정의 모범 사례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위원님 말씀 귀담아듣겠습니다. 사실은 어떤 과정이든지 구조조정 과정에서 아마 낙오되는 근로자들 이런 분들의 삶이 그냥 이렇게 위협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특별하게 석유화학 구조조정 과정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말씀하신 만나 보는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누구라도……

○차규근 위원 필요합니다, 장관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규근 위원 적극적으로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구조조정을 하려면 또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출 구조조정도 하고 아낄 부분은 아끼고 해서 그런 노력과 함께 필요하다면 세입 기반 확충 이런 노력도 같이 해서, 재원도 염출해서 슬기로운 구조조정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규근 위원 모범 사례 한번 만들어 봐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위원장대리 박수영 차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기상 위원 부총리님께 경제정책과 관련된 조세정책에 관해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고전 중에 노자의 대직약굴(大直若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큰 곧음은 마치 굽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아래에서 보기에는 좌회전 우회전 빼돌빼돌 보이지만 위에서 거인의 눈으로 보거나 봉황의 눈으로 보면 바른길로 간다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나침반이 정확해야 되잖아요. 나침반이 뭐냐? 우리 헌법에 있습니다. 민주 앤드 공화지요. 민주, 다수의 국민의 의사에 따라서 일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공화입니다. 더불어 잘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더불어 잘사는 것의 핵심은 뭐냐 하면 사회적약자 처우가 개선되는 거예요. 지금 충분히 잘살고 있는 분들은 굳이 관여 안 하셔도 잘삽니다. 일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의 나라에서 저는 우리 기재부가 견지해야 될 나침반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조세정책을 5년 정부가 어떻게 운용할지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뭐냐고 과거에 얘기했을 때 1번이 대통령선거, 2번이 대학입시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는 조세정책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새 정부가 조세를 어떤 원칙에 의해서 5년 동안 부과할 것인지 궁금해하잖아요. 부동산, 금융, 법인, 소득. 자기의 재산권이 보호돼야 되고요. 또 앞으로 5년 동안 사업하거나 장사하거나 주식투자할 때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동시에 재원 조달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큰 원칙과 기조를 국민들께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그 과정에서 국회를 통해서 충분한 의견을 듣겠다라고 선언을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침에 말씀드렸던 PPT인데 이것은 좋은 일자리의 지표인데요, 저는 이것을 바꿔 말하면 좋은 정책의 지표는 이렇습니다. 정책을 결정하는 데 약자가 동등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가가 늘 중요한 기준이고요 그리고 약자가 이런 논의에서 동등하게 존중받는가, 세 번째로 이 정책으로 인하여 약자가 얻을 이익이 무엇인가, 이 관점을 꼭 견지해 주셔야 돼요.

강자들은 내버려둬도 본인의 의사를 국회를 통해서, 다양한 이익단체를 통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구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수많은 관료분들의 재산이나 현재 상황을 보면 강자 쪽에 속하신 분들이고 국회의원 중에 상당수도 그런 쪽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국회의원들은 일선에서 많은 국민들을 만나 뵙고 특히 약자라고 평소에 목소리를 못 내는 분들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세밀한 정책 과정에서는 늘 국회에 찾아오시고 얘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야가 없습니다. 이전 정부는 저희 야당에 대해서 아예 소통을 안 했어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수많은 기재부 고위공무원들 저희 방에 오신 분 거의 없습니다. 저는 그게 이전 대통령의 계엄 사유 중에 경제에 관한 잘못된 관점, 경제에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재부는 그렇게 일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야당 분들 더 자주 만나시고 어떤 정책을 만들어 내실 때 반대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친구는 가까이, 적은 더 가까이’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저는 그럴 때만이 시장과 수많은 경제주체들이 신뢰할 수 있다. 5년의 우리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조세정책을 할 것 같구나. 그러면 나는 내 재산, 부동산, 금융, 상속, 증여 모든 문제에 있어서 예측 가능해야 되잖아요. 한 번 대통령선거에서 이겼다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는?

특히 조세 관련해서는요 조세평등주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조세평등주의, 조세공평주의. 그런데 평등의 핵심은 같은 것은 같게가 아니고요 다른 것은 다르게입니다. 이게 너무 어려운 영역입니다. 다른 것인데 이걸 어떻게 다르게 할 것인가, 누가 결정합니까? 국회에서 결정해야 됩니다. 기재부에서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민주주의적 정의거든요. 민주공화국의 정의는 국회에서 결정해야 됩니다. 그때그때 다수의견에 따라서 다른 것을 어떻게 얼마만큼 다르게 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저는 장관님이 업무현황에 대해서 조세정책 제목만 읽고 말씀이 없으셔서 오늘 하실 수 있는 말씀 좀 해 주시고 적절한 기회 때 꼭 국민들께 설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정부가 항상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국민들 그다음에 국회 또는 이해관계자 다양하게 의견을 들어야 되고요. 또 저희들은 듣는다고 하지만 부족한 게 있는 게 사실이고요. 앞으로도 더 많이 듣고 더 현장에 가서 얘기도 나누고 해서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상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수영** 최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인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인선 위원** 한은 총재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총재님 보시기에는 새 정부 출범에 대한 우리 경제가 기대가 있을 수도 있고 우려가 있을 수도 있는 지금 양날의 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한국은행에서는 대한민국 구조개혁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내셨어요. 구조개혁 의견을 내니까 지난번에 더불어민주당의 웬 위원님께서 오지랖이 넓다고 그야말로 평가절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그런데 구조개혁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구조개혁이 필요한 시점이기는 하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이인선 위원** 그래서 출산율, 고령화 이런 여러 가지로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사실은 구조개혁이 8년 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그때도 다수 의식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때 구조개혁을 했었으면 참 좋은 시기였는데 놓치게 됐고요. 그 구조개혁을 못 하

는 바람에 결국은 소득주도성장이다, 부동산 규제, 검찰개혁, 적폐청산 이렇게 외치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가면서 결국은 정권교체로 이어지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도 걱정은 문제인 정부 시즌2가 되지 않나 다들 염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먼저 총재님께서 그런 구조개혁에 대한 얘기를 하셨으니까 구조개혁이 꼭 필요한데 결국은 제로 베이스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총재님 보시기에 반드시 추진해야 될 구체적인 구조개혁 분야 그다음에 우선순위가 뭐라고 생각하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사실 한국은행이 구조개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모든 걸 다 커버할 수는 없지만 통화정책에 관련된 구조개혁 문제를 다룬 것입니다, 처음에. 저희가 모든 구조, 법적인 문제, 검찰개혁 이런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저희들이 볼 때 저성장 구조로 가고 물가에 영향을 주는 그런 부분을 구조조정 먼저 뭘 할 건가 이런 걸 연구를 주로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은 구조조정을 지금 우리나라 상태는 뭐 하나를 고친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고칠 수 있는 구체적인 안들을 제시하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인선 위원** 그래서 아마 총재님은 고령화사회로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이인선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셔서 부총리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서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부총리님,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 대선후보 시절에 여러 가지로, 혹자로 표현하기에는 우클릭 행보라고는 했지만 그때 2월 달에 현대자동차를 방문해서 가지고요 국내생산을 촉진·지원하는 세제 도입을 하겠다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이인선 위원** 언급하셨고 그걸 대선공약 중의 하나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보니까 이게 위장 우클릭이었나 생각을 할 만큼 최근에 발표된 국정과제 안에도 이런 국내생산 촉진세제에 대한 게 보이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 항목이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큰 카테고리 안에는 보이지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꼭 기업을 위해서는 하겠다고 했고 또 해야 될 부분인데 이게 못 하는 이유가 기업한테 감세를 해 줄 생각이 없다는 걸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아니면 전체적인 부담을 지기 싫어서 시간을 끄는 건지 제가 구분이 잘 안 되고요. 좀 이따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 이게 어느 거라도 아니라면 그러면 부총리님이 생각하는 국내생산 촉진세제에 대한 현재 상황이 뭐고 구상하고 있는 안이 뭐고 필요 예산이 뭐가 얼마 정도가 돼서 지금 고민하고 계신지 추진 일정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저희 의원실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변에 많은 기업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 기다리고 목매는 게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계속 굉장히 친기업 쪽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선 보기에 또 말을 바꾸냐 또 침묵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도입하려고 하려면요 어떤 품목에 대해서 국내에서 생산하도록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도 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 만드는 모든 데 대해서 생산 촉진세제를 하다 보면 그것은 너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문가들하고 협의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연구도 해서 하여튼 그런 게 정리가 되면 정리된 품목부터 저희들이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인선 위원** 그렇게 되는 대로 빨리 조금씩 보여 주셔야 되지 자칫 잘못하면 방치하고 그냥 묵히고 넘어갈 것처럼 자꾸 보이게 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렇지 않습니다.

○**이인선 위원** 그렇지 않도록, 계속 진짜 잘하겠다 하시는데 정말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그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수영** 이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유상범 위원입니다.

부총리님, 아까 제가 정확히 들었는지 의문이 나서 물어보는데요. 국정기획위에서 세입 확충 94조,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116조 마련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세수 확충과 관련해서는 국정기획위와 기재부랑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거나 말을 전해 들은 바는 없다 이렇게 제가 들었는데 정확히 들었는지 일단 궁금해서…… 그건 아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그렇지지는 않고요. 실무적으로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협의가 오면 협의해 봤지만 전체적인 큰, 예를 들자면 세입 확충 94조 그리고 지출 절감이 106조 원입니다. 그리고 민자 10조 원 이렇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정기획위원회로부터 받은 바가 없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런데 가장 핵심 부서인 기재부랑 결국 세입 확충, 지출 구조조정, 민간 기금 재원 마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는 없이 그러면 국정기획위에서 지금 사실상 94조, 116조 그래서 210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일방적으로 결정이 된 거네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일방적이라기보다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유상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재위에서 그 액수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핵심 주무 부서와는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된 게 없이 결정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실무적으로는 저희들 정보도 제공하고 자료를 주고 지원했습니다.

○**유상범 위원** 필요한 자료를 지원하고 하는 거지 실무자가 액수를 정하고 그러지는 않는 거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유상범 위원 그래서 제가 더 의아하고 이게 과연 가능한 계획을 말한 것이냐. 그냥 대국민에게 그 내용만 말하고 실제로 그 안에 있는 제일 중요한 디테일의 부분은 아예 공개도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기재부도 전혀 지금 전체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도 모르는……

○유상범 위원 모른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유상범 위원 그러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과연 이 계획에 따라서 실행하는 부서는 기재부가 중심에서 할 텐데 그 계획을 제대로 실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큰 의문이 들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저희들은 하여튼 이걸 실행하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노력을 하는데 가장 큰 노력이 아까 모 위원님 말씀하신 것, 성장 베이스를 키워 가지고 세수가 늘어나는 쪽에 가장 중점을 두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기타 세외수입도 늘릴 수 있으면 늘리고 그런 식으로……

○유상범 위원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장 베이스라는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거니까……

○유상범 위원 아까 한은 총재께서도 말씀하셨고 우리가 지금 성장 베이스로 세수 확충이 과연 가능한지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실행이 안 된다면 결국은 비과세, 감면 등의 결국은 세수 증대를 통해서 재정 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밖에 나올 수 없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도 모자라면 그러면 결국은 다시 국채 발행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문제가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출 구조조정 어떤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보니까 기재부에서도 2026년에는 구조조정 대상 1만 7000여 개 사업 중에서 25% 그리고 1300 사업 폐지해서 27조를 마련한다 이게 아마 지출 구조조정의 한 모습으로 기재부가 준비해서 같이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만 가지고는 당연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산술적으로 1년에 필요한 예산이 42조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유상범 위원 그러면 결국은 나머지 예산 중에서 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성장을 통한 세수 확충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봐서는 올해도 더 힘들어질 거고 내년도 힘들어진다면 결국은 세금 증액을 통한 세수 확보 목표를 달성할 수밖에 없고 그게 안 되면 그러면 뭐겠습니까? 국채 발행이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국가적 5개년 계획을 마련하는데 기재부가 이런 과정에 전혀 사실상 실무적으로 지원만 했지 관여를 안 했다 하는 것은 이 계획이 과연 얼마나 실현 가능성 있느냐. 우리가 말하잖아요, 디테일은 악마에게 있다.

여기에 보면 세목, 우대 유형, 수혜 집단 그리고 폐지 축소를 어떻게 하는 방식, 연도별 반영 시차 이런 게 전혀 확정이 안 돼 있다면 기재부가 이걸 어떻게 실행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실무적으로 지원만 했지 기재부가 전체 그림에 전

혀 관여를 제대로 안 했다면 이것 큰 문제 아닌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어쨌거나 하여튼 저희들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거의 소요를 충당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렵지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고 최대한 성장을 높여서 제가 진짜 한번 나서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도 또 부족하다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그것은 최종적으로 하고 하여튼 자체적인 노력 그다음에 세입 기반 확충 이 두 가지에 제가 집중해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유상범 위원 지켜는 보는데 결국은 세금 증액과 국채 발행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우려를 알고 제가 최대한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수영 유상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소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제가 어제 사보임을 해 가지고 자료 요청이나 이런 걸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궁금했던 사항을 아까부터 질문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저는 평소에 정말 많이 했던 생각이 부동산 자산을 취득하는 데는 왜 이렇게 특별한 배려가 많은가 이런 생각을 여러 번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어느 분한테든 물어보고 싶었던 부분인데 제가 제일 이상하게 느꼈던 거는요 주택을 산다고 하면 초장기 대출을 해 주잖아요. 이번에 6·27 대책에서 주담대 기간을 원래 최대 50년에서 지금 30년으로 축소한 거지요, 이번 대책에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이소영 위원 그런데 6·27 대책 이전에는 34세 이하는 50년 대출이 가능했고 그 외에는 30년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이소영 위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34세인 분이 50년짜리 대출을 받으면 84세까지 대출을 갚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통 70대, 80대에 상환 자력이 있다고 우리가 보지는 않지요. 그리고 50년 후에 그 담보인 주택의 가치가 얼마일지도 알 수 없는 거지요.

30년짜리 대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긴 초장기 대출인데 30대 청년한테 30년 대출을 해 준다, 그거는 그래도 뭐 60세 안팎에 상환이 마무리되니까 그럴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59세인 분이 계시다, 그런데 그분의 향후 예상 소득기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대출 시점의 소득을 기준으로 30년 상환기간인 대출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상환 만료가 89세 때 도래를 하는 거지요.

이거는 우리가 너무 익숙한 일이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상 매매차익을 염두에 둔 레버리지 투자자금을 대 주는 거랑 큰 차이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만약에 그렇게 해 주는 경우는 무주택자라든지…… 1주택을 들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혜택은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집 가지는 게 열망 아닙니까? 태어나서 그래서 아마……

○이소영 위원 그래서 한번 끝까지 들어 보श्य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이소영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요새 주담대 금리가 정확히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주택 구입에는 굉장히 저금리 주담대가 제공이 되지요.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은 심지어 소득공제가 됩니다. 세금을 깎아 주지요.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주택을 딱 10년 거주하고 팔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됩니다. 몇 퍼센트인지 아시나요? 10년에 80%.

그런데 사실 장특공제라는 게 장기보유하면 예쁘다고 착하다고 이렇게 세금 깎아 주는 제도가 아니라 물가에 과세하지 말라는 취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10년이 지났는데 물가가 그동안 올라서 자연스럽게 오른 가격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양도세를 부과하지는 않겠다는 취지인 건데 과거에 고물가 시대 때야 그때는 15년, 20년 이렇게 거주를 해야 장특공제 그 정도 해 줬는데요. 그러면 그때는 물가상승률의 그래도 얼추 비슷한 정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사실 물가상승률이 최근 몇 년 제외하고 1%, 2% 그런데 10년 거주했다고 세금에서 80%를 빼 주는 거지요.

그래서 요약하면 사실은 굉장한 초장기 대출에 저금리 제공에 이자 세금 공제, 물가상승에 비해서 매우 과도한 양도차익 공제 이 정도면 사실은 부동산을 어떻게든 꼭 마련하라고, 사라고 권장하는 거나 다름없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집을 안 사면 나만 어리석은 것 같고 사회적 독려와 응원에 힘입어서 수중에 자금이 별로 없더라도 수억 원짜리 몇십 년 상환할 대출을 받아서 주택담보대출의 노예가 되고 집값은 오르는 거지요. 그런데 반면에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지요. 만약에 아파트에 버금가는 엄청난 우량 주식을 자산 담보로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약한 대접을 받지요.

그리고 주택으로 번 돈은 1주택이기만 하면, 그 1주택이라는 조건만 갖추면 주거의 부수에서 형성된 국민의 기본 자산이라고 사람들이 보는 것 같은데 주식시장이나 자본시장에서 주식시장에 혜택을 좀 준다고 하면 마치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투기세력을 지원하는 것인양 보는 시선이 저는 아직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지금 열심히 노동하고 그 소득으로 성실하게 적금 불입하다가 아파트 청약 받아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사회는 아니게 됐거든요. 단적으로 저희 부모님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하시던 고도성장기에는 연이율 20%짜리 특례 적금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사실 수익률 5%짜리 안전한 금융상품 찾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요. 부동산 가격도 지난달 기

준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이 14억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높은 주택가격 앞에서 아직 자산 형성을 못한 젊은 세대들은 자산 형성도 해야 되고 노후 대비도 직접 해야 되고 월급 때 가지고 코인이나 주식 심지어는 레버리지 파생상품 같은 고위험 자산에까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람들이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투기세력이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 사회 노동자들이고 청년들이다라는 점을 우리가 기재위에서라도 좀 공유하고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택, 집에 대한 것은 한국의 어떤 독특한 저는 이것 뭐 문화라고 해야 될지 하여튼 주택을, 내 집을 가지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 열망 그래서 아까 34세 이하 청년들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정부가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50년 이렇게 금리도 저리로 해 주고 뭐 이런 식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는 점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거나 앞으로 지금 환경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부에 들어서는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 쪽으로 돌려서 국민의 자산 형성을 좀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방향으로 전환을 유도하는데 결국은 기업의 경쟁력이 있어야지만 국민들의 자산을 금융시장으로 유도해 놓고, 이게 나중에 경쟁력이 없어가지고 더 떨어지면 진짜 큰일 날 문제라고 이런 인식을 가지고 기업의 어떤 생산성 제고라든지 경쟁력 제고를 통해서 안전하게 투자한 게 나중에 자산 형성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하는 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하여튼 그런 쪽으로 좀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수영** 이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태호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태호 위원 제가 볼 때는 차가 왼쪽 깜빡이도 있고 오른쪽 깜빡이도 있는데 두 개를 같이 봐야지 제대로 차가 가지 자꾸 한쪽만 강조하다 보면 균형을 잃는 것 같아요.

지금 코스피는 거래세가 제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농특세만 있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러니까 농특세 0.15 빼고 거래세는 안 매기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원래 얼마였어요? 몇 프로였지요? 0.1%였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0.23까지 있다가 조금씩 내려가서 0.1%……

○정태호 위원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제로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제가 말한 0.23은 두 개 합쳐서……

○정태호 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농특세 빼고 거래로 인한 세금은 안 매기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대주주 양도세, 원래 이게 3억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돼 있었던 거지요? 원래 스케줄상으로 그랬었잖아요. 50억, 10억 그다음에 3억까지 2022년도인가 23년도에 3억까지 내리기로 돼 있었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실제 내리지는 않고 결국에는 10억으로 멈췄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스케줄을 잡고 있었지요. 이거를 내리는 계획을 세울 때 취지는 자본시장에 대한 공정한 과세였지요. 그 목적이었잖아요. 그런데 금투세가 도입이 되지요. 금투세가 도입이 되니까 양도소득세하고 거래세를 다 금투세로 통합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금투세를 안 하기로 했으면 원래대로 가는 게 맞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거를 정상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왜 지금 이 오해를 받고 있냐? 기재부가 금투세 도입을 취소할 때는 원래대로 갔으면, 선언을 했으면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새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원래대로 가니까, 정상화를 하니까 이 논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재부가 자업자득인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이 시점에서 그거를 정상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자신 있게 설명하실 필요가 있는데 내가 보니까 기재부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서 제가 이 역사를 일부러 설명을 해 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한국은행 총재님, 가계부채가 내수와 성장을 누르는 임계점에 도달했다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정태호 위원** 지금 우리 가계부채가 GDP 대비 한 95% 정도 되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90% 정도까지 내려왔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런가요? 많이 줄어들이기는 했지만 이게 몇 프로 정도까지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답은 없는데 국제 비교를 하면 한 80% 정도 이상이면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크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한 8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정태호 위원** 일단은 연구 결과로 보면 한 80% 정도가 정상적이다 아니면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러면 일단은 정책적으로 보면 가계부채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가져가야 되는 거는 분명하겠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그렇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러면 어떤 수단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가계의 문제라기보다는 같이 넓게 생각해 되는 게 은행의 대출에 지금 현재 반 정도가 부동산으로 가고 부동산이 아까 존경하는 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다 부채로, 가계대출로 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은행 자금의 흐름을 바꾼다는 얘기인데 기업 쪽으로 자금이 더 가도록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주고 규제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금융위랑 같이 고민하고 있는 거는 은행들의 자산의 집중도를 좀 보고 너무 부동산에 집중도가 크면 좀 위험 가중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인센티브를 가계부채에서부터 기업부채로 좀 더 가는 그런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 보고 있습니다.

○**정태호 위원** 이번에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중요한 쟁점이었고 최근에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취임하실 때도 가계부채 문제를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기재부 입장에서 그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결국은 가계부채 해결하는 방법은 가계에 좋은 일자리를 많이 제공해 줘 가지고 소득을 늘려 가지고 가계부채를 줄여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고는 가계부채를 줄일 방법이 가계에서는 먹고살아야 되니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경제를 그냥 일반적인 기업이 아니고 진짜 특별한 기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다 이게 맞물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태호 위원** 그런데 뭐 여하튼 기업경제를 잘 살려서 소득을 늘려서 가는 것도 큰 일이지만 그거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이 저는 제도적으로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위원장대리 박수영** 정태호 간사님 1분 더 드리세요.

○**정태호 위원** 부동산으로 가는 대출 부분에 대해서 위험가중치를 높인다든가, 대출에 있어서, 그다음에 이걸 좀 생산적으로 돈을, 방향을 바꾸려면 예를 들어서 벤처기업 같은 경우가 지금 위험가중치가 400%인가 된다면서요. 이런 거를 좀 가중치를 낮춘다든가 이런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자본비율이라고 그러던가요? 이런 거에 좀 변화를 줄 수가 있으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BIS 비율 같은 경우.

○**정태호 위원**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한 20초 남았는데 아까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지금 청년 고용에 대해서 쉬었다라는 사람이 42만 명인데 2016년도 기준으로 보면 약 거의 2배 정도가 늘어요. 이거는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업무보고 중에 그 대책으로 제시를 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분들을 보면 뭐랄까 설득력이 좀 떨어져요. 청년 고용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한번 더 대책을 고민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청년들이 좋은 대학을 나와도 좋은 일자리를 찾기 어렵고요. 이게 진짜 구조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구조가 지금 이 청년들이 갈 만한 또 좋은 일자리가 없다는 그런 문제고요.

두 번째는 기업 입장에서는 청년들이 기업에서 써먹을 수 있는 실력, 교육이 안 된다 하는 양면이 다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거나 하여튼 좀 기업을 이 글로벌에서 성장할 수 있는 진짜 초대형 아이템을 통해서 한번 키워 보자.

그리고 청년들을 교육을 대대적으로 좀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AI를 활용한, AI 툴을 활용해서 중소기업에 가더라도 중소기업의 AI 대전환, 대기업에 가면 대기업의 AI 대전환이 각종 생산성을 좀 높일 수 있으면 노동생산성도 올라가고 자본생산성도 올라가고 또 기술도 증가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지금 저는 쓰고 있고요. 아마 조만간 발표할 건데 그게 일일이 우리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안 나타나서 좀 그런 면은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수영 정태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석으로 좀 이동해 주시지요. 제가 질의할 차례입니다.

(박수영 간사, 정태호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정태호 그러면 존경하는 박수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수영 위원 부총리님, 민생지원금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박수영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민생지원금을 많이 지급을 했는데, 그 소비쿠폰도 지급하고 했는데 국가 예산만 쓴 게 아니고 지방비도 다 썼거든요. 그게 돈 없다고 하면서 빚내 가지고 소비쿠폰을 지금 표에 보시는 것처럼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국비가 8조, 지방비는 1.1조가 현재 든 상황이고요. 언론이나 기재부는 자꾸 국비만 얘기하는데 지방비가 든 겁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천차만별이라서요.

○박수영 위원 전체 평균 내면 한 43% 되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한 40% 됩니다.

○박수영 위원 톱3가 있는데 서울·경기·세종 이걸 제외하고 나면 35%밖에 안 돼요, 재정자립도가. 즉 지자체가 돈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연도 중에 이렇게 소비쿠폰을 뿌리고 민생지원금을 주면서 지방정부를 매칭시키면 지방정부는 대책이 없는 겁니다, 대책이.

그래서 한번 보시면 서울이 얼마를 매칭해야 되냐면 3744억 원을 매칭해야 되는데 지금 연도 중에 없어요, 이 돈이. 세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전체를 지방채로 발행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좀 그나마 사정 좋은 부산의 경우에도 보면 245억 원은 통합관리기금에서 빠져 쓸 수 있도록 기재부가 지침 바꿔 줘서 썼는데 겨우 돈이 245억밖에 없으니까 일반회계 진출은 그것만 하고 나머지 400억 원은 결국 또 지방채를 발행하게 된 겁니다. 즉 지금 우리가 민생지원금 하면서 국채가 늘어났다 이것 걱정 계속하고 있었는데 지방정부의 지방채도 계속 늘어나는 형태로 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를 무시하는 거다, 어떻게 보면 위헌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자기가 결정해서 자기가 하도록 해야지 중앙에서 결정하고 이만큼은 너희들 내라 이런 식으로 명령하듯이 된 겁니다. 늘 이런 식으로 해 왔고 익숙해졌지만 부총리님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지방정부의 자율성, 지방자치단체의 정신, 헌법에 규정돼 있는데 이걸 살려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박수영 위원 그다음에 비용 지출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뿌리는 데 행정비용이 총 550억여 원이나 들었다고 합니다. 지역화폐 발행해야 되고 선불카드 발행, 인건비, 장비임차료, 홍보비, 전담 콜센터 그다음에 시스템 개발 이런 것까지 해서 돈이 550억이나 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실제 행정비용은 550억 플러스알파일 겁니다. 사실은 나머지 인건비들이 또 있으니까요.

이렇게 지역화폐 발행하고 민생지원금 주는 것 자체가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재정승수가 0.33밖에 안 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하면서 또 추가적인 행정비용도 드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인지 정말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용산에서 원한다 하더라도 부총리가 우리 경제 책임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지자체에 부담 주는 것, 이렇게 과도한 비용까지 뿌려 가면서 재정승수 낮은 사업에 써야 되는 것인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한 것들이 또 소비쿠폰 깡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소비쿠폰 깡을 하고 있는데 이걸 또 단속하느라고 부대비용 이것도 계산 안 된 비용이지만 이것 단속하라고 지시가 내려갔고 그 지시에 따라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는 또 인력을 배치해서 이걸 단속해야 되는 겁니다. 지방자치체를 아주 말살하려고 작정한 것 아니면 이런 식으로 지방에 돈도 부담시키고 인건비도 부담시키고 인력도 다른 일을 하던 사람 빼서 시키고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민생지원금 주면서 우리가 국민 일인당 실제 부담금 제가 계산을 한 건데 3년물 5년물 30년물을 현재 비율로 발행을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국채를 발행하면 민생지원금 15만~55만 원을 받게 되는데 일인당 부담액은 원금이 아니라 3년 뒤 5년 뒤 30년 뒤에 갚을 때 이자까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인구로 나누면 일인당 부담액이 64만 원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즉 상위 10%는 15만 원 받고 64만 원을 부담하게 되는 형태가 지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저는 마땅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민생지원금 같은 재정승수 낮은 사업에는 유의해서 부총리님이 결심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사실은 이번에 우리가 정부에서 한 민생지원금은…… 진짜 지역에 저도 가 보니까 지역은 서울하고 다르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특히 군 단위로 갈수록 너무 어려운 국민들이 그나마 진짜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도록 하는, 진짜 우선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분야 SOC 투자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또 이게 회의만 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고 이분들이 SOC 투자한다고 해서 혜택을 못 받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진짜 어려운 이런 경제 상황 속에서 진짜 어려운 국민들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는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대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제도개선이나 여러 가지 과학적인 시스템을 도입해서 비용도 줄이고 이런 식으로 통해서 쓸데없는 비용은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하여튼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여러 가지를 봐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영 위원** 지자체 부분 답변 안 하셨는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지자체 부분도 사실은 이번에 서울에 하면서 지방에 좀 쓰려고 했는데 서울시장이 우리가 부담했기 때문에 지방에 안 된다 하기 때문에 사실은 중앙 돈을 보태서 그 지방에 더 준 걸로 보면 또 지역에서는 내가 돈 내는 것은 조

금 내지만 중앙에서 받아서 우리 지역을 살린다 이렇게 보면 위원님, 또 다른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정태호 질의가 모두 다 끝났는데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대출 위원 저는 1분만 시간을 주세요, 확인 좀 할 게 있어요.

○위원장대리 정태호 그러면 박대출 위원님부터……

○이소영 위원 저는 2분만 주세요.

○위원장대리 정태호 그러면 박대출 위원님, 김영환 위원님, 이소영 위원님, 차규근 위원님, 안도걸 위원님 이렇게 할게요.

가능한 한 시간을 줄여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대출 위원 저는 1분 안으로 끝내요.

오늘 하루 종일 좌회전 우회전 타령인데, 경제부총리가 오늘 국회에 와 가지고 계속 우회전했는데 또 대통령실에서 좌회전 깜빡이를 켜어요. 그래서 확인해 볼게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오늘 기사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재원 마련을 위한 국채 발행 가능성에 대해서 국채 발행이 아니면 무슨 돈으로 추가적인 재정지출을 하겠냐, 국채 발행은 사실상 정해져 있는 답이다,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추가 국채 발행은 불가피하다는 얘기가.

또 지금 우회전 깜빡이 켜거든요. 뭐가 맞습니까? 좌회전 깜빡이인가요, 이것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취지를.

○박대출 위원 그러면 지금 기재부, 경제부총리의 입장은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이, 국채 발행 없이 가능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데 가장 먼저 하는 게 지출 구조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경제 베이스를 키워서 세입을 확충하고 그래도 불가피한 경우라면 어쩔 수 없이 또 필요한 경우는 기타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박대출 위원 기타 다른 방법이 뭔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다른 방법이 국채 발행도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대출 위원 깜빡이를 맞추네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아니요. 최후적으로 또 그렇게 하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박대출 위원 그런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태호 고맙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김영환 위원 부총리님, 해마다 국채 발행 안 한 적은 없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럼요. 최근에 와서는……

○김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본질의를 못 해서, 결산이니까, 그때 24년도 국채 발행의 순발행 계획이 49.9조.

그런데 이게 적자성채무 중에 일반회계 보전성 적자성채무가 있는데 이게 96.6조예요. 어떻게 조달합니까? 다 조달해야지.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23년도 경제성장률 1.4%, 24년도 2.0%, 비상계엄 내란사태 때문에 0.8%까지…… 금융위기 수준이 0.8% 아닙니까? 한국은행 총재님, 금융위기 때가 딱 0.8%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2009년인 것 같습니다.

○**김영환 위원** 2009년인가요, 그다음 해 그 수준이잖아요. 정부가 나서서 살려야지요, 국민들. 기업들 살려야지요. 이제까지 조세지출하면서 이게 투자나 일자리로 선순환됐다는 증거가 있나요? 조세지출만 지금 78조예요, 25년도분이. 23년도에 56.4조, 24년도에 30.8조 세수 핑크 났잖아요. 그것 어디서 메꾸요?

메꾼 것들 제가 24년도 얘기해 드릴게요. 외평기금 일단 예탁 규모 축소했지요, 4조. 공적상환기금, 갚아야 되는데 1.5조 안 갚았잖아요. 그렇지요? 다 돌려막기 했잖아요. 24년도 윤석열 정부 세수 핑크로 인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다음 주택도시기금 1.1조, 예수원금 만기 연장했잖아요.

그리고 산업재해, 요새 산업재해 얼마나 심각하게 지금 얘기되고 있습니까? 그것 만기 연장했어요. 이자 공자기금에서 얼마 줘요? 2%, 한 3% 아닙니까? 1.5조를 운용수익률로 돌리면 12%까지 나온 적이 있습니다. 23년도에 12%, 24년도에 9% 이상 나왔습니다, 운용수익률이. 아니, 이게 산재보험료잖아요.

국가재정법 13조 한번 읽어 드릴까요?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특별회계 및 기금은 제외한다’, 건들지 말라는 겁니다. 이 속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13조에? 산업재해보상기금이 있어요, 산재기금이요. 그것 계속 강압적으로 지금 만기 연장한 거지 않습니까? 이것 세수 핑크 메꾸려고 한 거잖아요.

그다음 국유재산관리기금. 주택도시기금, 서민주택용이잖아요. 이것 추가 회수 받았어요, 공자기금에서. 이런 일들이 23년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4년도 계속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요, 이제. 세입 정정 10.2조 했지요? 그런데 아직도 저는 의심스러워요. 6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니까 아직도 14조 정도 덜 건힐 것 같아요. 또 하방 리스크도 크고 이것 나중에 이 여파가 돌려막기의 하나의 재료로 쓰이지 않을지 저는 걱정이 많이 돼요. 파탄 난 재정이에요, 사실은. 그 위기 속에서 지금 출범한 것 아닙니까? 이것을 왜 이렇게……

국채를 발행해야지요. 건져야지요. 기업들 살리고 서민들 살려야지요. 지금 어려운 자영업자들은 자살 문턱에 다가가 있는 것 아닙니까, 부채 때문에? 그것 살리려고 소비쿠폰 한 거고 그래서 내수 조금 트인 거고 소비 지금 살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7년 이상 장기채권 5000만 원 이하, 113만 4000명 구했지 않습니까? 얼마로? 4000억으로 구한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 이런 것 써야 되지 않아요? 국민들 살리는 데 재정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확하게 기재부장관님이 그런 것은 제대로 말씀을 하셨

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우리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서 돈을 아끼자 하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분들 살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런 데 발생된 국가채무라든지 적자는 우리가 진짜 기업을 제대로 키워 가지고 여기서 난 돈으로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저는 그겁니다. 어차피 대한민국 국민이 한국에서 태어나서 진짜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또 국가로서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면에서는 역할도 하면서 또 다른 경제 이쪽의 경쟁력을 키워서 듀얼로 가서 결국은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하자고 하는 게 제가 추진해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뚜벅뚜벅 걸어갈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영 위원님.

○**이소영 위원** 부총리님, 죄송한데요. 대한민국 최고 경제 관료시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최고는 아닙니다.

○**이소영 위원** 최고시지요. 그런데 코스피에 거래세가 부과되는지 아닌지 질문에 왜 직접 답변을 못 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아니, 0.15 농특세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이소영 위원** 아까 뒤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던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아닙니다. 제가 0.15라고 했습니다.

○**이소영 위원** 거래세라고 하면 보통명사지요, 거래에 연동해서 내는 세금. 우리나라에 두 종류가 있지요, 농특세와 증권거래세. 지금 현재 기준으로 코스피에는 농특세가 부과되고 코스닥에는 증권거래세가 적용이 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똑같습니다, 0.15.

○**이소영 위원** 세율도 동일하고 부과 대상도 동일하고 징수 방식도 동일합니다.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동일한데 걷은 정부 입장에서 쓰는 용도가 다른 거지요. 그래서 이 정도를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하신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아니, 제가 아까 농특세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소영 위원** 아까부터 제가 자본시장 활성화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기업경쟁력을 높여야 된다 그 말씀 계속 반복해서 답변을 주시는데 질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 못 하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실적 좋고 자산이 많은 기업들도 저평가되어 있는 게 일단은 문제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현금 100원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시가총액 전체가 20원밖에 안 되는 게 문제라고 그걸 바로잡아야 된다고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해 주시고.

물론 경제부총리께서 관장하시는 영역이 너무나 넓고 무슨 하나하나 시장의 개별적인 정책까지 다 아실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지금 관세나 통상 문제 때문에 너무나 짊어 없으시겠지만 이 문제 해결되고 나면 자본시장 정책에 대해서도 조금 자세하게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이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태호 수고하셨습니다.

차규근 위원님 질의 있겠습니까.

○차규근 위원 장관님, 우리나라 법인세 납부 1위가 어디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옛날에는 모 대기업이었습니다. 삼성 이랬는데……

○차규근 위원 그랬는데 올해 4월 달에 언론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최근에는 또 달라졌습니다.

○차규근 위원 어디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한국은행 아닌가요?

○차규근 위원 그렇습니다.

일반 국민들 상식하고 많이 동떨어져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차규근 위원 한국은행이 놀랍게도 법인세 1위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기재부 입장에서는 한국은행이 내는 법인세가 국세 수입으로 이렇게 딱하니 잡히니까 참 좋기는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총재님, 한은에서는 한은법에 따라 순이익금에서 법정적립금 빼고 모두 정부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차규근 위원 법에 따라서 처리하면 되는데 왜 또 이렇게 따로 법인 세금까지 내고 있는 거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그 문제가 이전부터 계속 문제가 돼 가지고 지금 국세청이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게 되면 지금 내는 세금 저희가 용도로 하는 것하고 용도가 달리 취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규근 위원 일반 상식으로는 선뜻 이해가 잘 안 되는……

또 하나가 국세청장님, 게다가 또 한국은행 세무조사도 하시지요?

○국세청장 임광현 예.

○차규근 위원 한국은행이 세무조사 받는다는 것도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한국은행이 돈 떼먹을 일은 없지 않습니까?

○국세청장 임광현 그렇습니다.

○차규근 위원 총재님, 세무조사 나오면 대응하신다고 로펌 선임해서 대응하고 계시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그렇습니다.

○차규근 위원 몇천만 원씩 들어가고 있지요? 일반인들, 우리 국민들 상식으로는 이런 시스템이 맞는 것인가? 한국은행이 법인세를 내고 세무조사를 받고 세무조사 대응에 로펌에 수천만 원씩 내고 있다? 우리가 한번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불합리한 문제도 바로잡지 않으면서 금융감독 체계 개편 논의, 이런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어폐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 바로잡는 법 개정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총재님께서 한번 잘 검토해서 의견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관님, 청장님, 같이 한번 이 부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세청장 임광현 예, 알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차규근 위원 아까 총재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과거 정부에서 한국은행에 이것저것 참견하던 유산에 불과한 면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한번 나중에 법안 발의되면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도걸 위원님.

○안도걸 위원 한은 총재님께 여쭙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8월 28일 날 또 금통위 열리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예.

○안도걸 위원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도 금리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좀 뜨겁더라고요. 그런데 통상 한은에서 기준금리 조정을 할 때 물가, 고용지표도 봅니다만 가장 핵심적으로 보는 어떤 단기 지표가 미국의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대미 환율이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국내 가계대출, 부동산 시장가격, 이 네 가지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9월 달 Fed에서 하는데 대부분이 지금 빅컷 또는 울트라컷까지도 생각을 하더라고요. 베센트 장관 같은 경우에는 ‘중간선거 직전까지 한 1.75%p 정도 더 인하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지금 공언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대미 환율을 보면 우리가 지금 약간 등락은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1300원 후반대에서 그래도 안정을 좀 취하고 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타결을 한 이후에는 그야말로 약달러 기조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대세가 아닌가 싶거든요. 또 그리고 국내 외환시장 보면 외국인 투자자금도 지금은 순유입세를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가계대출을 보면 여하튼 정부가 단속을 하기 시작하면서 7월 가계대출 증가폭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 물론 주담대는 떨어지고 있는데 신용대출은 조금 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부동산시장인데 6·27 대책의 파장이 어느 정도냐라는 건 약간 이견이 있습니다마는 8월 첫째 주 조금 올라갔다가 다시 또 떨어졌거든요. 떨어지고 지금 중요한 게 거래량인데 거래량은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지금 축소가 된 상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금융과 외환시장 쪽으로 보면 기준금리 인하 여건이 어느 정도 조성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부총리님께서 지금 노심초사하고 있는 경기회복 그리고 신성장동력을 위한 어떤 기업 투자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기준금리의 어떤 추가 인하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대목이 아닌가 싶은데 이에 대해서 총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주십시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금통위가 열흘밖에 안 남아 있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모든 이슈들을 아마 금통위 위원들과 다 상의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적당한 답을 못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일영 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하여 조승래 위원님, 김태년 위원님, 차규근 위원님, 이인선 위원님, 박성훈 위원님, 이소영 위원님, 박민규 위원님, 천하람 위원님, 정일영 위원님, 김영진 위원님, 최기상 위원님, 권영세 위원님, 박대출 위원님, 김영환 위원님, 임이자 위원님, 최은석 위원님, 정태호 위원 등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셨습니다.

해당 소관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서면질의 및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한 각 기관 관계자 여러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2분 산회)

○출석 위원(23인)

권영세 김영진 김영환 김태년 박대출 박민규 박성훈 박수영 박홍근 안도걸
오기형 유상범 윤영석 이소영 이인선 임이자 정일영 정태호 조승래 차규근
천하람 최기상 최은석

○청가 위원(3인)

안규백 정성호 진성준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전문위원 정지은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기획재정부
부총리겸장관 구윤철
제1차관 이형일
제2차관 임기근
차관보 윤인대
국제경제관리관 최지영
재정관리관 안상열
기획조정실장 김진명
세제실장 박금철
경제구조개혁국장 주환욱
미래전략국장 유수영

국고국장 황순관
 국제금융국장 김재환
 대외경제국장 민경설
 사회예산심의관 박준호
 조세총괄정책관 조만희

국세청

청장 임광현
 차장 최재봉
 기획조정관 김재웅
 징세법무국장 안덕수
 자산과세국장 박종희

관세청

청장 이명구
 기획조정관 이진희
 통관국장 김정

조달청

청장 백승보
 차장직무대리 이형식
 공정조달국장 전태원
 시설사업국장 권혁재

통계청

청장 안형준
 차장직무대리 이명호
 기획조정관직무대리 이진석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부총재 유상대
 부총재보 김웅
 부총재보 채병득
 부총재보 권민수
 부총재보 박종우
 금융결제국장 이병목

【보고사항】

○위원 개선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윤호중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2025. 8. 18.

○의안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5. 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7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5. 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7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5. 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5.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8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5.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82)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5. 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5. 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95)

이상 7건 8월 6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6. 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18)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6. 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6. 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26)

이상 3건 8월 7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7. 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7. 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31)

이상 2건 8월 8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8. 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8. 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5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8. 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63)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8. 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6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8. 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8. 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6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8. 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8.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78)

이상 8건 8월 11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1. 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1. 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93)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1. 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99)

이상 3건 8월 12일 회부됨

조세법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2. 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1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2. 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2. 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2. 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3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2. 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2. 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42)

이상 6건 8월 13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3. 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3. 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5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3.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3.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3. 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63)

이상 5건 8월 14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4. 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4. 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4. 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9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4.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98)

이상 4건 8월 18일 회부됨

○행정입법 제출

구분	행정입법명	공포번호	개정형태	소관부처
대통령령	청년 등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일부개정	법제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개정	기획재정부